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

OECD 사회 지표



이 보고서의 원본은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다. 여기에 표현된 견해와 채택된 논의가 OECD 또는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 인터넷 주소로 확인이 가능하다.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soc_glance-2011-en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되었다. OECD는 이들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 국제법에 의한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지역의 지위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갖고 있지 않다.

Photo credits: Cover: © iStockphoto/naphtalina
Chapter 4: © Stockbyte/Getty Images
Chapter 5: © Maria Taglienti-Molinari/Brand X/Corbis
Chapter 6: © Matthieu Spohn/PhotoAlto Agency RF Collections/Getty Images
Chapter 7: © Helen King/Corbis
Chapter 8: © Daniel Boiteau/Fotolia.com
Corrigenda to OECD publications may be found on line at: www.oecd.org/publishing/corrigenda.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 OECD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panorama de la société 2011: Les indicateurs sociaux de l'OCDE)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OECD에서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OECD에 있다. 본 한국어판은 파리의 OECD와 계약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저작권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에 있다. 한국어 번역의 품질 및 원본과의 일치 여부는 OECD한국센터의 책임하에 있다.

한국어판 서문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지표를 찾아서

OECD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OECD의 이러한 노력은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Society At a Glance 2011’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2001년 발간 이래 최초로 회원국과 주요 신흥국가들의 시간사용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차원에서 과거부터 관심을 갖던 유급근로시간 뿐 아니라, 무급근로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측정과 비교를 시도하여, 이제 경제활동의 목적이 인간의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통합 관련 지표를 대폭 보강하여, 사회의 신뢰수준, 부패수준, 투표율 등 그 사회의 결속 정도를 볼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여 비교하였습니다.

OECD의 지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판에서 각국의 시간 사용 등의 비교를 통하여 경제성위주의 기존 지표에 대한 반성과 보다 적합한 지표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정책과 관심을 아시아 태평양지역 비회원국과 공유하고자 설립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는 OECD의 주요 정책과 자료를 한국어판으로 발간하여, 보다 많은 독자들이 OECD 국가들의 관심사와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왔습니다. 이번 한국어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OECD 지표를 통한 단순 비교를 넘어서,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지표를 고민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원합니다.

‘Society At a Glance 2011’ 한국어판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고은경연구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감수를 맡아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박사님께서 자리를 통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6월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곽 속 영**

서문

이 보고서는 OECD가 2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사회적 지표 개요인 한 눈에 보는 사회 (Society at a Glance)의 여섯번째 판이다. 앞서 나온 보고서들처럼 이번 보고서도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적 웰빙과 트렌드에 관한 정량적 증거 요구가 커짐에 따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앞서 다섯 개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일부 지표들을 업데이트하고 몇 가지 새로운 지표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에서는 신규 OECD 회원국인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4개국은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에 처음 포함되었다.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연방, 남아공 자료도 가능한 경우 별도로 포함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급노동에 대해 한 장을 따로 할애하였다. (제1장) 또한 독자들이 OECD 사회 지표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와 (제2장) 주요 트렌드에 대한 요약(제3장)을 싣고 있다. 그리고 각 지표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표를 비롯해 각 사회 지표에 관한 좀더 상세한 정보는 OECD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

이 보고서는 Simon Chapple과 Maxime Ladaique가 작성했다. 그리고 Nabil Ali, Michael De Looper, Michael Förster, Pauline Fron, Herwig Immervoll, Gaetan Lafortune, Thomas Liebig, Pascal Marianna, Verle Miranda (1장~3장), Marlène Mohier, Dominique Paturot, Andrew Reilly, Dominic Richardson, Kim Robin, Olivier Thévenon가 귀중한 도움을 주었다. Monika Queisser OECD 사회정책 국장이 보고서 작성을 감독했다.

목 차

약어 및 일반 기호	7
제1장. 요리와 돌봄, 만들기과 수리하기:	
세계 무급노동 현황	9
무급노동과 웰빙	10
무급노동이란 무엇인가?	10
무급노동의 측정	11
OECD 국가 및 신흥국가의 시간사용 실태	12
남성과 여성간 차이	13
무급노동의 유형	17
무급노동의 가치환산	24
결론	24
주석	26
참고문헌	26
제2장. OECD 사회적 지표 해석	29
한 눈에 보는 사회의 목적	30
OECD 사회적 지표의 구조	30
지표의 선택 및 설명	31
본 간행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	35
주석	36
참고문헌	36
제3장. 한 눈에 보는 사회: 개요	37
제4장. 일반 지표	41
1. 가구소득	42
2. 출산율	44
3. 이민자	46
4. 가족구성	48
5. 노인 부양비율	50
제5장. 자활 지표	53
1. 고용	54
2. 실업	56
3. 교육성과	58
4. 연금수급가능기간	60
5. 교육비 지출	62

제6장. 형평성 지표	65
1. 소득불평등	66
2. 빈곤	68
3. 생계곤란	70
4. 저소득탈피에 필요한 소득	72
5. 공공사회지출	74
제7장. 보건 지표	77
1. 기대수명	78
2. 영아사망률	80
3. 긍정적/부정적 경험	82
4. 수질/공기질	84
5. 보건지출	86
제8장. 사회통합지표	89
1. 타인에 대한 신뢰	90
2.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92
3. 친/반사회적 행동	94
4. 투표율	96
5. 수용성	98

This book has...



Look for the StatLinks at the bottom right-hand corner of the tables or graphs in this book. To download the matching Excel® spreadsheet, just type the link into your Internet browser, starting with the <http://dx.doi.org> prefix.

If you're reading the PDF e-book edition, and your PC is connected to the Internet, simply click on the link. You'll find StatLinks appearing in more OECD books.

약어 및 일반기호

OECD 회원국 ISO 코드

호주	AUS	일본	JPN
오스트리아	AUT	한국	KOR
벨기에	BEL	룩셈부르크	LUX
캐나다	CAN	멕시코	MEX
칠레	CHL	네덜란드	NLD
체코	CZE	뉴질랜드	NZL
덴마크	DNK	노르웨이	NOR
에스토니아	EST	폴란드	POL
핀란드	FIN	포르투갈	PRT
프랑스	FRA	슬로바키아	SVK
독일	DEU	슬로베니아	SVN
그리스	GRC	스페인	ESP
헝가리	HUN	스웨덴	SWE
아이슬란드	ISL	스위스	CHE
아일랜드	IRL	터키	TUR
이스라엘	ISR	영국	GBR
이탈리아	ITA	미국	USA

기타 주요 경제국 ISO 코드

브라질	BRA	인도네시아	IDN
중국	CHN	러시아연방	RUS
인도	IND	남아공	ZAF

관례적 표시

.. 자료없음.

(↘) 국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림차순으로 열거할 때 범례에 표시.

(↗) 국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열거할 때 범례에 표시.

제 1 장

요리와 돌봄, 만들기과 수리하기: 세계 무급노동 현황¹

무급 노동과 웰빙

가정에서는 요리와 청소, 가족 돌보기 등 생산적인 활동에 상당 시간을 무급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무급 노동은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소비를 증가시키고 드러나지 않는 소득을 구성한다. (Becker, 1965)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음식, 의복, 가구 구성원 돌보기 등 가정 내의 생산 중 많은 부분이 시장으로 이전되었고 구매가 가능해졌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웰빙이 일인당 총소득 또는 생산(예: 1인당 GDP)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웰빙의 변화는 일인당 총소득 또는 생산의 증가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급 노동의 양이 상당하다고 본다면 웰빙의 수준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GDP 증가가 무급 노동의 감소와 유급 노동의 증가에 의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라면 웰빙 증가량(well-being gains)은 과다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Stiglitz et al., 2009).

가정에서의 생산활동(home production)을 간과하면 소득 불평등과 빈곤율 등이 왜곡될 수 있다(Abraham and Mackie, 2005).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사람이 가정 내에서 요리와 청소, 자녀 돌보기를 하는 가정이 있고, 이 가정과 소득과 일하는 시간이 동일한 또 다른 가정이 있어서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청소와 육아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자의 가정이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갖게 될 것이다. 표준 소득 중심의 생활수준 상으로는 이 두 가정이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Frazis and Stewart (2010)에 따르면 무급노동은 유급노동에 비해 가정 별 차이가 훨씬 덜하기 때문에 가족 생산 가치(valuation of family production)를 포함한 불평등 측정값(inequality measure)은 훨씬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사람들은 가정 내 무급 노동 외에도 친지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중요한 무급 노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웃 돕기나 모든 연령의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돌보기, 자선행사 지원, 이민자 돕기, 스포츠 팀 훈련, 학교 운영 등의 자원봉사 역시 사회적 웰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 장에서는 26개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디아, 남아공에서 실시된 상세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를 활용하여 중요한 웰빙 지표로서 무급노동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무급노동이란 무엇인가?

무급노동은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족 구성원이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무급 노동은 요리, 정원손질, 집안 청소처럼 가족 내에서 소비된다. 하지만 무급 노동 상품이 가정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 소비될 수도 있는데 놀러 온 친구를 위해 요리를 한다든지 연로한 친척을 위해 잔디를 깎거나 동네 어린이 축구팀 코치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이 그 예가 된다.

무급노동과 레저 간의 경계는 “제3자” 기준을 사용해 판단한다. 만일 제3자가 그 활동을 돈을 받고 수행할 수 있다면 그 활동은 노동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요리, 청소, 육아, 세탁, 개 산책시키기, 정원손질 등은 모두 무급노동에 해당한다. 반면 영화를 보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다른 이들을 위해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은 그 활동이 고용인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 사람(제3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수행할 수 없는 활동에 해당한다.

(Ironmonger, 1996) 그러므로 후자의 활동은 레저로 간주한다.

아이와 놀기, 개 산책시키기, 정원손질 같은 일부 무급노동은 즐거운 활동인 경우가 종종 있다. (다양한 활동의 즐거움에 관한 보고서는 Society at a Glance 2009 참조) 이러한 형태의 만족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는 이득이다. 그러므로 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즐거움은 노동과 레저를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Hill, 1979).

무급노동의 측정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에서는 주로 24시간 다이어리를 사용해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록하게 한다. 또한 활동의 맥락 -어디에서 하는지, 누구와 하는지, 동시에 어떤 다른 활동을 하는지, 활동의 빈도수는 어떠한지-에 관한 정보와, 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국가별로 비교할 때에는 자료의 취합 방법, 다이어리의 시간 구분 방식, 다이어리 기록일 수 등의 요소가 비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iranda, 2011) 이상적으로는 생활시간 조사를 1년에 걸쳐 수행함으로써 공휴일, 휴가기간뿐 아니라 주중과 주말에 대해 대표성 있는 비율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계절적 왜곡 등을 피하기 위해 공휴일이나 휴가 등은 피해서 해당 연도 혹은 해당 주간의 특정 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남아공이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이들 9개 국가의 경우 휴가 기간을 배제했기 때문에 연간 유급 근로 시간이 과다 계산되고 무급 노동과 레저 시간은 과소 계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간소화된 생활시간조사 다이어리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 대한 생활시간 측정은 다른 나라보다 정밀도가 훨씬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인터뷰 이전 7일간의 시간사용실태를 질문했다.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간과 인터뷰가 실시된 시간 간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응답의 정확성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생활시간조사가 서로 다른 연도에 실시되었고 조사 당시 각 국가가 처한 경제 주기도 달랐으며 사용 기술의 수준도 달랐기 때문에 이들 요소도 국가간 차이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국가별 비교성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는 가능한 한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대상으로 했다. 활동은 다섯 개 카테고리로 분류했는데 1) 무급 노동 2) 유급노동이나 학습 3) 개인관리 4) 레저 5) 기타 시간 사용 등이었다. “무급노동”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사노동(예: 요리, 청소, 정원손질), 아이나 그 외 가구 구성원, 비 가구 구성원 돌보기, 자원봉사, 쇼핑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유급노동이나 학습”은 전일제, 시간제 일자리,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농사일 등을 무급으로 수행하는 경우, 직장에서의 휴식시간, 구직시간, 교육, 과제 등을 포함한다. “개인관리”는 잠자고 먹고 마시는 시간, 기타 가정, 의료, 개인 서비스 (위생, 가꾸기, 병원 방문 등) 등을 포함한다. “레저”는 취미, TV 시청, 컴퓨터 사용, 스포츠, 가족, 친구들과의 사교, 문화생활 등등을 말한다. “기타”는 종교활동과 시민으로서의 의무수행, 그리고 불특정 시간 사용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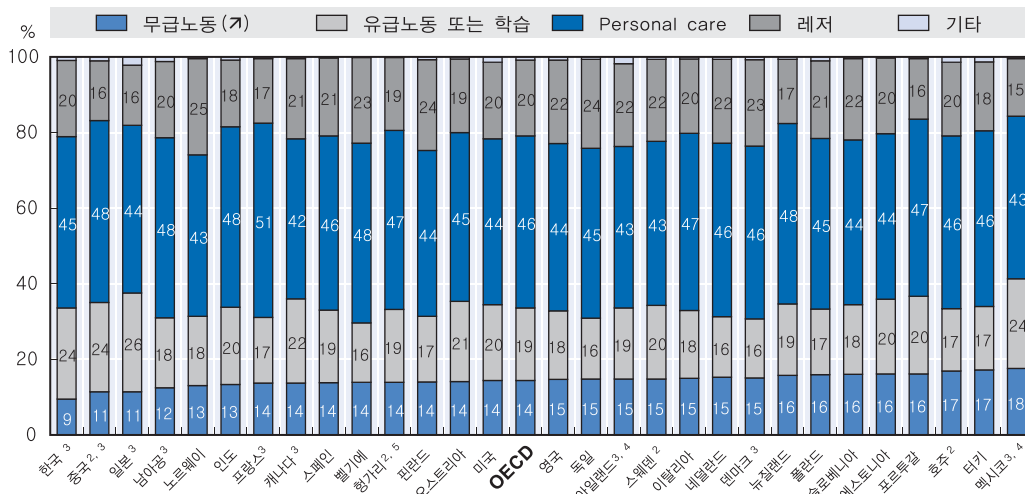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파생활동으로 취급하며 이동에 연관된 활동과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물론 엄격히 말해서 이동은 누군가를 고용해서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무급노동의 제3자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한번 이동 시 여러 곳의 목적지가 존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퇴근길에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이동시간은 생활시간 조사에서는 목적지에 따라 달리 기록한다. 예를 들어 집에서 직장까지 운전하고 가는 경우라면 이동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노동에 관련한 이동으로 보고, 직장에서 학교로 이동했다면 육아 관련 이

동, 학교에서 슈퍼마켓으로 이동해갔다면 쇼핑 관련 이동,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갔다면 쇼핑 관련 이동으로 기록한다.

OECD 국가 및 신흥국가의 시간사용 실태

자료가 나와있는 29개 국가의 경우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OECD 평균값은 도표에 나와 있는 국가들의 평균값이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사람들은 하루(24시간)에 3.4시간, 즉 14%를 무급노동에 사용하고 있다. (그림 1.1) 무급노동에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무급노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나라는 멕시코로 하루에 4.5시간을 기록했다. 일본, 한국, 중국은 무급노동시간이 가장 짧아 멕시코의 절반에 불과했다. 모든 국가에서 수면과 식사를 포함한 개인관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중 46%였다. 나머지 시간은 레저(총 시간 중 20%), 유급 고용 또는 학습 (평균 19%)에 사용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 미만의 시간을 종교활동 및 기타 불특정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1.1. 총 시간의 10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 무급노동에 사용
1998년~2009년까지 15세~64세 인구의 총 사용시간 중 주요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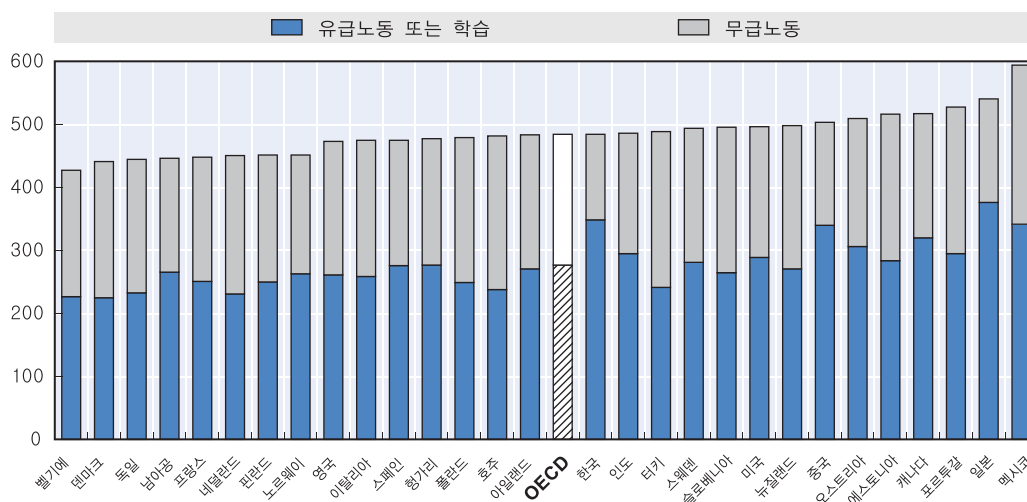
- 호주: 2006; 오스트리아: 2008-09; 벨기에: 2005; 캐나다: 2005; 중국: 2008; 덴마크: 2001; 에스토니아: 1999-2000; 핀란드: 1999-2000; 프랑스: 1998-99; 독일: 2001-02; 헝가리: 1999-2000; 인도: 1999; 이탈리아: 2002-03; 아일랜드: 2005; 일본: 2006; 한국: 2009; 멕시코: 2009; 네덜란드: 2006; 뉴질랜드: 1998-99; 노르웨이: 2000-01; 폴란드: 2003-04; 포르투갈: 1999; 슬로베니아: 2000-01; 남아공: 2000; 스페인: 2002-03; 스웨덴: 2000-01; 터키: 2006; 영국: 2000-01; 미국: 2008.
- 대상 인구연령을 15-64세로 제한하는 게 불가능한 나라들이 많았다. 연령은 호주 15+; 중국 15-74; 헝가리 15-74; 스웨덴 20-64였다. 연령 상한선을 달리 둔다 해도 시간사용에 큰 영향을 미칠 확률은 낮다. 연령 하한선은 무급노동의 중요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남아공의 생활시간조사는 1년을 온전히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휴일은 덜 반영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말에 무급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휴일을 배제하게 되면 유급노동은 과다 계산되고 무급노동과 레저는 과소 계산된다.
-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간소화된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인터뷰 이전 7일간의 시간 사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일랜드와 멕시코 데이터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 헝가리의 경우 사전 준비된 표만 나와있고 카테고리도 다른 국가에 사용된 것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헝가리를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출처: 국가별 생활시간조사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437>

무급이건 유급이건 사람들은 총 시간의 3분의 1 정도는 노동에 사용한다. 총 노동시간은 서유럽과 남아공이 가장 짧았으며 일본과 멕시코가 가장 길었다.(그림 1.2) 일본과 멕시코의 경우 사람들은 하루에 각각 9시간과 10시간을 노동에 보내고 있었다. 벨기에와 덴마크, 독일, 남아공은 하루에 각각 7.5시간을 노동에 소요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급 노동시간이 무급노동시간을 초과했는데 호주와 터키만 예외였다. 자료에 나타난 평균 유급노동시간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수치가 주중, 주말, 휴일을 포함한 것이며 직장이 있는 사람들과 무직자를 포함한 평균값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림 1.2. 총 노동시간은 서유럽에서 가장 짧고 유럽 외 지역에서 가장 길게 나타났다.
하루 중 무, 유급 노동에 소요한 총 시간(분)



주: 무, 유급노동에 관련된 이동시간은 각각의 카테고리에 포함. 국가별 주석은 그림 1.1 참조.

출처: 국가별 생활시간조사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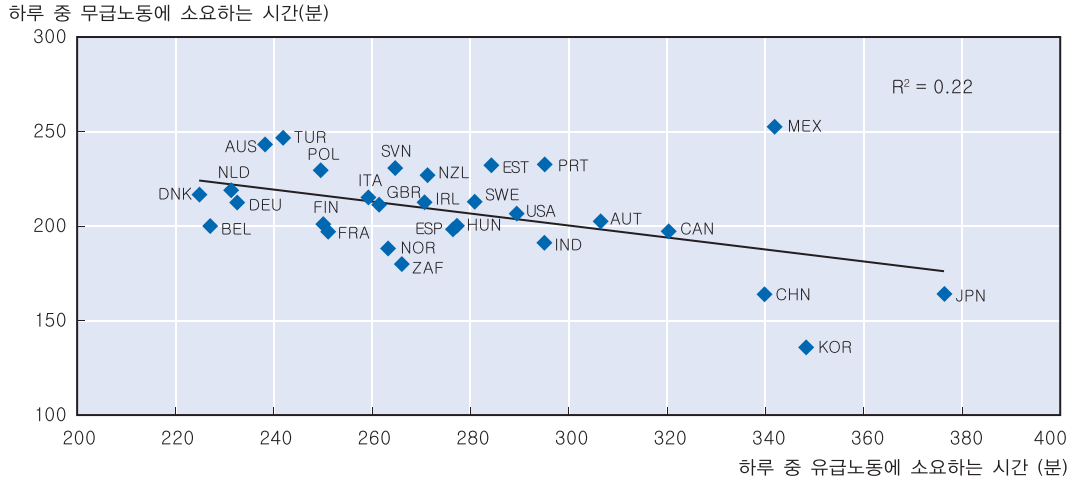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456>

중국, 일본, 한국처럼 유급근로시간이 긴 국가의 경우 무급노동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와 터키는 반대였다(그림 1.3). 무급노동과 유급노동간의 이러한 관계는 무, 유급 노동시간과 비교해 차이가 크진 않지만 총 노동시간의 국가별 차이에도 나타나 있다.

남성과 여성간 차이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무급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림 1.4) 성별에 따른 격차는 평균적으로 하루 2.5시간이었지만 국가별로는 차이가 컸다. 예를 들어 터키와 멕시코, 인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무급노동에 4.3-5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국가의 경우 격차가 1시간을 약간 넘는 정도였다. 인도와 멕시코의 남녀간 격차는 여성이 주방일과 육아에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생했다. 남부유럽, 한국, 일본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무급노동에 소요하고 있었다.

그림 1.3. 유급노동과 무급노동간 균형
무, 유급 노동에 소요하는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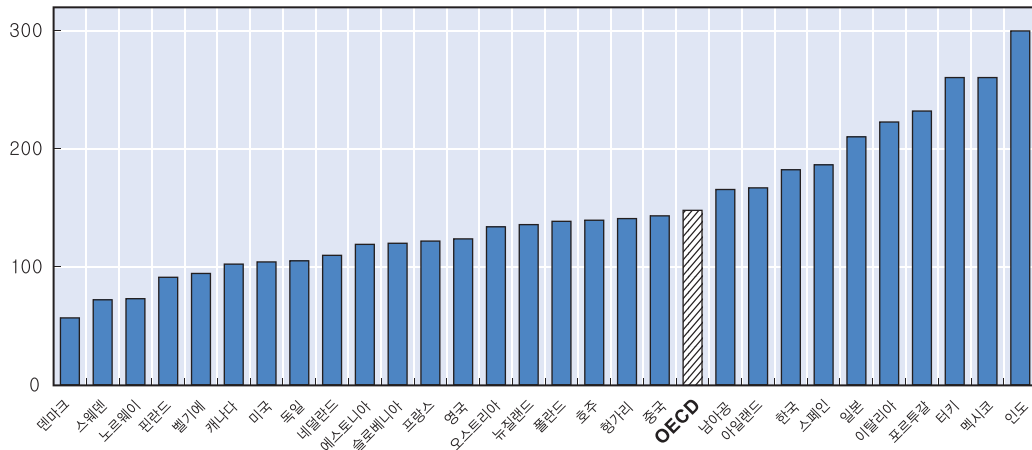


주: 무, 유급노동에 관련된 이동시간은 각각의 카테고리에 포함. 국가별 주석은 그림 1.1 참조

출처: 국가별 생활시간조사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475>

그림 1.4.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무급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루 중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 수행시간(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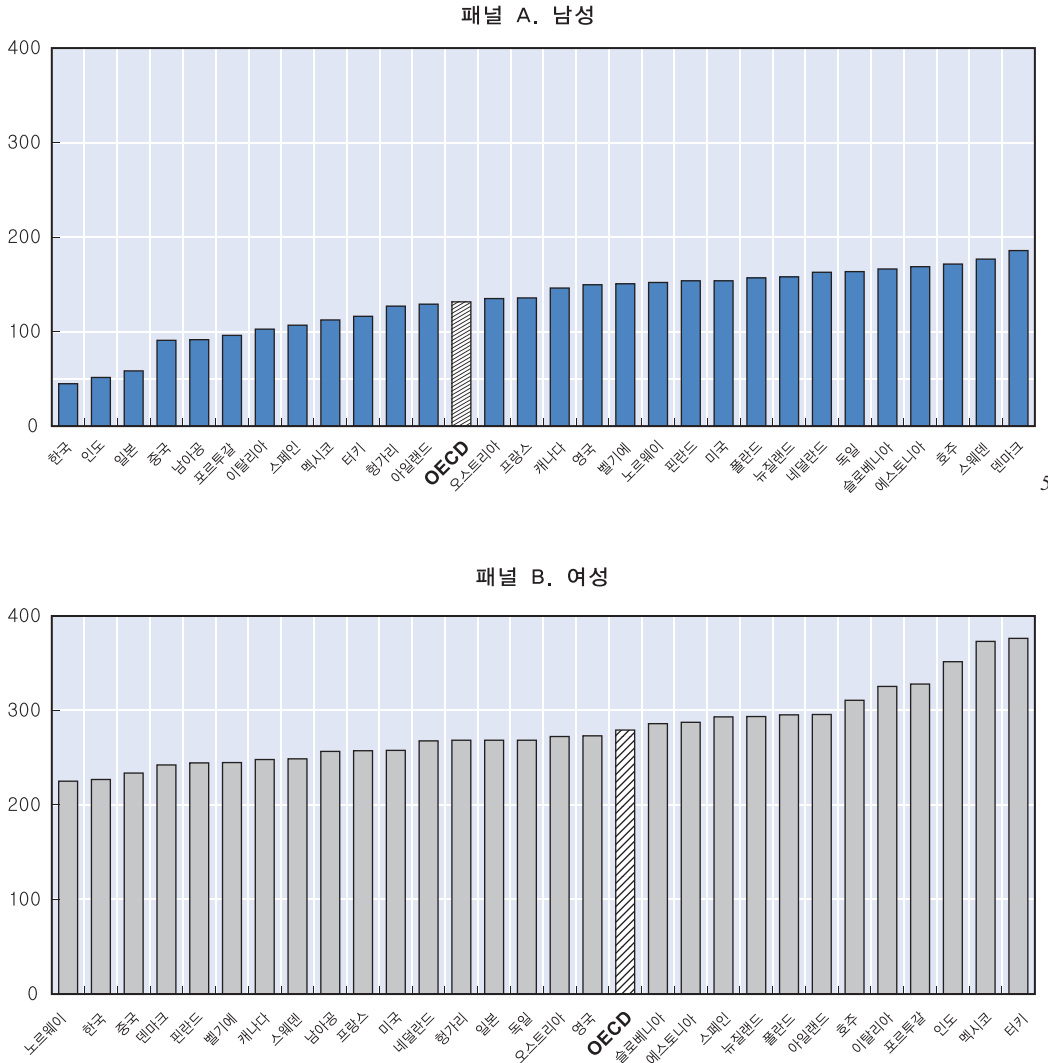
주: 국가별 주석은 그림 1.1 참조

출처: 국가별 생활시간조사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494>

무급노동시간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국가들은 남성들이 비교적 적은 시간을 무급노동에 할애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그림 1.5, 패널 A)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한국과 인도, 일본에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시간 미만이었으며 중국과 남아공에서는 1.5시간, 터키와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거의 두 시간, 여기 있는 나머지 국가에서는 2.5시간이었다.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적다고 반드시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림 1.5, 패널B)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남녀 모두 다른 국가에 비해 무급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매우 적었다. 반면 호주의 경우는 남녀 모두 무급노동시간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5. 아시아 남성이 무급노동에 가장 적은 시간을, 멕시코와 터키 여성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하루 중 무급노동에 소요하는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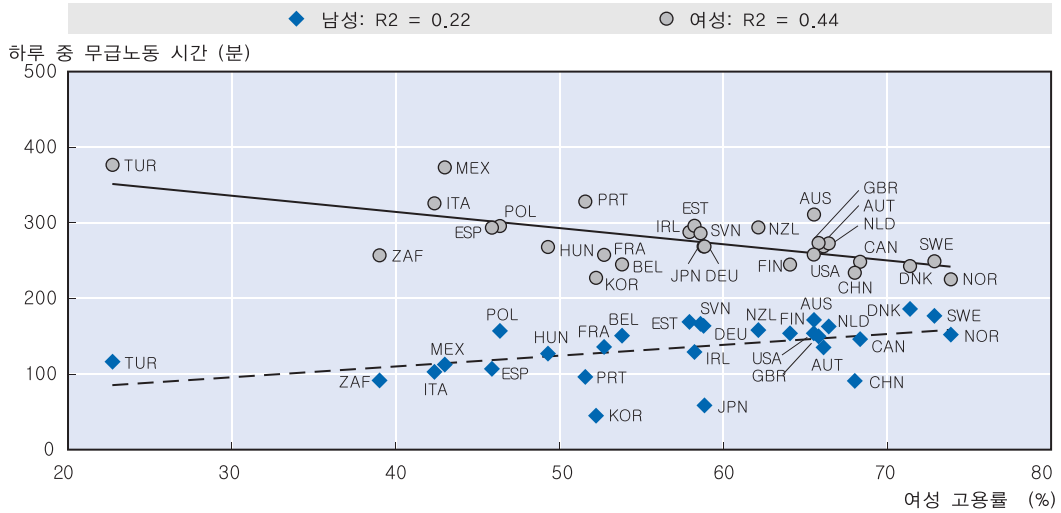
주: 국가별 주석은 그림 1.1 참조

출처: 국가별 생활시간조사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513>

무급노동의 남녀간 격차를 크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 유급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활동은 늘어났으며 이들의 무급노동시간은 줄어들었다. 한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들의 평균 무급노동시간은 크게 반비례한다. (그림 1.6) 한 국가의 여성고용률과 남성의 평균 무급노동시간 간의 정비례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의 줄어든 무급노동 중 일부를 남성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의 무급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덴마크-에서조차 남성은 여성보다 적은 시간을 무급노동에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무급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노르웨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1.6. 여성들이 유급노동을 더하고 무급노동을 덜하면서 남성들이 무급노동을 더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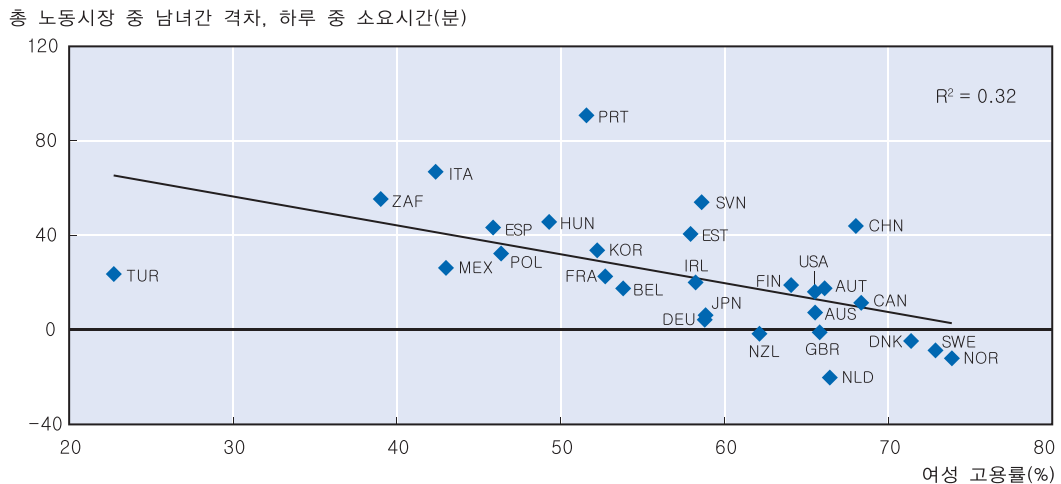


주: 여성고용률은 15-64세 인구에 대한 것이며 생활시간조사가 수행된 연도에 한한 것이다. 국가별 주석은 그림 1.1 참조.
출처: 국가별 생활시간조사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와 여성고용률에 대한 OECD 노동력 조사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532>

여성의 무급노동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유급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남성보다 짧기 때문이다.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총 노동시간-이동시간을 포함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합-의 남녀간 차이는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0에 가깝거나 0 이하이다. 여성들이 가사일과 돌보기에 소요하는 많은 시간은 짧은 유급노동시간으로 만회된다. 호주,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 여성들의 40%이상이 시간제로 일하는 국가의 경우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유급 일자리가 흔하다. (OECD, 2007)

그림 1.4. 여성 유급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총 노동시간 중 성별에 따른 격차가 훨씬 덜하다.



주: 여성고용률은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생활시간조사가 수행된 연도에 한한 것이다. 국가별 주석은 그림 1.1 참조.

출처: 국가별 생활시간조사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와 여성고용률에 대한 OECD 노동력 조사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551>

시간제 일자리가 비교적 적은 국가, 특히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녀의 존재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주요 원인이다(Lewis et al., 2008). 이들 국가들은 또한 여성들의 합계 노동시간이 훨씬 긴 국가들이기도 하다. (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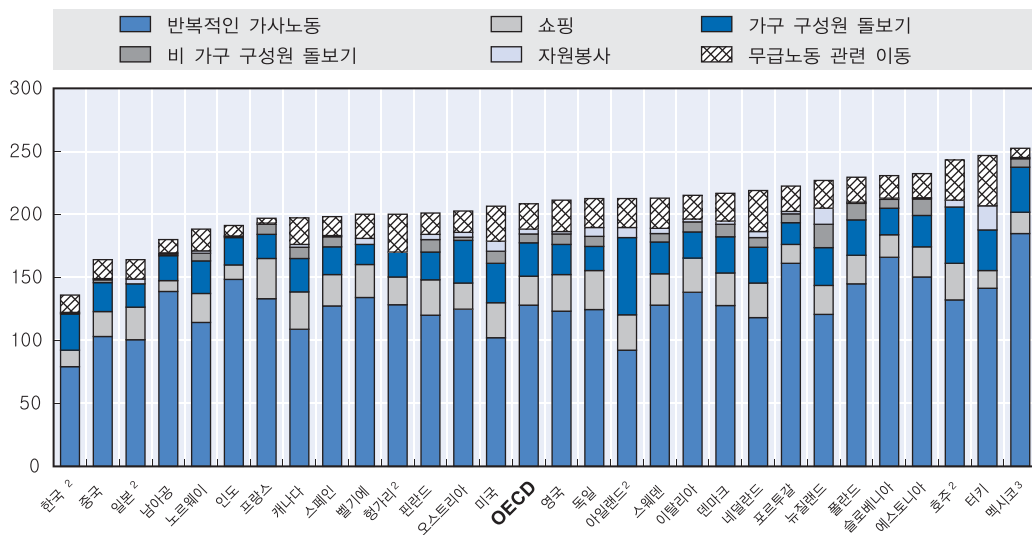
노동시간 규제, 가족 정책, 양성평등 정책 등 정부 정책은 무급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aker, 1997; Gornick and Meyers, 2003; and Hook, 2006)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서비스가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이들이 유급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긴 육아휴직제도를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면서 전통적 성 역할이 강화되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잔류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양도 불가한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은 부부간의 좀더 동등한 휴직 기회를 증가시키지만 지금까지는 가사일의 분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나와 있지 않다. (OECD, 2011)

무급노동의 유형

반복적인 가사노동

대부분의 무급노동은 반복적인 가사노동-요리, 청소, 정원손질, 집 수리 등-이다. OECD 29개국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8분을 가사노동에 쓰고 있었다. (그림 1.8) 그러나 전체시간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총 무급노동 중 반복적인 가사일이 갖는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하루에 1.4시간만을 가사노동에 쓰지만 이것이 무급노동에 소요하는 총 시간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평균 2시간 이상을 가사노동에 쓰지만 이것은 호주인들의 총 무급노동시간 중 절반에 불과하다. 다른 유형의 무급노동에 비하면 가사노동은 국가간 차이가 덜한 편이다. (변이계수 0.17)

그림 1.5. 반복적인 가사일이 무급노동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¹
 주요 카테고리 별 하루에 무급노동에 소비하는 시간(분)



1. 추가적인 국가별 주석은 그림 1.1 참조
2. 호주와 헝가리, 아일랜드의 경우 가구 구성원 돌보기를 비 가구 구성원 돌보기에서 분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가구 구성원 돌보기와 비 가구 구성원 돌보기 간에 구분이 없다. 대신 가족 돌보기와 타인 돌보기의 구분만 있다. 그러므로 가족 돌보기는 그 가족이 가구 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 구성원 돌보기 범주에 포함시킨다.
3. 멕시코의 경우 이동시간은 육아 관련 이동을 제외하고 그 이동이 관련된 활동에서 분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하위 카테고리는 약간 과다 추정되었다.

출처: 각국의 생활시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570>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급노동 카테고리는 가구 구성원 돌보기와 쇼핑인데 각각 하루 평균 26분과 23분을 차지한다. 두 카테고리의 중요성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쇼핑(변이계수 0.26)이 돌보기(변이계수 0.34)보다 국가간 차이가 덜하다. 국가별 차이가 가장 큰 카테고리는 자원봉사(변이계수 1.10)였는데 하루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인도와 한국의 1분 미만부터 아일랜드와 미국의 8분까지 다양했다.

육아

육아는 다른 활동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아이가 다른 방에서 놀고 있는 동안 요리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주요” 활동(“뭘 하고 있었습니까?”)과 “부차적” 활동 (“동시에 다른 일도 하고 있었습니까?”)을 모두 기록하게 함으로써 멀티태스킹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한계점 중 하나는 주요 활동은 철저히 추적이 되지만 부차적 활동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국가에서는 기록조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조사에서는 다이어리에 명확한 예를 나열함으로써 응답자들이 부차적 활동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부차적 활동의 기록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Folbre and Yoon, 2007).

몇몇 조사에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포함시킴으로써 육아의 산만한 성격을 포착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아이에 근접해서 보내는 시간(예: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으로 정의되거나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시간(예: “아이는 당신의 보살핌 하에 있었습니까? 또는 “당신이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까?”)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질문의 장점은, 이런 질문이 아니라면 자신의 책무를 기록하지 않았을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능동적인 육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동적인 육아를 포착하기 좋다는 장점도 있는데 그것이 그 활동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다른 활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편 근접성 질문이건 책임성 질문이건 한 아이를 여러 명의 어른이 함께 돌보고 있는 경우 육아에 소요하는 시간을 부풀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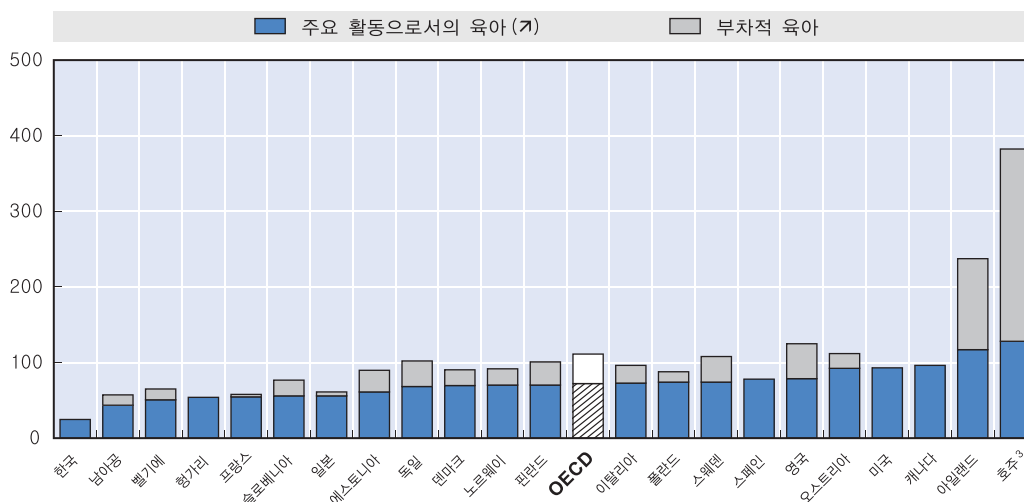
그림 1.9는 육아시간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패널 A는 응답자 기록 방법이고 패널 B는 근접성 및 책임 방법이다. 일관성있는 데이터가 나와있는 22개국에서는² 부모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12분을 주요 활동으로서의 육아에 소비하고 있었다. 부차적 활동으로서의 육아까지 합하면 평균 시간은 크게 올라가 하루에 2시간에 육박한다.³ (주요 활동으로서의) 육아에 소요하는 총 시간은 한국과 벨기에, 헝가리에서 가장 짧았으며 - 하루에 1시간 미만- 영어권국가에서 가장 길었다. 응답자에게 명확한 사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호주의 극도로 긴 육아시간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호주의 다이어리는 부차적 육아의 명확한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부모들이 수동적 육아도 기록하게 했다. 호주의 부차적 육아 중 가장 큰 부분은 아이 돌보기(child-minding)가 차지했는데 15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하루에 거의 4시간을 소요하고 있었다.

그림 1.9의 패널 B는 수동적 육아의 두 측정값을 비교하고 있다. 근접성 질문을 생활시간조사에 포함시킨 16개국의 경우 부모들은 하루 평균 4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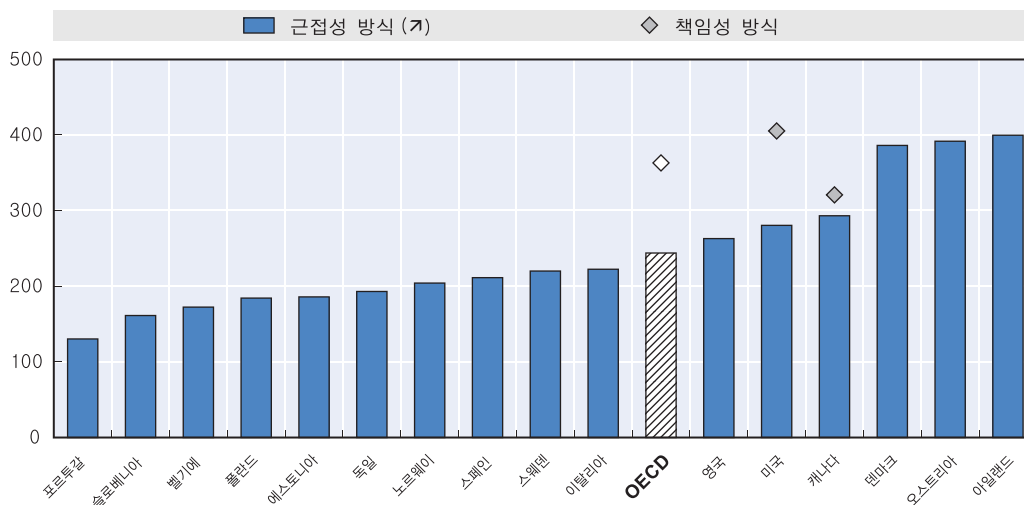
그림 1.9. 부모의 능동적 & 수동적 육아

하루 중 육아 시간 (분)¹

패널 A. 응답자 기록 육아²



패널 B. 근접성 및 책임성 질문 방식



1. 추가적인 국가별 주석은 그림 1.1 과 그림 1.8 참조
2. 응답자 기록 육아는 주요 활동으로서이건 부차적 활동으로서이건 응답자들이 직접 다이어리에 기록한 육아 시간을 의미. 여기서 육아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육아를 의미한다. 호주와 캐나다는 제외(15세 미만).
3. 호주의 자료는 비 가구구성원 아동 돌보기에 소요된 시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확률은 낮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부모는 가구 내 아동을 돌보는데 하루 평균 77분, 비 가구 아동을 돌보는데 2분을 소요한다.
4. 근접성 질문 방식은 아이가 있는 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수동적 육아시간을 측정한다. 책임성 질문 방식은 응답자가 아이 돌보기를 책임진 시간을 바탕으로 수동적 육아를 측정한다. 안타깝게도 두 방법 모두 연령 제한이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10세 -예외는 덴마크(18세), 아일랜드(18세), 포르투갈(14세)- 캐나다는 15세, 미국은 13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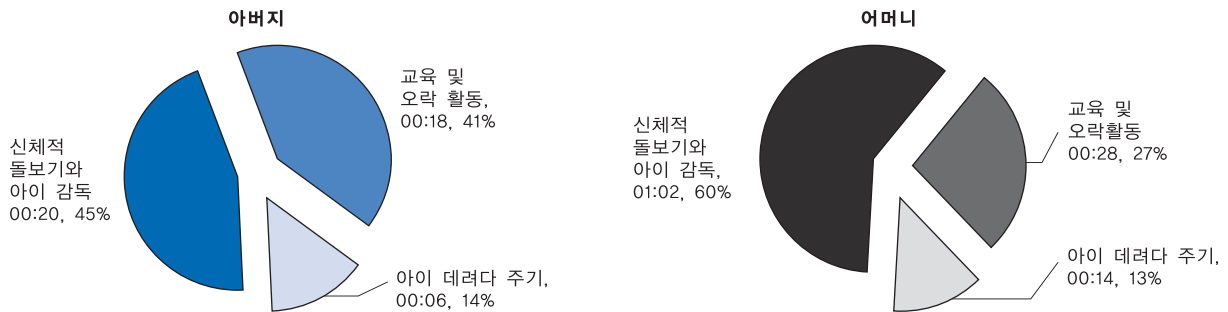
출처: 각국의 생활시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589>

책임성 질문(2개국에서만 채택)은 더 높은 추정치로 이어졌는데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6.7시간, 캐나다의 경우 5.3시간을 육아에 쓴다는 응답이 나왔다. 단, 캐나다의 경우 근접성 질문에서는 차이가 미미했다. 수동적 육아의 국가 순위는 패널 A의 능동적 육아 순위와 매우 비슷하게 슬로베니아와 벨기에가 하위권,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가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부모의 성별에 따라 육아에 소요되는 총 시간이 달라질 뿐 아니라 활동의 유형 역시 달랐다.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1) 옷 입히기, 밥 먹이기, 기저귀 갈기, 아플 때 돌보기, 아이 감독하기 등 신체적인 돌보기와 2) 숙제 도와주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 교육 및 오락 측면의 육아, 3) 아이를 학교나 병원, 체육관 등에 데려다 주기 등 앞서 두 개의 카테고리에 관련된 이동 등이었다. 엄마의 육아시간은 주로 신체적 돌보기와 감독에 할애되고 있으며 총 육아 활동의 60%를 차지했다. (그림 1.10) 반면 아빠들은 엄마들보다는 교육 및 오락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엄마는 총 27% 아빠는 41%였다. 그러나 엄마들이 아빠들보다 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이 두 배였는데 이 패턴은 모든 국가와 여러 하위 그룹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데이터가 나와있는 22개국에서 평균적으로 아빠들은 하루에 42분을, 엄마들은 1시간 40분을 육아에 쓰고 있었다.

그림 1.10. 여성들은 신체적 돌보기에, 남성들은 교육과 책 읽기, 놀아주기에 육아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육아 유형별 소요 시간



주: 데이터가 나와있는 21개국 평균이며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다.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육아를 의미. 호주와 캐나다(15세 미만)는 예외. 국가별 주석은 그림 1.1과 1.8을 참조

출처: 각국의 생활시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6081>

어른 돌보기

어른 돌보기는 가족의 보험적 기능 중 하나이며 급속한 고령화 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른 돌보기는 아이 돌보기에 비해 생활시간조사에서 관심을 훨씬 덜 받고 있다. 많은 조사에서 노인 돌보기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두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어른 돌보기는 돌봄을 받는 사람의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자를 돌보는 것인지 장애를 가진 배우자나 친지를 돌보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한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만 부모, 배우자, 기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정의와 표현의 차이 때문에 어른 돌보기를 국가간에 비교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표 1.1은 사용된 분류에 따라 어른 돌보기의 국가별 평균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첫 10개국에서는 성인 가구 구성원 돌보기를 육아 및 비 가구구성원 돌보기와 구분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인 돌보기에 하루 0.2에서 6분이 소요된다.

표 1.1. 어른 돌보기에 대한 분류가 서로 달라 국가간 비교가 어렵다¹

어른 돌보기에 할애된 시간(분) (이동 제외)

	합계 (↗)	남성	여성
성인 가구 구성원 돌보기			
네덜란드	0.2	0.2	0.2
남아공	0.6	0.2	1.0
덴마크	0.8	0.9	0.8
오스트리아	1.2	0.5	1.8
인도	1.3	0.6	2.1
미국	1.9	1.5	2.4
캐나다	2.0	1.0	3.0
포르투갈	2.0	0.0	3.0
터키	3.4	3.3	3.6
멕시코	6.0	3.0	8.8
성인 가족 돌보기²			
일본	2.9	1.0	5.0
한국	4.0	2.0	5.0
어른 돌보기³			
아일랜드	8.0	3.1	13.0
호주	9.0	7.0	11.0
기타 가사일⁴			
폴란드	1.0	1.0	2.0
슬로베니아	2.0	2.0	3.0
핀란드	4.0	4.0	5.0
프랑스	4.0	4.0	4.0
이탈리아	4.0	3.0	4.0
영국	4.0	4.0	4.0
에스토니아	5.0	6.0	5.0
벨기에	8.0	7.0	9.0
독일	9.0	7.0	11.0
스페인	11.0	5.0	16.0
스웨덴	11.0	10.0	13.0
노르웨이	12.0	11.0	13.0


1. 국가별 주석은 그림 1.1과 1.8 참조

2. 성인 가족 돌보기는 가구 내 거주하지 않는 가족 돌보기도 포함

3. 어른 돌보기는 성인 가구 구성원과 비 가구 구성원 둘 다 포함

4. 기타 가사일은 가정관리 및 어른 돌보기 포함

출처: 각국의 생활시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2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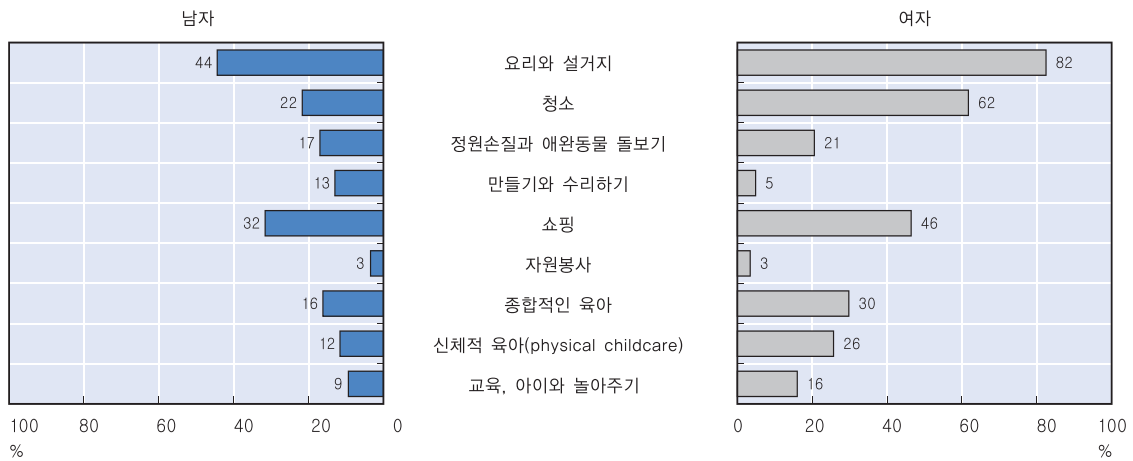
일본과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두 나라에서는 이 수치가 동일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돌보기도 포함한다. 호주와 아일랜드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성인 가구 구성원 돌보기를 성인 비 가구구성원 돌보기에서 분리할 수 없으며 어른 돌보기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훨씬 길다. 통일생활시간조사(HETUS)를 실시한 열두 개 유럽 국가의 경우 어른 돌보기가 “기타 가사일” 카테고리 내의 가정 관리(house hold management)와 함께 분류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활동에 소요된 총 시간이 앞서 언급한 국가들보다 훨씬 길다. 그러나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기타 가사일에 소요된 총 시간(분)이 매우 짧는데(하루에 1분-4분) 이는 사람들이 어른 돌보기에 매우 적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류가 사용되었건 간에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남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른 돌보기에 할애하고 있었다(에스토니아만 예외). 그러나 그 차이는 육아의 경우보다 훨씬 작았다.

여성은 요리와 청소, 남성은 짓기와 수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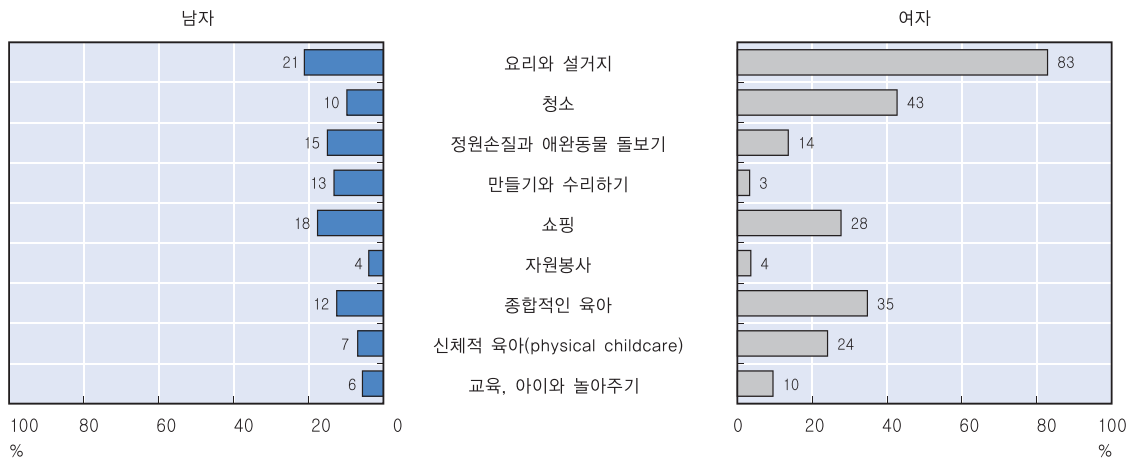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이 수행하는 무급노동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만들기와 수리하기는 전형적인 남성의 일이었다. (그림 1.11) 남성은 또한 정원손질, 애완동물 돌보기, 자원봉사에 약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지만 참여율은 여성과 똑같았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져 온 일들(예: 요리와 청소)은 여전히 주로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국가 여성들의 82%가 평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남성은 44%에 그쳤다. 여성이 요리에 소비하는 평균시간은 남성의 네 배에 달했다. (그림 1.11, 패널 B)

그림 1.11. 여성은 요리와 청소, 남성은 짓기와 수리하기

패널 A. 15-64세 남성과 여성이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비율



패널 B. 남자와 여자가 하루 중 해당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 (분)



주: 국가별 주석은 그림 1.1과 1.8 참조. 제시된 비율은 데이터가 나와있는 29개국의 비 가중 평균이다. 패널 B의 통계자료는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평균 시간 사용을 반영한 것이다.

출처: 각국의 생활시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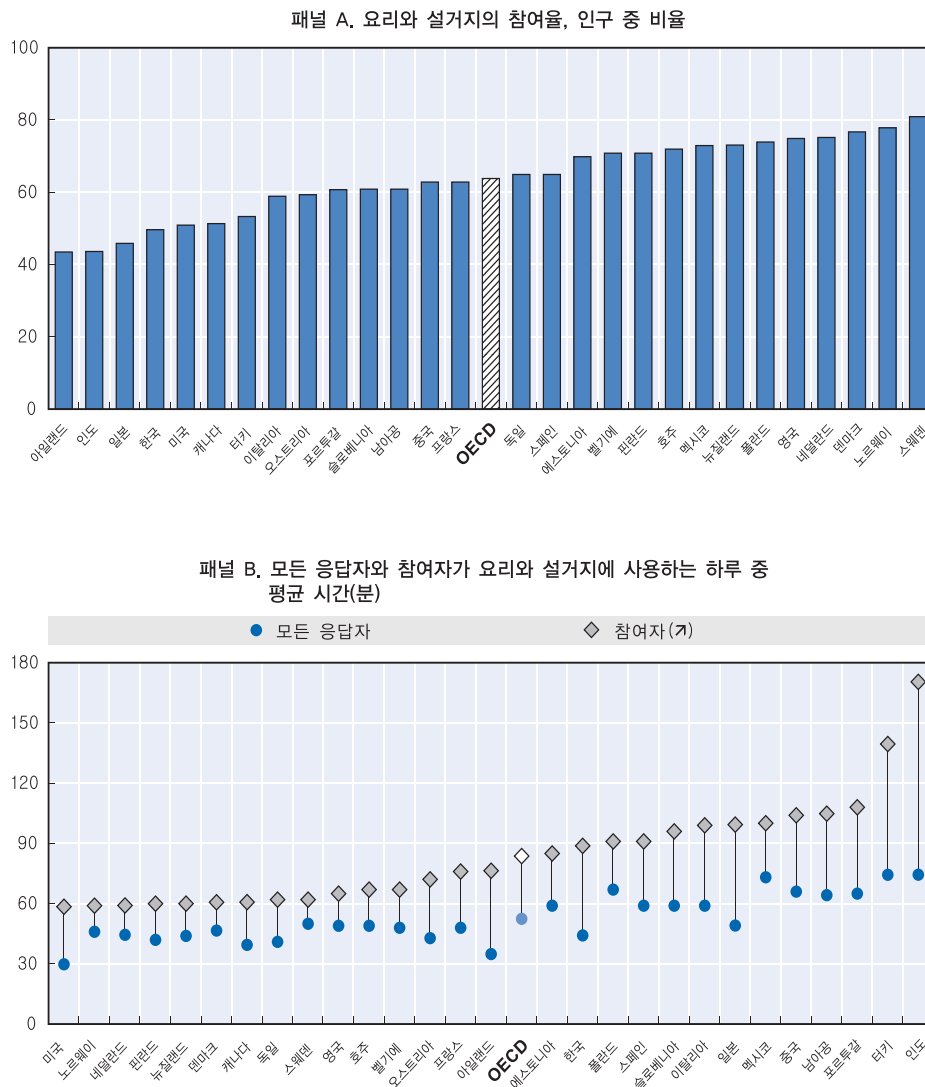
누가 얼마 동안 요리를 하는가?

앞에서 제시된 데이터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 시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 유형의 무급노동에 대한 참여율과 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활동 수행 시 소요하는 시간을 둘 다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번에는 무급노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리에 초점을 맞춰보기

로 한다.

데이터가 나와있는 28개국에서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사람들이 평소 매일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율은 아일랜드와 인도의 44%부터 북유럽의 75%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4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제 요리 시간에 있어서는 순위가 반대로 나타났다. (그림 1.12, 패널 B) 인도에서는 성인의 절반 미만이 요리를 했는데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거의 세시간을 주방에서 보내고 있었다. 반면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는 인구의 과반수가 요리를 했지만 소요시간은 1시간 가량에 불과했다.

그림 1.12. 여성은 요리와 청소, 남성은 짓기와 수리하기



주: 각국에 관한 주석은 그림 1.1 참조

출처: 각국의 생활시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추정자료 (Miranda, 2011 참조)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646>

미국은 유일하게 참여율과 평균 요리 시간이 둘 다 하위권이였다. 다시 말해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조사대상 국가에 비해 요리에 중요성을 덜 부과하고 있었다. 미국은 또한 주요 활동으로서의 식사에 비교적 적은 시간을 소요하며 비만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한 눈에 보는 사회 2009 참조) 5

무급노동의 가치 환산

무급노동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데는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 기회비용 접근방식은 가구 구성원이 그 시간만큼 일을 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를 따진다. 이는 해당 가족구성원이 가정생산활동을 하느라 소득을 상실했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 이 접근방식은 가치를 부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 생산 일이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애완견 산책시키는데 소요된 시간의 가치를 따질 때 뇌 신경 전문의의 급여를 적용한다면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 너무 높은 가격을 매기는 일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가정 생산은 사회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된다. 비슷한 학력과 특성을 가진 근로자들의 급여를 이용해 이들의 예상 급여를 산출할 수 있다 해도,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 예상 급여를 벌기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대체 비용 접근방식은 사람을 고용해 해당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를 고려한 방식이다. 물이 새는 것을 수리하는데 배관공의 급여를 적용하는 식으로 가사노동 별로 전문가의 급여를 적용하는데, 전문가들은 좀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가치를 과하게 산정하게 된다. 제너럴리스트 급여 어프로치는 가사 도우미나 수리공의 급여를 적용하여 모든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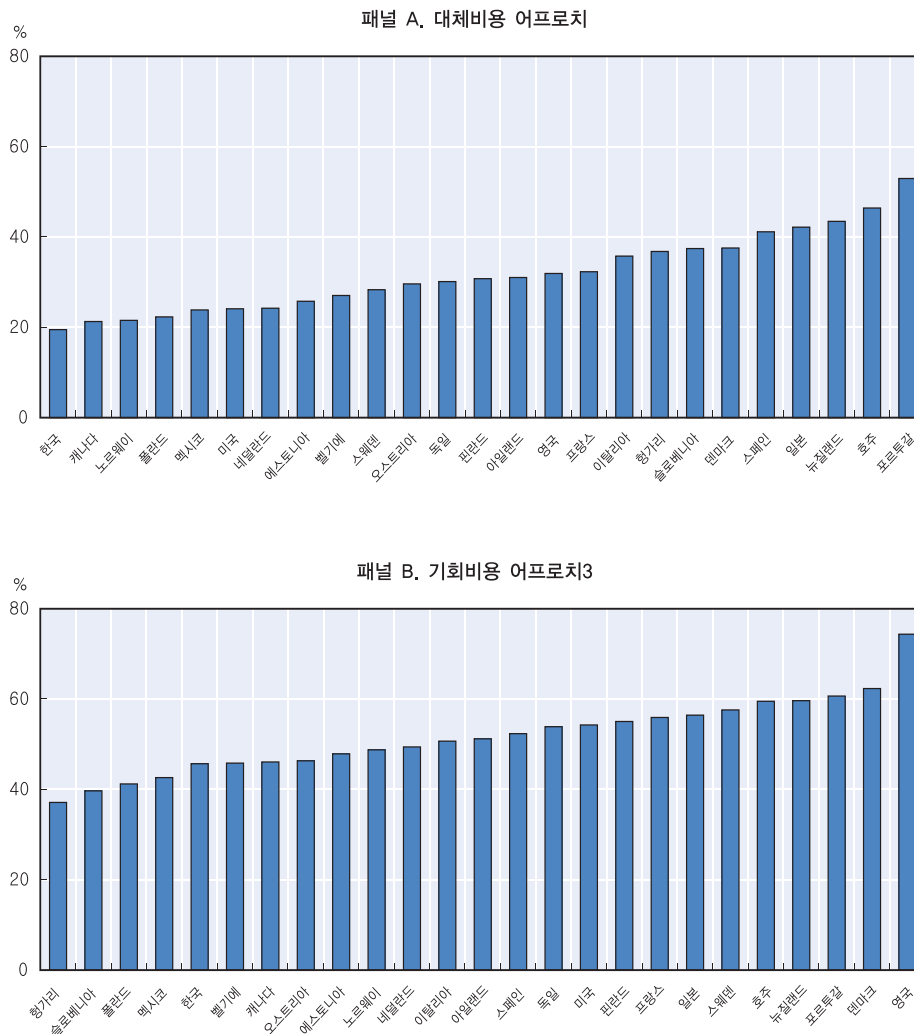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기회비용 어프로치와 대체비용 어프로치를 둘 다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 한국의 평균 시급을 사용해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환산하고 비공식적 활동의 시간당 급여 비용은 후자를 사용한다. 두 경우 모두 시급 계산은 세금과 사회적 기여금을 빼고 계산하며 주요 활동들만 계산에 넣는다⁶.

그림 1.13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서비스를 가정에서 생산하는데 소요된 노동의 가치를 데이터가 나와있는 OECD 25개국의 GDP 비율로 보여주고 있다. 무급노동의 기여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대체비용 어프로치에 따르면 무급노동에 할애된 노동가치는 한국의 GDP의 19%부터 포르투갈의 GDP의 53%까지 다양했다. 상한선의 값들은 기회비용 어프로치로 산출되었다. 두 어프로치의 국가별 단순 평균을 보면 모든 가치있는 경제적 활동 중 3분의 1에서 2분의1까지는 국가계정(national accounts)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15세 미만과 64세 이상 인구 중 어느 정도가 무급노동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과소 계산될 수 있다.

결론

무급노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 장에서 설명했듯이 무급노동 - 주로 요리, 청소, 돌보기 등-은 사회적 웰빙에 크게 기여하는 요소이며 수행되는 방식은 국가별로,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남녀별로 차이가 있다. 무급노동은 현재 소비의 측면(예: 청소)과 미래 웰빙을 증진하는 측면(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투자)에서 웰빙에 기여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무급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와서 수행하는 노동량은 덜하다는 점에서 - 국가별로 노동량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남녀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13. 무급노동은 OECD 회원국에서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¹
GDP 중 비율로 측정



-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5-64세 인구에 대한 시간사용 통계를 사용했으며 주요 활동만 대상으로 했다. 국가별 주석은 그림 1.1 참조.
-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비공식적 활동에 대한 국가의 평균 시급 비용을 사용했다. 몇몇 국가의 경우 이 정보가 나와있지 않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급여 비용이 사용되었다.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고려된 등록된 활동에 대한 급여비용 (호주와 일본). 총 경제의 평균 순 급여의 50% (에스토니아, 멕시코, 폴란드), 세금과 사회적 기여금이 고려된 보육 근로자의 평균 시급(노르웨이)
-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국가의 평균시급 이용.

출처: 각국의 생활시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OECD 사무국 (Ahmad and Koh, 2011 참조).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1665>

여성노동력의 참여율 증가를 통한 GDP 증가가 생산성 강화가 아니라 무급노동을 시장화(marketisation)한 결과인지에 관한 문제는 이 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물론 각국의 섹션별 데이터가 이를 암시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시간사용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상대적 불평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불평등 문제에 관한 무급노동의 고려 역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런 작업은 시간사용 자료가 여러 국가에서 나오면서 앞으로 수년간 OECD가 수행해야 할 미래의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

1. 이 장은 Miranda (2011)의 조사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기술적 사안을 포함해 좀더 상세한 내용은 Miranda (2011)를 참조한다.
2. 중국,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터키의 부모 육아 활동 데이터는 나와있지 않다. 포르투갈의 경우 부모의 육아에 대해 근접성 측정치 정보만 있다.
3. 캐나다와 헝가리, 미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부차적 활동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부차적 육아에 관한 데이터는 나와있지 않다.
4. 헝가리의 요리와 설거지 참여율은 나와있지 않다.
5. 국가간 비교 관점에서 보면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요리 시간과 식사의 상관계수는 모든 응답자의 경우 -0.05였다.
6. 방법론과 데이터 출처에 관한 좀더 상세한 정보는 곧 발간될 OECD Statistics Directorate Working Paper: *Incorporating Household Production into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Material Well-Being* (Ahmad and Koh, 2011)를 참조한다.

참고문헌

- Abraham, K. and C. Mackie (2005), *Beyond the Market: Designing Nonmarket Accounts for the United States*,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
- Ahmad, N. and S. Koh (2011), "Incorporating Household Production into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Material Well-Being", *OECD Statistics Directorate Working Paper*,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 Baker, M. (1997), "Parental Benefit Policies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ur", *Social Service Review*, Vol. 71, No. 1, pp. 52-71.
- Becker, G.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Vol. 75, No. 299, pp. 493-517.
- Budig, M. and N. Folbre (2004), "Activity, Proximity or Responsibility? Measuring Parental Childcare Time", in N. Folbre and M. Bittman (eds.),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Routledge, New York.
- Ehrenreich, B. and A. Russell Hochschild (2003),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Metropolitan Books, New York.
- Folbre, N. (2009), "Inequality and Time Use in the Household", in W. Salverda, B. Nolan and T. Smeeding(eds.),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Folbre, N. and J. Yoon (2007), "What is Child Care? Lessons from Time-Use Surveys of Major English-Speaking Countrie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Vol. 5, No. 3, pp. 223-248.
- Frazis, H. and J. Stewart (2010), "How Does Household Production Affect Measured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forthcoming.
- Freeman, R. and R. Schettkat (2005), "Marketization of Household Production and the EU-US Gap in Work", *Economic Policy*, Vol. 41, pp. 6-50, January.
- Hill, T. (1979), "Do-It-Yourself and GDP",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5, No. 1, pp. 31-39.
- Hook, J.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1, No. 4, pp. 639-660.
- Ironmonger, D. (1996), "Counting Outputs, Capital Inputs and Caring Labor: Estimating Gross Household Product", *Feminist Economics*, Vol. 2, No. 3, pp. 37-64.
- Ironmonger, D. (2001), "Household Production", in N. Smelser and B. Balte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Elsevier Science, pp. 6934-6939.
- Jaumotte, F. (2003),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Past Trends and Main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76, OECD Publishing, Paris, 12 December.
- Lewis, J., M. Campbell and C. Huerta (2008), "Patterns of Paid and Unpaid Work in Western Europe: Gender, Commodification, Preferences and the Implications for Polic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18, No. 21, pp. 21-37.

Miranda, V. (2011), "Cooking, Car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around the Worl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16,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

OECD(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Stiglitz, J., A. Sen and J.P. Fitoussi (2007),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www.stiglitz-sen-fitoussi.fr.

Weinrobe, M. (2005), "Household Production and National Production: An Improvement of the Record",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0, No. 1, pp. 89-102.

제 2 장

OECD 사회적 지표 해석

한 눈에 보는 사회의 목적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은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적 결과(social outcomes)와 사회적 대응에 관한 대략적 실태를 보여준다. 이것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 해당 국가의 과거 상황과 다른 OECD 회원국들을 비교할 때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사회에서 취한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가?

사회적 발전을 평가하려면 국가별로 장시간 동안 사회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물질적 웰빙, 교육과 의료 등 광범위한 사회적 결과를 포괄하는 지표들이 필요하다.

각 사회는 정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중요한 문제는 이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는가 이다. 첫 단계로 국가별로 결과를 바꾸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들을 비교하고 이를 사회적 결과와 대조한다.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유익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원의 변화를 사회적 결과의 변화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프로치를 통해 어떤 시점에서 관찰된, 자원과 결과에 둘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국가 특유의 고착화된 요소들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사회적 지표의 구조

지표의 체계는 다양한 분야의 결과 평가와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지표의 체계는 전 범위를 포괄하는 사회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단순한 지표의 나열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OECD 환경지표를 생산했던 경험이 반영되었다. 이들 지표는 “압박-상태-대응(PSR)”으로 알려진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¹. 이 구조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천연자원과 환경적 조건(상태)에 영향이 며 이것은 사회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들 변화에 대응하도록 만든다(사회적 대응). PSR 구조는 이러한 인과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정권자들과 국민들이 간과하기 쉬운 상호연관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유사한 어프로치를 사회적 지표에 채택하고 있다. 지표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측면은 이들 지표의 속성을 고려하여 세 분야로 나누고 있다.

- 사회적 영역은 정책 목표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근로연령의 사람들 대비 노인의 비율은 정책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 예컨대 의료, 과세 또는 연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정보이다.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적 영역 지표의 추세는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 사회적 상태 지표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회적 결과를 설명한다. 이러한 지표는 인구의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선택된 지표들이 쉽고 명확

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를 테면 모든 국가는 높은 빈곤율보다는 낮은 빈곤율을 원한다는 식이다.

- 사회적 대응 지표는 사회적 상태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 대응은 정부 정책 설정의 지표를 포함한다. 비정부 기구, 가족, 좀더 광범위한 시민 사회의 활동 역시 사회적 대응에 해당한다. 사회적 대응 지표를 사회적 상태 지표와 비교해보면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초기 현상을 알 수 있고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지표가 위의 세 집단 중 하나에 할당되기는 하지만 사회적 맥락과 지위 카테고리 중 어디에 할당해야 하는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은 어떤 국가에서는 정책 목표일 수 있지만 또 다른 국가에서는 단순히 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영역의 일부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에서는 법적 결혼이 정책 목표일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정책상 우려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지표의 중요한 한계는 이 지표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된다는 점이다.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의 경우, 지표들이 연방 내의 지역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맥락과 결과, 사회적 대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 제시된 지표를 고려할 때는 이러한 한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OECD 프레임워크의 두 번째 측면은 지표들을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 따라 분류한다. 사회적 상태 및 사회적 대응 지표를 분류하는데 사회 정책의 네 가지 목표가 사용된다.

- 자활(Self-sufficiency)은 근본적인 사회정책 목표이다. 자활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적 참여와 일상 생활에서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촉진된다.
- 공정성(Equity) 역시 공통적인 사회정책 목표이다. 공정한 결과는 주로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으로 측정된다.
- 건강수준(Health status)은 보건의료제도(health care system)의 근본적인 목표지만 건강수준을 증진하려면 건강을 사회정책의 중심 목표로 만들어 그 사회적 결정요인들에 좀더 광범위한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은 종종 국가 사회정책의 대단히 중요한 목표로 파악된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회적 통합이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떠올려보면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타인을 신뢰하는 정도를 보면 사회적 통합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지표의 선택 및 설명

OECD 회원국들은 사회적 지표의 수집과 발행에 있어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표 선택 시 다음의 의문점들을 고려했다.

- 국가간 지표 비교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해 가장 비교가 용이한 정보를 제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지표들이 “절대적”인 비교성이 있는 지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독자들은 사용된 데이터의 성격과 비교성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
- 최소한 몇 개 국가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OECD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을 포괄하는 지표들만을 다루고 있다.

- 국가 차원에서 어떤 분류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사회적 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람들의 연령, 성별, 가족 유형 등 사회적인 하위 범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여기에 제시된 분류들은 고려된 지표에 따라 달라지며 이미 나와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4장에서 8장까지는 주요 증거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지표 중 일부는 정기적으로 다른 OECD 간행물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예: 사회적 비용 데이터베이스 및 OECD 보건 데이터) 그 외 다른 지표들은 필요할 때마다 수집된다. 일부 지표들은 기존 지표를 약간 변형해서 만들어진다.

지표에 번호를 붙이는 것은 참고자료 간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 간행물 전체에 걸쳐 각 지표에 붙은 코드(예: GE1)는 지표와 사회적 분야(아래 표에 목록 제시)를 연관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책자에 사용된 지표의 이름과 코드는 과거 발간된 한 눈에 보는 사회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분야에서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일반 지표 (GE)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비교할 때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과가 낮거나,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정 분야에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음을 암시하기 쉽다. 이와 같은 측면은 좀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수준은 OECD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만일 소득과 보건 간에 연관성이 있다면 사회적 대응에 관계없이 부유한 국가는 빈곤한 국가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적 조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만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과 함께 증가한다면(실제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 부유한 국가들은 빈곤한 국가들에 비해 보건의료에 더 많이 지출(국민 소득 중 비율)할 것이다. 이러한 관찰결과는, 보건의료 지출과 보건 수준 지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정책의 영향을 고려할 때에는 데이터 이면의 일반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율, 이민, 가족 및 노인지원을 등 일반(GE) 지표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지표들의 일반적인 배경을 제공해준다. 가구소득은 그 자체로 사회적 결과이며 맥락상 변수일 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들의 물질적 웰빙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표 2.1. 일반 지표 (GE) 목록

GE1. 가구소득
GE2. 출산율
GE3. 이민
GE4. 가족
GE5. 노인 지원율

자활(Self-sufficiency (SS))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유급고용)(SS1)은 소득, 정체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사회 보장 제도 역시 고용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정을 확보한다. 그러므로 고용을 촉진하는 것에 모든 OECD 국가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실업상태(SS2)라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교육성과(Student performance) (SS3)는 인적자원축적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교육이 끝날 때 측정한다. 교육성고가 좋으면 취업을 포함해 장기적인 자족이 가능해진다. 사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연수)은 노년의 자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며(SS4) 연금 수급가능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활이 가능케 하는 주요 사회적 대응은 교육의 공적, 사적 지출(SS5)이다.

표 2.2는 개인 및 그 가족의 자활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OECD 국가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회적 상태 및 사회적 대응 지표를 열거하고 있다

표 2.2. 자활 지표 (SS)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SS1. 고용	SS4. 연금수급 가능기간
SS2. 실업	SS5. 교육비 지출
SS3. 교육성과	
EQ1. 소득 불평등	EQ4. 저소득 탈출에 필요한 소득
EQ2. 빈곤	EQ5. 공공 사회 지출
EQ3. 생계곤란	

주: 이탤릭체로 표시된 지표들은 다른 하위 섹션에도 등장하지만 자활 평가에도 관련 있는 지표들이다.

형평성 (EQ)

형평성은 여러 측면을 갖고 있다. 결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 및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 정확히 무엇이 기회나 결과의 공평한 분배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사회적 상태 형평성 지표들은 재정적 자원의 불평등에 국한된다.

소득 불평등(EQ1)은 사회 전반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정책사상들은 소득 분배의 하위 분위에 속한 계층에게 더 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불평등 외에 빈곤지표(EQ2)를 사용하게 된다. 사람들이 현재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EQ3)에 대한 고려는 평등의 대체적 지표인데 EQ1과 EQ2라는 좀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주관적이고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중요한 지표를 포함시킨 것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복지 급여(welfare benefits)에 의존해 사는 이들이 저소득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지는 소득분배 중 하방 이동성에 대한 정책적 맥락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EQ4) 사회적 보호는 각국이 형평성 문제에 대응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모든 OECD 회원국들은 자원을 재분배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공공사회지출 (EQ5)로 요약된다. 형평성 지표는 자활 지표들과 명확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두 지표들을 함께 보면 체계 지속가능성의 충분한 공급과 국민의 자활 강화 간의 균형유지라는 과제를 국가의 사회적 보호 체계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2.3. 형평성 지표 (EQ)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EQ1. 소득 불평등	EQ4. 저소득 탈출에 필요한 소득
EQ2. 빈곤	EQ5. 공공 사회 지출
EQ3. 생계곤란	
SS1. 고용	HE5. 보건 지출
SS2. 실업	
SS3. 교육성과	

주: 이탤릭체로 표시된 지표들은 다른 하위 섹션에도 등장하지만 형평성 평가에도 관련있는 지표들이다.

보건 지표 (HE)

사회적 조건과 의료보건의 상태 간의 연관성은 잘 수립되어 있다. 실제로 교육 성과, 공중보건 지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수명(HE1)으로 측정된 바와 같이 모두 건강상태의 큰 개선에 기여해왔다. 기대수명개선은 영아사망률 감소(HE2)를 상당한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 건강상 초점이 신체적인 건강에만 맞춰지고 긍정적, 부정적 경험 (HE3)같은 좀더 주관적인 정신적 인구 기반 보건 지표는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2이러한 허점은 부분적으로는 측정 및 데이터 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정신건강은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한 요소이다. 환경적 측면인 만족스러운 수준의 공기와 물에 대한 접근성은 건강 생활(HE4)에 있어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다. 보건 지출(HE5)은 의료 상황의 우려에 대한 보건의료체계의 정책적 대응 중 좀더 일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건강 문제는 때로는 보건의료 정책의 범위를 넘어 상호 연관된 사회적 조건-실업, 빈곤, 부적절한 주거환경 등-에서 기원할 수도 있다. 게다가 보건의료상 개입의 효과성은 지출 수준 자체를 넘어서 의료보험의 저조한 적용률이나 정책본인부담 등 의료적 도움을 받는데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의료보건의료 체계 상의 다른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보건의료 조건 및 개입에 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지표들은 격년으로 발간되는 OECD 보건 데이터(OECD Health Data) 및 한 눈에 보는 의료보건(Health At a Glance)에 나와있다.

표 2.4. 보건 지표 (HE)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HE1. 기대수명	HE5. 보건지출
HE2. 영아사망률	
HE3. 긍정적, 부정적 경험	
HE4. 수질 및 공기질	
	EQ5. 공공사회지출

주: 이탤릭체로 표시된 지표들은 다른 하위 섹션에도 등장하지만 보건 평가에도 관련 있는 지표들이다.

사회적 통합(CO)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것은 많은 OECD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 정책적 목표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지표들을 파악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다. 한눈에 보는 사회 2011에서는 사회적 통합 지표들을 제대로 선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타인에 대한 신뢰 지표(CO1)는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용이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유리한 단체 행동을 용이하게 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결속된 사회는 시민들이 국가 차원의 제도에 대해 신뢰를 갖고 사회, 경제적 제도가 부패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CO2) 사회를 말한다. 친 사회적 행동은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시간을 할애하고 도와주는 등 사회가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기여하는 행동이다. 반 사회적 행동은 전형적으로 범죄자들이 하는 행동인데 친 사회적 행동의 반대이다. (CO3) 높은 투표율은 그 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이는 체제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그 정통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CO4)를 반영한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소수 집단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는 전통적인 소수민족들과 역사적으로 아웃사이더로 간주되어온 이들과의 사회적 통합(CO5)을 나타낸다. 사회적 통합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비교 가능한 대응 지표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회 정책의 다른 측면들(자활, 형평성, 보건)과 연계되어 있는 정책들 역시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2.5. 사회적 통합 지표 (CO) 목록

사회적 상황	사회적 대응
CO1. 신뢰	
CO2.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CO3.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	
CO4. 투표	
CO5. 관용성	
EQ1. 소득 불평등	
EQ2. 빈곤	

주: 이탤릭체로 표시된 지표들은 다른 하위 섹션에도 등장하지만 사회적 통합 평가에도 관련 있는 지표들이다.

본 간행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

이 보고서의 4장과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다섯 개 영역별 다섯 개 지표에는 각각 한 페이지의 텍스트와 한 페이지의 도표가 첨부된다. 도표와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패턴을 따른다. 텍스트와 도표 둘 다 가장 최근의 헤드라인 지표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가 순위별로 열거되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표의 변화는 오른쪽 도표에 반영되어 있다. 스물 다섯 개 지표 하나하나에 표준화된 소개 및 도표를 제공함으로써 해석하기 쉽도록 구성해놓았다. 해당 변화가 발생한 기간을 선택할 때는 부분적으로는 데이터 상의 한계에 따라 결정했지만 이상적으로는 1) 장기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 또는 2) 현재의 경제위기(대부분 2007-09) 기간의 변화를 다루어 최근의 부정적 경제 사태가 사회적 지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할 수 있게 했다. 텍스트와 도표는 지표의 흥미로운 대안적 분류 또는 다른 사회적 결과 또는 정책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회귀 선(regression line)을 덧붙인 대비 도표(cross-plot chars)는 5%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다. 회귀선이 없다면 대비 도표가 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비 도표가 고려되고 있는 여러 지표의 공통적인 주제에 일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최근의 영향력있는 문헌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부유한 국가에서 사회적 지표들을 한데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Wilkinson and Pickett, 2009)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 (Society at a Glance 2011)은 여러 회원국들에 대해 OECD의 Growing Unequal? 프로젝트에서 나온 정확한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싣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시된 많은 지표에 대해 소득수준과 소득 불평등의 변화와 수준에 관한 위와 같은 가정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스로 되어 있는 “정의 및 측정” 부분에서는 사용된 데이터의 정의와 잠재적 측정 문제들을 다룬다.

각 지표의 이면에 있는 데이터는 OECD 웹사이트 (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 또는 각 지표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StatLink” (대부분의 국가 데이터도 나와있음)의 “electronic books” 를 클릭하거나 입력하면 찾아볼 수 있다.

주

1. (DSR) 모형과 유럽 환경청에서 사용한 “Driving force–Pressure–State–Impact–Response” (DPSIR) 모형으로도 이어진 어프로치의 변종이다.
2.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에 대한 유사한 지표가 EU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근의 작업에서 다루졌을 뿐 아니라(Korkeila et al., 2003) 최근의 캐나다 및 스코틀랜드 정부 보고서에서 광범위한 정신건강 지표로 사용된 바 있다.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09; Taulbut et al., 2009)

참고문헌

-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09), *Improving the Health of Canadians: Exploring Positive Mental Health*, CIHI, Ottawa.
- Korkeila, J. et al. (2003), “Establishing a Set of Mental Health Indicators for Europe”,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31, pp. 451-459.
-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 Taulbut, M., J. Parkinson, S. Catto and D. Gordon (2009), *Scotland’s Mental Health and its Context: Adults 2009*, NHS Health Scotland, Glasgow.
- Wilkinson, R. and K. Pickett (2009), *The Spirit Level: Why Equality is Better for Everyone*, Penguin Books, London.

제 3 장

한 눈에 보는 사회: 개요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 (Society at a Glance 2011)에는 25개의 사회적 지표가 제시된다. 한 눈에 보는 사회 2009에서는 표를 통해 요약을 제공하고 있다. 표에는 각 장당 두 개의 지표가 들어갔는데 이 지표들은 각자의 연역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하여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통해 선정되었고 성과가 상위 세 개 십분위에 속하는 경우 “초록”, 중간이 네 개 십분위는 “주황”, 하위 세 개 십분위는 “빨강”으로 표시했다.

아래의 모든 유관 지표에 대해서도 이러한 “신호등” 방식이 사용되었다. 25개 지표 중 일부는 배제되었는데 명확하게 해석(값이 크면 바람직한 것이고 값이 작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GE) 지표의 경우 가구 소득만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사회적 대응 지표(교육, 사회 및 보건 지출, 연금수급연수)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들이 정책상 고려사항이지 사회적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부 지표가 빠지면서 25개 사회적 지표 중 17개만이 표 3.1에 요약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녹색은 가장 값이 큰 일곱 개 국가, 주황색은 중간이 20개 국가, 빨강은 가장 낮은 일곱 개 국가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에 따라 지표 데이터가 빠져 있으면 이들 숫자는 비례적으로 조정된다.) 국가별 지표 정보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표 3.1은 사회적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유용한 자료이긴 하지만 국가간 비교 측면에서 그 의미와 해석에 대해 경고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국가마다 정책상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다. 여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회적 결과보다 경제적 결과(인플레이, GDP, 재정적 균형 등)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표 3.1에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회적 결과는 해당 국가가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치르고 있는 대가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는 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 결과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한 결과를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여러 결과에 대해서는 기꺼이 붉은 색 표시를 감수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고려되지 않은 다른 사회적 결과가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 결과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는 것이다. 빨강, 주황, 초록의 패턴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선호의 국가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타난 패턴은 현재 또는 최근의 정책 결정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결과의 변화에 있어서 뒤쳐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결과 간의 교환적 선택(trade-off)은 정책의 선택과는 관련 없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정책적 노력에 있어 초록색 결과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국가별 성과를 지표별 초록색 또는 빨간색의 숫자를 합계내는 식으로 통합적인 사회적 지수로 순위 매기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표 3.1. OECD 국가의 사회적 상황 개요

“녹색 원”은 상위 두 개 심분위에 속한 국가들, “붉은색 다이아몬드”는 하위 두 개 심분위, “노란 삼각형”은 중간 여섯 개 심분위에 속한 국가들이다.

	GE1	SS1	SS2	SS3	EQ1	EQ2	EQ3	EQ4	HE1	HE2	HE3	HE4	CO1	CO2	CO3	CO4	CO5	
	영양권 및 생활 기구, USD	15-64세 인구의 고용률	15-64세 인구의 실업률	PISA 점수 평균값의 범위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	평균 면적	환경 수질 지수 (생물 다양성, 수생 생물 다양성, 수생 생물 다양성)	두 자녀가 있는 부모가 영유아의 60%인 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평균 수명 기대수명	평균 사망률	평균 영아 사망률	평균 영아 사망률	평균 영아 사망률	평균 영아 사망률	수출 비중	평균 실업률	평균 실업률	평균 실업률
	2007	2009	2009	2009	2007/08	2007/08	2010	2009	2008	2009	2009	2009	2007/08	2010	2010	2009 or most recent	2010	
호주	●	▲	▲	●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체코	▲	▲	▲	▲	▲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	▲	▲	▲	▲	
한국	▲	▲	▲	▲	▲	▲	▲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	▲	▲	▲	▲	▲	▲	
터키	▲	▲	▲	▲	▲	▲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	▲	▲	▲	▲	

출처: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의 OECD 사회적 지표에서 편집 (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 StatLinks  <http://dx.doi.org/10.1787/888932382178>





4. 일반 지표

1. 가구소득
2. 출산율
3. 이민자
4. 가족구성
5. 노인 부양비율

4. 일반 지표

1. 가구 소득

정의 및 측정

연간 중위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데이터는 소득 분포 프로젝트(OECD, 2008)를 사용하였다. 가처분소득은 총 가구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가구에 제공한 현물 서비스, 소비세, 주택 소유로 인한 환산 소득은 제외되어 있다. 가구 소득은 해당 가구원들에게 귀속된다. 가구소득은 공통 균등화 스케일을 0.5로 가정하여 가구 규모를 감안해 조정했다.

이전 판에서는 일인당 순국민소득(NNI)을 소득 측정값으로 사용했으나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에서는 가구 기준으로 바꾸게 되었다.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는 개념상 중위 가구소득이 더 적합하다. 중위 가구소득은 일인당 NNI보다 가족 소득에 좀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위 가구 소득은 빈곤 데이터(EQ1과 EQ2참조)와 연관성을 갖는데 빈곤 자료 산출 시 중위가구소득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료는 각국 영사관에서 OECD에 전달했으며 국가 미시 데이터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방법과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이 국가간 비교성을 강화하긴 하지만 국가별 자료는 여전히 서로 상이해 쉽게 표준화할 수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위 소득이 여러 출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가구소득 측정값은 개념상 사회적 목적에 더 부합하긴 하지만 국제적 비교성에서는 국민소득보다 덜 적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부정확성을 반영하여 가구소득 값은 미 달러 1,000 단위로 반올림했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 국가별 화폐로 표시된 소득을 구매력비교(PPP) 환율을 사용해 미 달러로 환산했다. 이 PPP는 미 달러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해당 국에서 필요로 하는 화폐의 금액을 나타낸다. 소득과 PPP 값은 통계적 오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간 차이가 5% 미만인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세금을 빼고 복지혜택을 더하면 가구소득은 가족들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활의 물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절대적, 객관적 지표가 된다. 가구소득은 가족 규모에 맞춰 조정되며 조정된 값은 가구 내 각

구성원에 분배된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중위 소득보다 높은 소득, 나머지 절반이 낮은 소득을 올린다는 의미이다.

2007년, 터키와 멕시코 국민의 절반은 가구소득이 5천 달러 미만이었다. 룩셈부르크 국민의 절반은 소득이 이 수준의 일곱 배 이상이었다(GE1.1) 가구 소득이 낮은 국가는 남부 유럽, 지중해 국가와 동유럽의 많은 국가, 칠레와 멕시코 등 두 개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었다. 가구 소득이 높은 국가로는 노르웨이와 미국이 있었다. 균등화 가구 소득을 이용한 국가 소득 순위는 1인당 순국민소득(NNI)을 이용해 산출한 순위와 비슷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NNI 값 대신 가구소득을 이용하면 소득 순위가 크게 달라졌다. 스웨덴은 일곱 계단 내려갔고 뉴질랜드와 한국은 다섯 계단 올라갔다.

1980년대 중반에서 2007년 사이 가구소득증가율의 OECD 평균은 1.5%였다. (GE1.2) 1인당 GDP 증가율은 0.5퍼센트 이상 더 높았으며 NNI 증가도 비슷한 정도로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한 세대가 지나면 상당히 누적될 수 있다. OECD 평균 증가율 역시 이면을 살펴보면 국가간 차이가 크다. 멕시코와 포르투갈, 스페인은 가구소득증가가 기존의 NNI 방식과 동일하거나 좀더 높은 국가들이다. 벨기에, 칠레, 룩셈부르크, 헝가리, 일본은 가구소득증가가 기존 NNI 대비 특별히 낮았다. 가구소득과 총 생산 증가 값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가 전체가 아니라 가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일 수도 있고 평균값보다는 중위값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사람 수를 감안해 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이거나 통계상 오류의 측정 때문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Stiglitz, J., A. Sen and J.P.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www.stiglitz-sen-fitoussi.fr/documents/rapport_anglais.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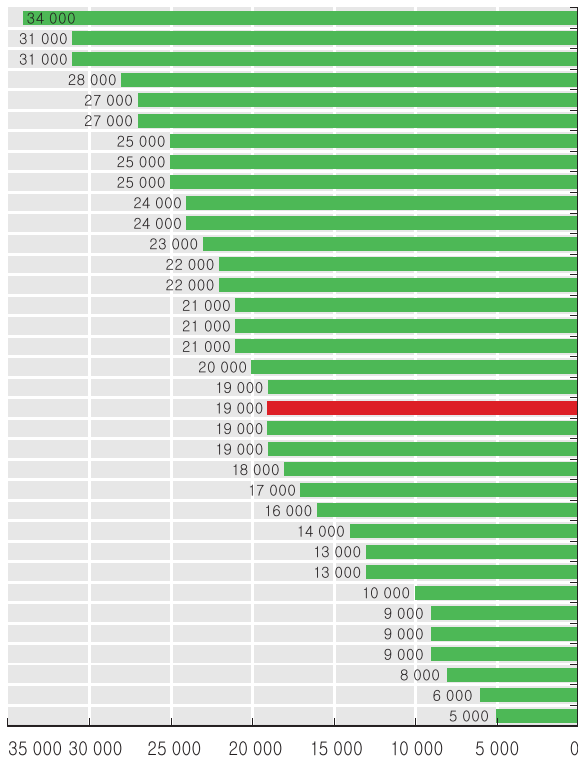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GE1.1, 패널 B: 10-20년간의 중위소득 변화 자료는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의 경우 나와있지 않다. 호주와 칠레, 이스라엘, 포르투갈은 1990년대 중반부터의 변화만 나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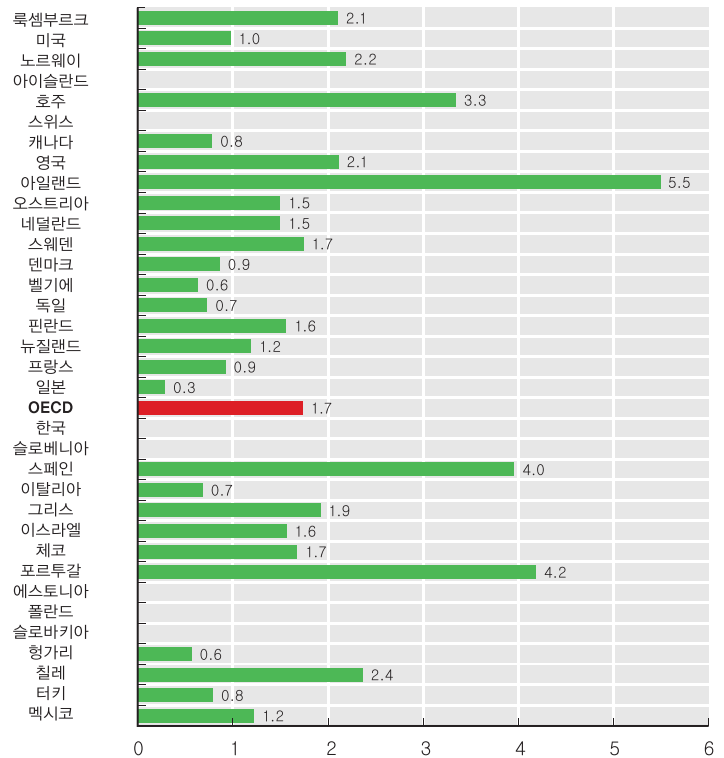
이스라엘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GE1.1. OECD 국가의 중위 균등화 소득은 5,000달러부터 34,000달러까지 다양하다.

패널 A. 2007년 현재 가격 및 PPP로 환산한 연간 중위균등화
가처분가구소득 (USD)
(↘, 1 000 단위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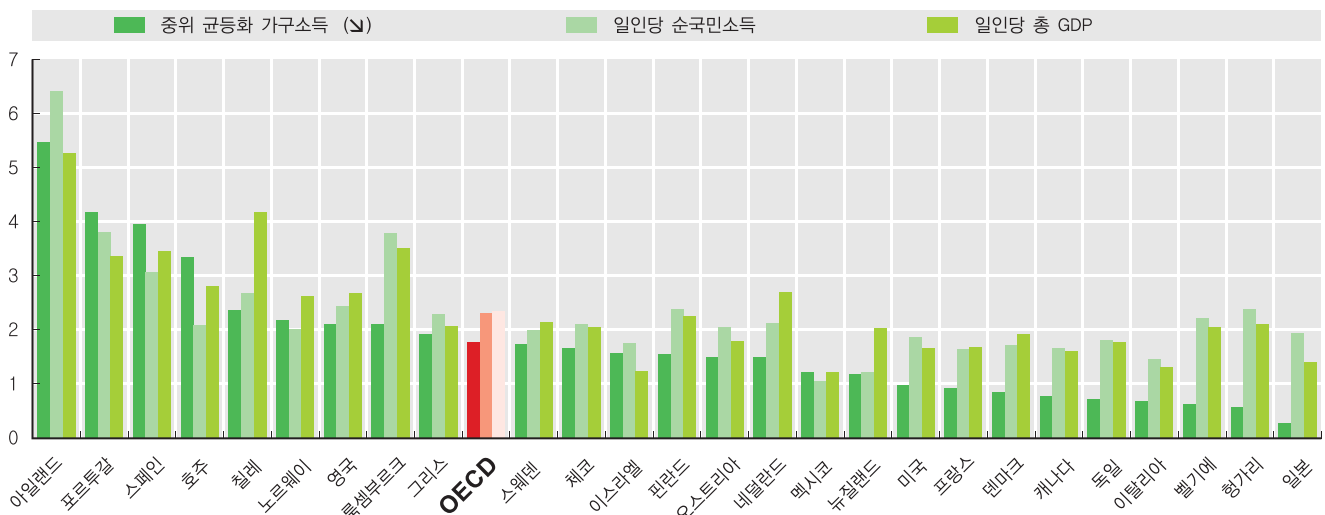


패널 B. 80년대 중반(또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또는 2000년대 중반)사이 실질
중위가구소득의 실질 평균 연간 성장률, 퍼센트



GE1.2. 가구소득은 물질적 웰빙의 국가계정 수치보다 느리게 증가한다.

1980년대 중반(또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또는 90년대 중반) 사이 중위
가구 균등화 소득, 1인당 NNI, 1인당 GDP의 실질 연간 평균 증가율, 퍼센트



출처: OECD 소득분배 및 빈곤 데이터베이스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와 OECD국가계정 데이터베이스 (www.oecd.org/statistics/nationalaccounts).

정의 및 측정

총 출산율은 각 연령별 자녀 출산 확률이 해당 연령의 출산율과 같다고 가정할 때 가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 명의 여성에게 태어나는 자녀의 수이다. 이것은 5년의 간격을 두고 정의된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순이주(net migration)가 없고 사망률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총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2.1명인 경우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대체”)된다. 자료의 출처는 대부분 인구 등록 기록 또는 기타 행정기록이다. 이들 자료를 UN 및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의 권고에 따라 조율하였다. 출산율 자료가 설문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는 터키만 예외이다.

총 출산율은 여성이 평생동안 정확한 연령별 출산율을 경험한다고 가정할 때 평균적인 여성이 갖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영아 및 아동기의 일부 사망률을 감안하면 총 출산율이 두 명을 약간 넘으면 인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2009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대체 수준을 훨씬 밑돌았는데 OECD 평균이 1.74명이었다. (패널A, GE 2.1)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스라엘로, 두 번째로 높은 아이슬란드보다 0.74명의 자녀를 더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 외에 뉴질랜드와 터키도 대체 출산율(여성 한 명당 2.1명)을 넘어서는 출산율을 기록했다. 영어권국가와 북유럽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은 국가군에 속해있는 반면 유럽대륙(프랑스는 예외) 국가들은 일본과 함께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출산율은 한국에서 특히 낮았는데 두 명의 부모가 한 명을 약간 넘는 자녀를 두고 있었다.

출산율은 지난 25년간 OECD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패널 B, GE 2.1) 이러한 추세는 가족의 형성을 이루는 일을 미루고 바람직한 가족 규모도 줄어 들고 있는 데서 기인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고용률이 높아지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필요가 있고 주택 문제가 증가하는 등의 요인들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감소는 터키와 멕시코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평균적으로 여성 한 명당 두 명 정도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폴란드와 일본도 여성 한 명당 한 자녀로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14개 OECD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섯 개 북유럽 국가와 다섯 개 영어권 국가, 그리고 서로 인접해 있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었다. 출산율이 가장 크게 상승한 곳은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였으며 증가 정도는 평균적으로 여성 한 명당 3분의1에서 2분의1 명 사이였다.

2000년과 2009년 기간 중에 평균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 추세가 상당히 다양했다 (GE 2.2). 오스트리아와 일본, 헝가리, 한국, 포르투갈, 스위스 -모두 저출산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원래 출산율이 높았던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뉴질랜드와 아이슬란드에서는 대체율을 상회하는 회복률을 보였다. 이러한 출산율 반등은 2009년 많은 OECD 국가에서 정체상태를 보였는데 아마도 경제 위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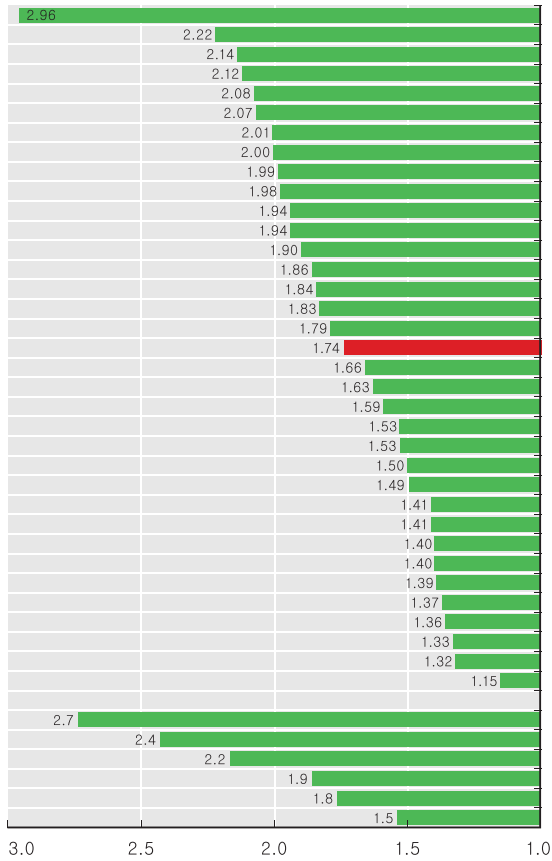
OECD (2010),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 SF2.1, “Fertility Rates”,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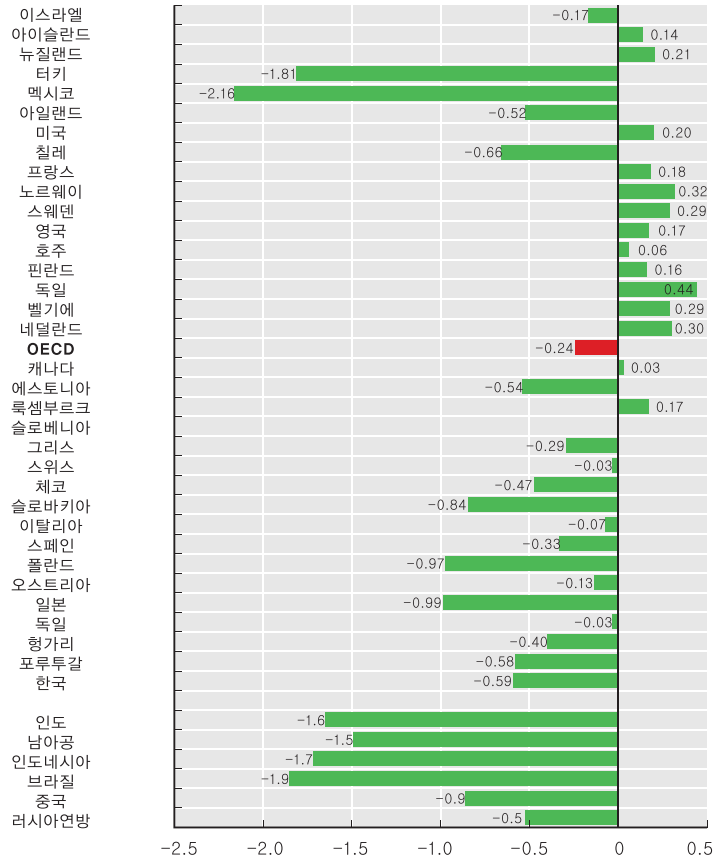
그림 GE2.1: 칠레는 2008년, 캐나다는 2007년 이스라엘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GE2.1. OECD의 출산율은 지난 세대에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대체로 대체수준을 밑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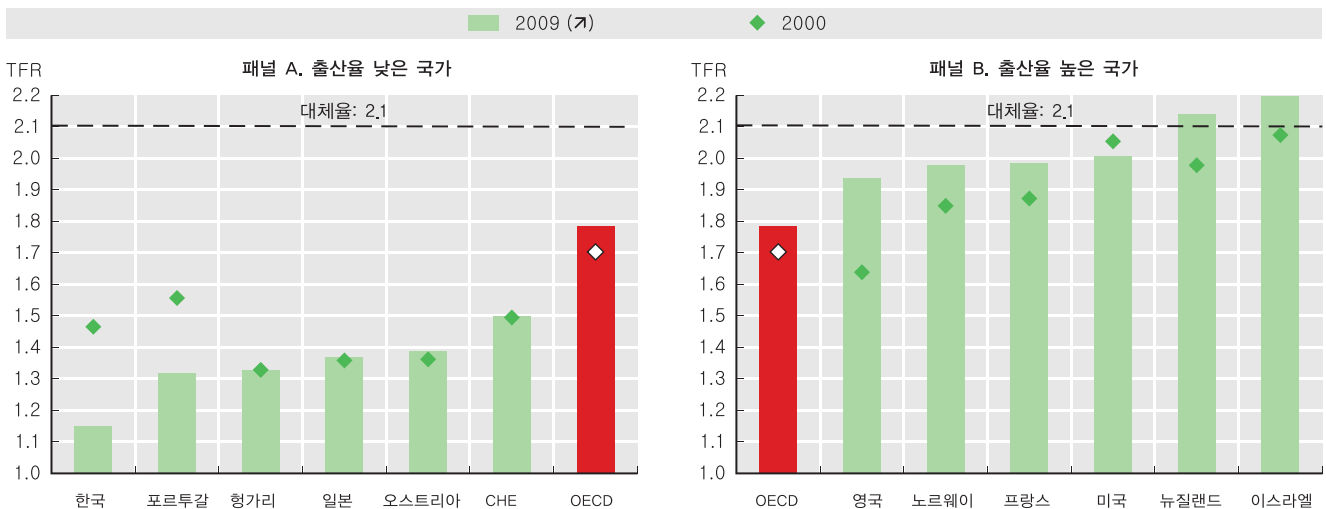
패널 A. 2009년 총 출산율 (☺)
(여성 한 명당 자녀 수)



패널 B. 1984년부터 2009년사이 총 출산율 차이



GE2.2.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최근 회복세도 컸다.



출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세계개발지표 (<http://data.worldbank.org>)와 각국 통계청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81703>

4. 일반 지표

3. 이민자

정의 및 측정

이민자는 우선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는 외국 국적자의 비율보다 훨씬 크다. OECD 국가의 이민 인구의 출신과 특징, 그리고 자료 출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OECD (2010)을 참조한다. 여기서 15세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민자 지위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한 2009 피사(PISA) 데이터에 관해서는 아래 SS3에서 다루고 있다.

이민자 대한 사회적 통합은 많은 OECD 회원국 정부가 당면한 주요 사안이다. 그 이유는 고용 촉진 때문이기도 하고 통합이 미흡하면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통합은 주로 서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등 국민들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는 국가에서는 젊고 숙련된 근로자들이 해외로 이주해 나가는 현상이 좀더 시급한 정책적 관심사일 것이다

2008년 OECD 국가별로 이민자 인구의 규모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2008년 OECD 인구의 약 12%가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었다. OECD 국가의 3분의 2가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열 명 중 한 명을 초과하고 있었다. (패널 A, GE3.1) 해외 출생자의 비율은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가 가장 높아서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을 초과했다. 대조적으로 멕시코와 칠레, 터키의 경우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이 미미했는데 이들 국가는 모두 비교적 저소득 국가들이었다.

1995년과 2008년 기간 중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OECD 모든 회원국에서 해외 출생자 비율이 증가했다. (패널 B, GE3.2)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증가세가 컸으며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OECD 평균 수준이거나 이를 밑돌았다. 이스라엘은 해외 출생자 비율이 크

게 감소했는데 이는 고령의 이스라엘 국민 중 해외 출생자 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의 자녀들은 OECD 청소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 수보다 훨씬 높았다. (GE3.2) 2009년 룩셈부르크의 경우 15세 청소년의 57%가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은 해외출신이었다. 호주와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은 세 명 중 한 명 꼴 이었고 총 14개 OECD 국가에서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아동에 관한 이 두 수치간의 차이는 상당히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15세 청소년 네 명 중 한 명은 최소한 한 부모가 이민자인데 본인이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열두 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최소한 한 명의 이민자 부모를 가진 아동의 비율이 증가했는데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8퍼센트 포인트 초과-는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이었다. (GE3.3) 독일, 스위스, 스웨덴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출생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외국 출생 부모를 둔 학생들의 수는 증가했다.

참고자료

OECD (2010),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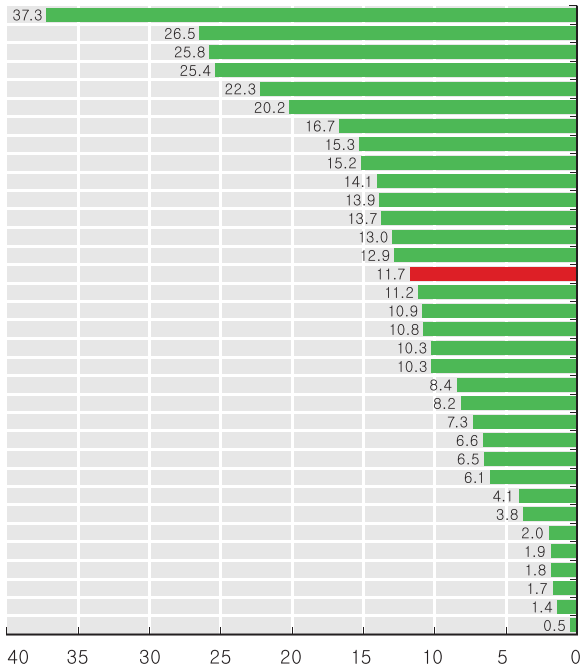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GE3.1, 패널 A: 칠레, 이탈리아, 일본, 한국 데이터는 외국 인 인구를 의미. 멕시코와 터키는 2000년, 그리스는 2001년, 칠레와 폴란드는 2002년, 독일은 2003년, 에스토니아는 2005년, 벨기에와 헝가리, 이스라엘과 슬로베니아는 2007년. 그림 GE3.1, 패널 B: 칠레와 에스토니아, 그리스, 폴란드, 슬로베니아, 터키는 변화 자료가 나와있지 않음. 멕시코는 1995/2000, 독일은 1995/2003, 벨기에와 헝가리, 이스라엘은 1995/2007,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1996/2008, 오스트리아와 체코는 1998/2008, 프랑스는 1999/2008, 슬로바키아는 20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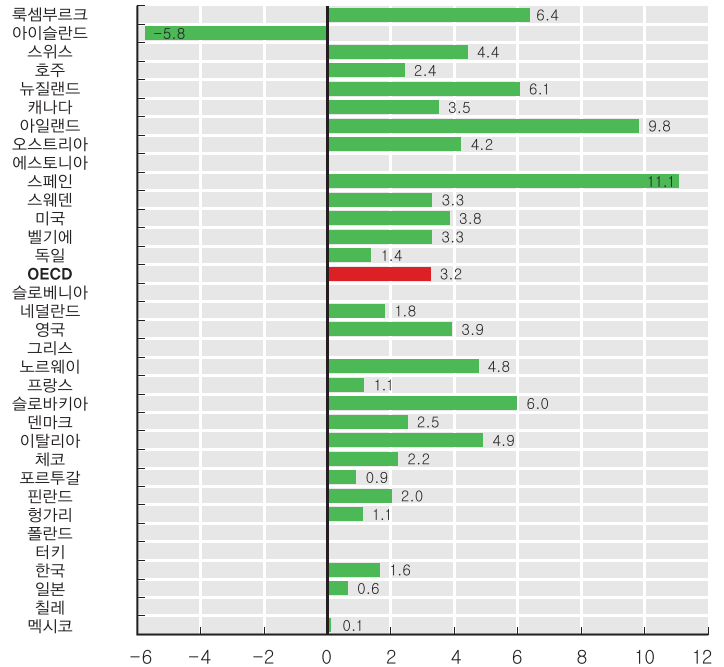
이스라엘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GE3.1. 일부 OECD 국가에서는 해외출생 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지난 13년간 크게 증가했다.

패널 A. 총 인구 중 해외출생 인구의 비율, 2008년
(또는 자료가 나와있는 가장 최근 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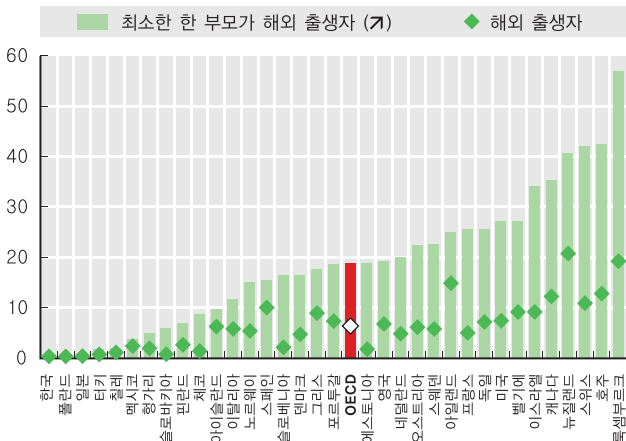


패널 B. 해외출생인구의 비율 변화
(1995-2008), 퍼센트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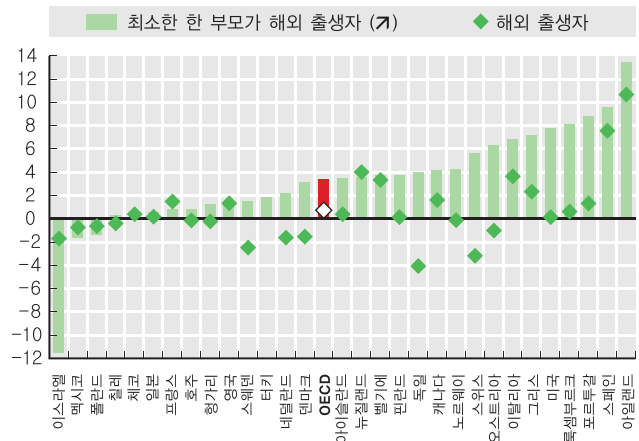
GE3.2. 15세 학생의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소한 한 부모가 해외 출생자이다.

2009년 최소한 한 부모가 해외출생자인 15세 학생 비율과 해외에서 출생한 15세 학생 비율



GE3.3. 1최소한 한 부모가 해외출생자인 15세 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최소한 한 부모가 해외출생자인 15세 학생과 해외출생자인 15세 학생 비율 변화, 2000-09



출처: OECD (2010),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migration/imo); OECD Database on 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Eurostat;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s; INE Chile; Central Bureau Statistics; CBS Israel; UN Population Division; OECD PISA 2000 and 2009 (www.pisa.oecd.org).

4. 일반 지표

4. 가족구성

정의 및 측정

가족 구성에 관한 자료는 갤럽 세계조사(Gallup WorldPoll)를 출처로 하고 있다. 갤럽 조사는 동일한 설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140여 개 국에서 실시된다. 모든 샘플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샘플추출 및 비 샘플추출 상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샘플 크기는 국가에 따라 1,000에서 4,000까지 다양하다. 범주는 응답자가 직접 평가하고 있다

결혼이나 동거 등 성인의 결합 패턴은 가족 구성에 대한 대략적인 지표가 된다. 결혼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결합과 동거같은 비 전통적 형태의 결합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가족 구성은 아동의 빈곤 가능성을 포함해 아동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은 2006-09년 OECD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결합이었다. 평균적으로 15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기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GE 4.1) 결혼은 특히 일본과 터키에서 일반적이었는데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기혼상태였다. 프랑스에서는 기혼 성인의 비율이 45% 미만으로 낮았고 칠레와 에스토니아에서는 특히 낮아 성인의 40% 미만이 기혼자였다.

동거는 결혼율이 낮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GE4.1)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성인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동거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스와 이스라엘, 일본, 한국, 터키에서는 동거가 흔하지 않았는데 성인 응답자의 0%가 동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혼 또는 별거 후 재결합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낮았다. 평균적으로 성인 중 4%만이 이혼했고 1%가

별거 상태였으며 이혼이나 별거 후 재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GE4.1) 이혼자 비율은 칠레, 이탈리아, 한국, 터키의 경우 0에서 1%로 낮았으며 체코와 에스토니아는 9%로 높았다. 별거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 국가는 칠레와 멕시코였다.

전체 성인 중 평균 6%가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었다. (표 GE4.1) 이 비율은 아이슬란드, 한국, 터키의 3%부터 프랑스와 헝가리의 1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녀간 기대수명의 차이가 큰 국가에서 사별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의 아동 -평균 75%-은 결혼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GE4.2) 아동의 15%가 편부모와 살고 있었고 11%는 동거 중인 부모와 살고 있었으며 1퍼센트만이 부모없이 살고 있었다. 편부모 가정의 아동 비율은 미국에서 특히 높았는데 아동 네 명 중 한 명이상이 편부모와 살고 있었다. 그리스와 룩셈부르크, 스페인은 열명의 아동 중 한 명 미만이 편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었다.

참고자료

OECD (2010a), OECD Family Database,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GE4.1의 경우, 슬로바키아와 스위스는 2006년, 체코는 2007년, 호주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는 2008년, 그 외 모든 국가들은 2009년 자료이다. 출처: Gallup World Poll, 2010.

그림 GE4.2의 경우, 캐나다, 일본, 스위스, 미국은 2005년, 호주와 뉴질랜드는 2006년 자료이다.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와 스위스는 동거부모와 결혼 부모를 함께 분류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와 스위스는 동거, 결혼 부모를 구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OECD 평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동은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 15세 미만으로, 나머지 모든 국가는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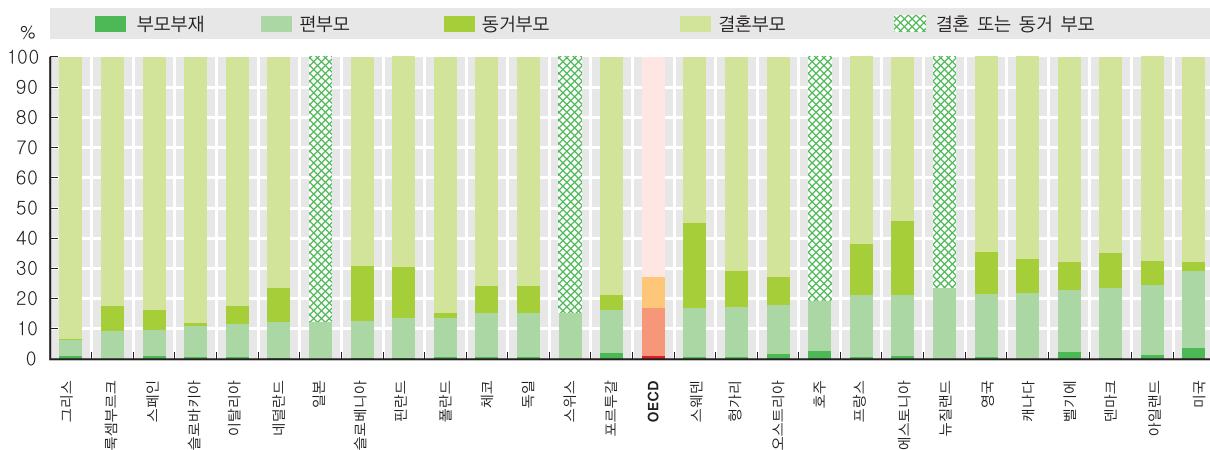
GE4.1. OECD에서 결혼은 가장 일반적인 관계형성의 형태이다.

15세 이상 응답자의 관계별 비율, 2010, 퍼센트

	기혼	동거	독신/결혼경험없음	사별	이혼	별거
호주	58	7	24	4	4	3
오스트리아	53	10	24	6	6	1
벨기에	55	12	19	8	4	0
캐나다	53	10	23	6	5	2
칠레	39	8	39	6	1	6
체코	55	4	25	6	9	1
덴마크	52	12	21	7	5	1
에스토니아	39	20	21	9	9	2
핀란드	53	18	16	5	7	0
프랑스	42	11	29	10	5	1
독일	55	7	22	9	5	2
그리스	64	0	27	6	3	1
헝가리	49	10	22	10	6	1
아이슬란드	49	20	23	3	3	2
아일랜드	54	4	31	4	2	3
이스라엘	62	0	29	4	5	1
이탈리아	58	2	27	7	1	2
일본	67	0	25	5	2	0
한국	57	0	39	3	1	1
룩셈부르크	58	5	26	5	4	1
멕시코	49	7	33	5	2	4
네덜란드	57	10	23	6	3	0
뉴질랜드	49	9	30	5	4	2
노르웨이	52	14	24	4	6	1
폴란드	57	1	29	9	3	0
포르투갈	58	4	24	7	4	1
슬로바키아	53	2	30	9	5	0
슬로베니아	52	8	28	9	3	0
스페인	55	5	30	6	2	2
스웨덴	48	20	21	1	5	1
스위스	54	2	29	6	7	1
터키	66	0	29	3	1	1
영국	49	7	28	7	6	3
미국	59	2	26	5	6	2
OECD	54	7	26	6	4	1
브라질	48	9	30	5	2	4
중국	79	0	16	4	1	0
인도	70	0	23	5	0	0
인도네시아	67	0	24	8	0	0
러시아 연방	53	3	21	12	9	2
남아공	27	1	59	10	1	2

GE4.2. 대부분의 아동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

부모의 관계 별 18세 미만 아동의 비율, 2008



출처: Gallup World Poll 2010 (GE4.1), EU-SILC 2008 (European Union Survey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rostat)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for non European countries (GE4.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81741>

4. 일반 지표

5. 노인 부양비율

정의 및 측정

노인부양비율은 물질적으로 타인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수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사용된 부양비율지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대비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이다. 여기서 사용된 노인부양율 추정치는 가장 최근의 “medium-variant” 인구 예측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자료는 UN 세계인구전망보고서(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08 Revision)에서 발췌했다.

노인부양율은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일 확률이 높은 노인 인구 대비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인구의 비율이다. 그러므로 비활동적 인구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잠재력이 있는 활동인구의 수에 대한 노인 관련 지표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의 연령구성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노인부양율의 변화는 과거와 현재의 사망률, 출산율, 그리고 정도는 훨씬 덜하지만 순이주율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으로 2008년 OECD 국가에서는 노인 한 명당 근로연령인구가 네 명이었다. (패널 A, GE5.1) 터키(열명)와 멕시코(아홉 명)는 이 평균치를 훨씬 앞지른다.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노인 한 명당 근로인구가 세 명 미만이다.

부양비율은 향후 40년간 모든 OECD 국가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B, GE5.1) 터키와 멕시코는 노인 한 명당 여섯 명 이상의 근로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많은 OECD 국가에서는 노인 한 명당 두 명 미만의 하락이 예상된다. 현재 부양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 가장 큰 하락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향후 40년간 국가마다 부양율이 비슷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부양율 변화 및 향후 예상 패턴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GE5.2) 차트는 국가간 부양율의 향후 수렴 패턴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양율이 비슷해지는 주된 이유는 OECD 지역의 출산율 수렴 효과이다. 부양율 예측은 향후 40년간의 예상 출산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부양율이 정책상의 문제를 야기시킬지 여부는 부분적으로는 65세 이상 인구의 보건 및 노동시장 참여에 달려 있는데 이들 요소는 노인들이 스스로를 부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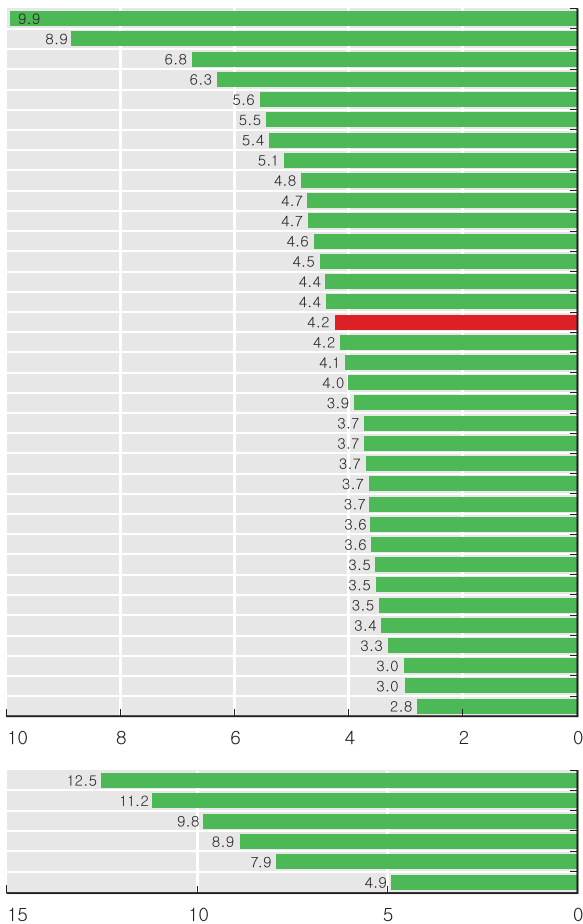
OECD (2011), Pensions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pensions/PAG).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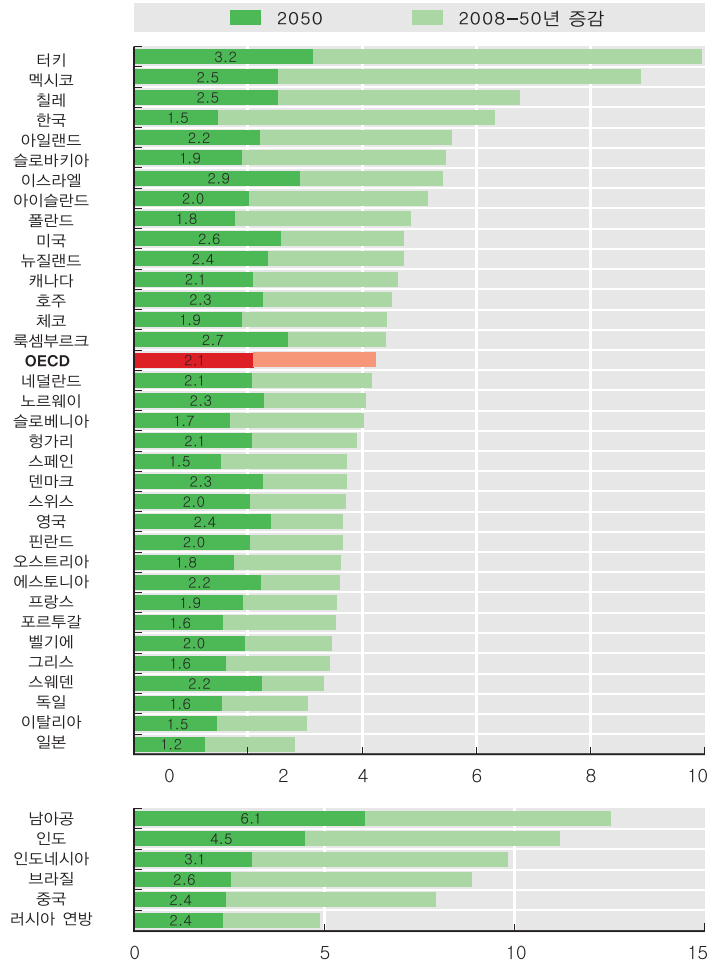
이스라엘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GE5.1. OECD지역에서 인구는 고령화되고 노인 부양율은 절반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패널 A. 2008년 노인부양율 (↳)
연금연령자(65세 이상) 한 명당
근로연령자(20-64)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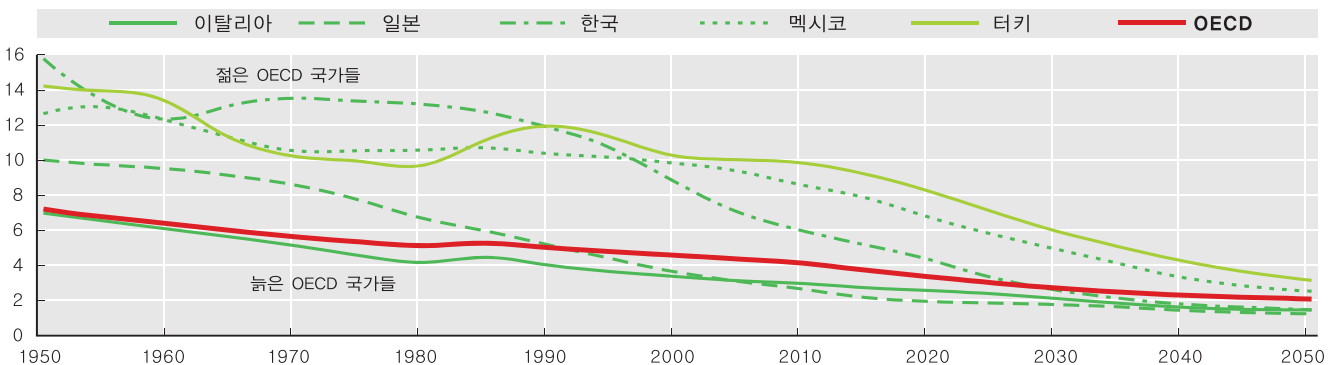


패널 B. 2008-50년 노인부양율 감소
노인부양율, 2008년과 2050년



GE5.2. OECD지역 노인부양율 수렴

몇몇 국가에서 연금연령자(65세 이상) 한 명당 근로연령자(20-64) 수, 1950-2050



출처: OECD (2011), Pensions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ial/pensions/PAG);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08 Revis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81760>





5. 자활 지표

1. 고용
2. 실업
3. 교육성과
4. 연금수급가능기간
5. 교육비 지출

정의 및 측정

급여, 수입 또는 가족의 소득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한 한 시간 동안 일한다면 질병, 휴가, 노사분규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해도 고용된 것으로 본다. OECD 국가의 노동력 조사 자료는 조사대상주간(survey reference week) 동안의 이러한 정의를 따른다. 고용의 기본적인 지표는 고용상태인 15-64세 근로연령인구의 비율이다. 이 고용률은 연령별, 성별, 학력별, 국적별로 표시된다. 임시직 근로자들은, 근무 기간에 제한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근무 종료일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급여 근로자들이다. 국가별 정의는 대체로 이러한 정의를 따르고 있지만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09년, OECD 지역의 고용률은 거의 양극화되었다. (패널 A, SS1.1) 스위스의 고용률은 80%에 육박한 반면 터키의 고용률은 45%에도 미치지 못했다. 북유럽 국가와 영어권국가들도 고용률이 높았다. 고용률이 특히 낮은 지역은 동유럽과 남부 유럽 국가들이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여성 고용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었다.

경제 위기 때문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고용률이 감소했다. (패널 B, SS1.1) 대부분 OECD 국가에서 2009년 고용률은 2007년에 비해 낮았다.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에서는 고용률이 4퍼센트 이상 하락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위기

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률 감소 추세가 역전되었다. 폴란드는 이 기간 고용률이 2% 증가했고 독일 역시 비교적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중장년층(prime age) 근로자들에 비해 임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SS1.2) 이러한 연령별 패턴은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났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고 노동 시장에서 활동중인 젊은 이들은 저학력자인 경우가 많으며 업무 경력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임시직 고용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다.

과거의 경기 침체기 때와 마찬가지로 2008-09 침체기 때도 청년들이 특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 (SS1.3) OECD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청년 고용률이 4%정도 감소했는데 전반적인 고용률 감소의 두 배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될 확률이 현저히 낮았지만 위기의 전반적인 영향은 남성 고용에서 더 두드러졌다. 자국민보다 고용될 확률이 다소 낮은 이민자들 역시 타격을 받았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SS1.1: 인도는 2005, 중국은 2007, 브라질, 이스라엘, 러시아 연방, 남아공은 2008년 자료. 패널B의 변화 비교 기간은 인도의 경우 2000/05, 중국은 2005/07, 남아공은 2005/08, 이스라엘과 러시아 연방은 2007/08, 브라질은 2008/08이다. 자료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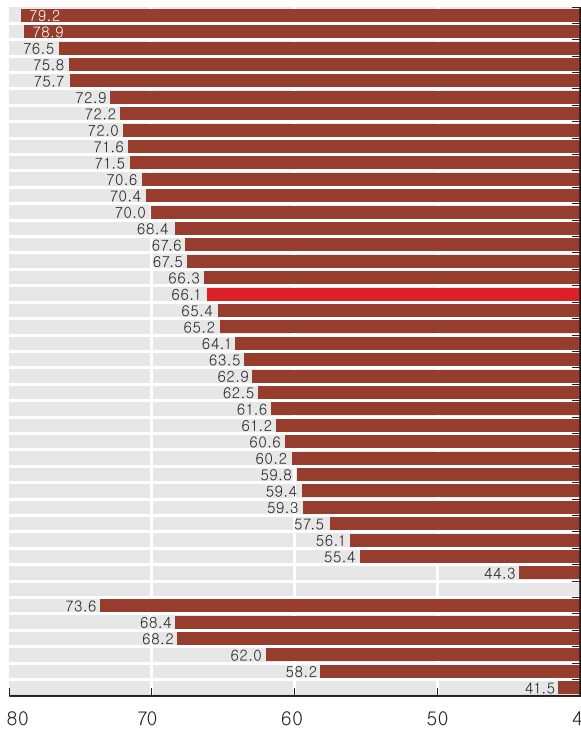
그림 SS1.2: 기간연령 (25-54) 임시직 고용을 오름차순으로 나열했다. 미국은 2005년, 호주는 2006년 자료이다.

그림 SS1.3: 25-54세 인구의 고용률을 오름차순으로 나열했다. 이스라엘 자료는 2007/08년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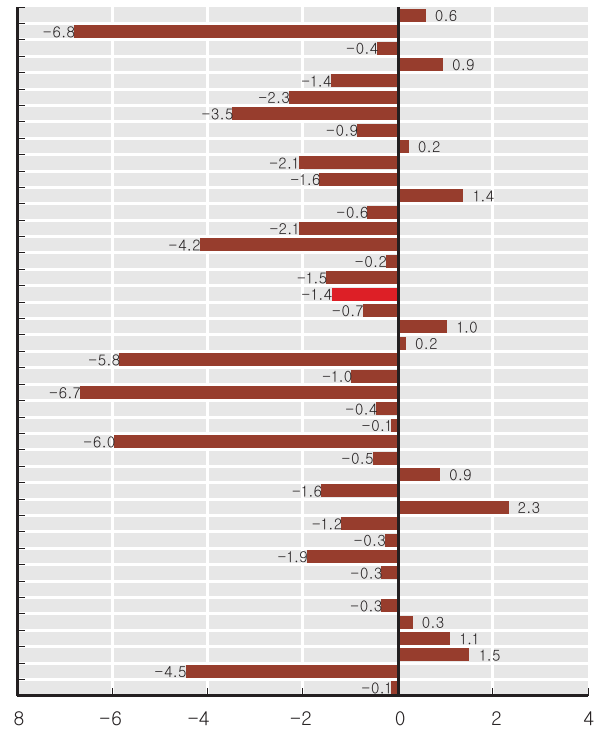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SS1.1. OECD 내에서도 고용률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위기에 타격을 입었다.

패널 A. 고용률, 15- 64세 인구, 비율, 2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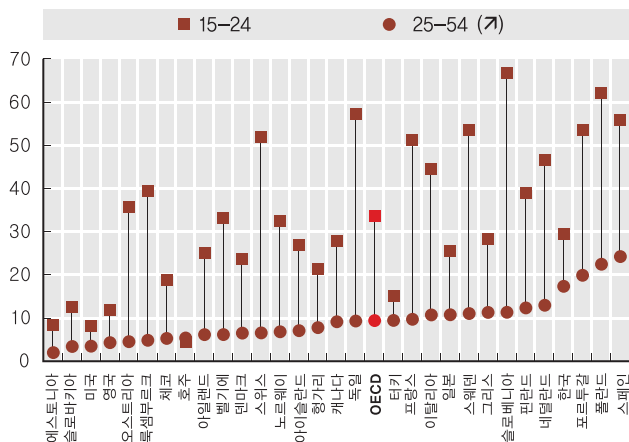


패널 B. 고용률 변화, 2007-09 (퍼센트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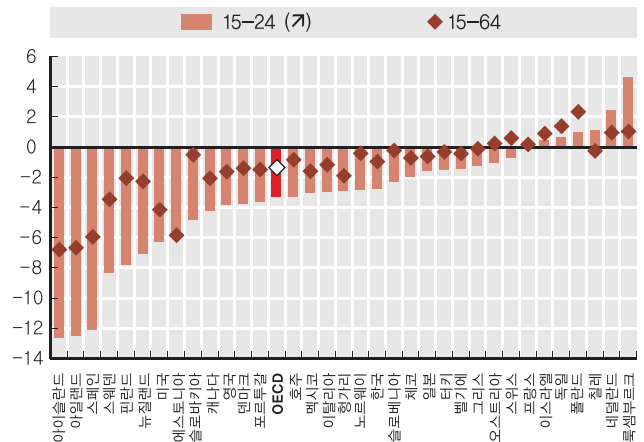
SS1.2. 청년들은 임시직으로 고용될 확률이 높다.

1층 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 연령별, 2009



SS1.3. 청년층이 위기에 특히 타격을 입었다. 연령별 고용률

변화, 2007-09 (퍼센트 포인트)



출처: OECD (2010),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and OECD (2010),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www.oecd.org/els/migration/imo), OECD-EU Database on Emerging Economie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emergingeconomies), Indonesia: ILO,

정의 및 측정

실업률은 근로상태이거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인구(15-64세) 대비 직장이 없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자료는 회원국의 노동력 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이들 자료에 사용된 국제노동기구(ILO) 표준화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들은 조사 대상 주간 중 최소한 한 시간도 근로하지 않았지만 현재 근로할 수 있고 조사 기간 전 4주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업에 나서지 않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실업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타인, 특히 보조금 제도(benefit system)에 의존하게 만든다. (패널 A, SS2.1) 실업은 또한 상당한 정신적 비용을 유발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지게 한다.

2009년 OECD 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스페인은 가장 낮은 노르웨이에 비해 여섯 배에 달했다. (패널 A, SS2.1) 노르웨이처럼 한국과 네덜란드도 실업률이 4%를 밑돈 반면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터키는 모두 실업률이 12%를 초과했다.

경제위기는 실업률에 대해 강력하면서 변동이 심한 영향력을 미쳤다. (패널 B, SS2.1)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OECD 평균 실업률은 2퍼센트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7퍼센트 포인트 이상의 큰 증가세를 보인 곳은 에스토니아, 스페인, 아일랜드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실업률 감소에 성공한 나라는 독일, 이스라엘 폴란드였다. (패널 B, SS2.1) 남성 실업률이 여성 실업률보다 취업난에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남성 고용비율이 높은 건설경기의 급격한 축소는 많은 국가에서 성별에 따른 실업률 차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취업난이 있을 때는 대개 청년들이 실업상태에 놓일 확률이 크며 타격도 심하게 받는다. (SS2.2) 이들은 임시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고용 시장에 최근에 진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입선출” 원칙에 따라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된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스웨덴, 헝가리, 그리스, 슬로바키아에서는 여섯 명 중 한 명 이상이었다. 학력이 낮은 경우의 실업 패턴은 국가별로 차이가 훨씬 더 크다. (SS2.2)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민자들 역시 전체 인구 대비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SS2.3) 이민자 실업률 격차는 스페인과 벨기에, 스웨덴에서 특히 컸고 폴란드와 이스라엘, 헝가리의 경우 오히려 이민자들의 실업률이 약간 낮았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SS2.1: 인도는 2005, 브라질,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연방, 남아공은 2008년 자료. 패널B는 인도의 경우 2000/05, 남아공은 2005/08, 브라질과 중국은 2006/08, 이스라엘과 러시아 연방은 2007/08. 인도네시아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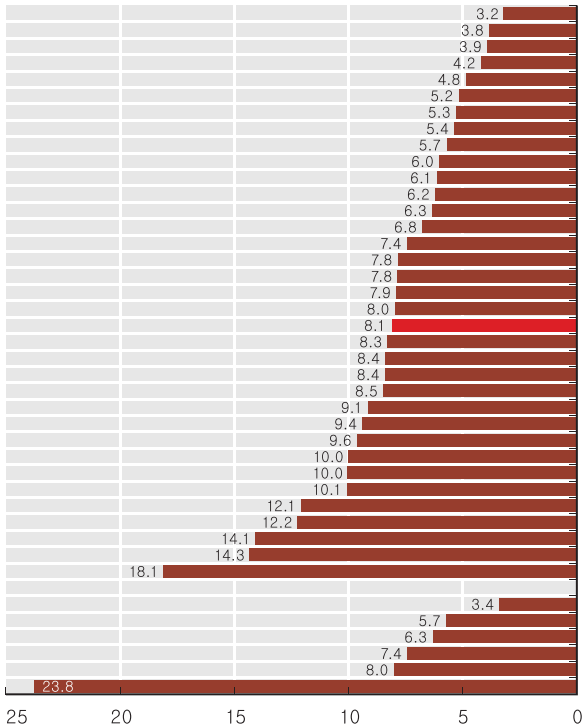
그림 SS2.2: 청년 실업률(15-24)과 15-64세 인구 실업률간의 차이를 내림차순으로 정리. 교육수준 별 데이터는 2008년 자료.

그림 SS2.3: 자료는 해외 출생자들의 실업률과 국내출생 인구의 실업률 차이를 내림차순으로 열거.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슬로베니아는 2007년, 호주와 폴란드는 2008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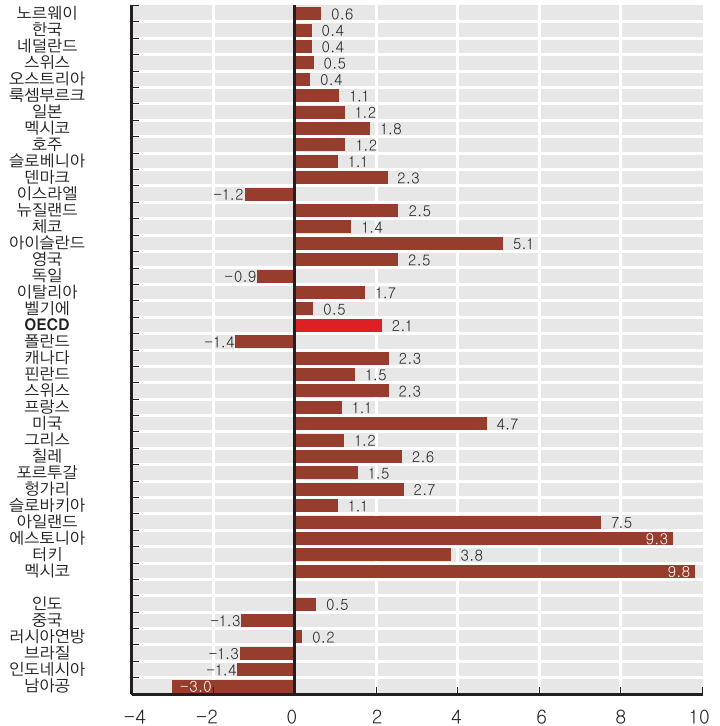
이스라엘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SS2.1. OECD내에서도 실업률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위기 시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이 상승했다.

패널 A. 2009년 15-64세 인구 실업률, 퍼센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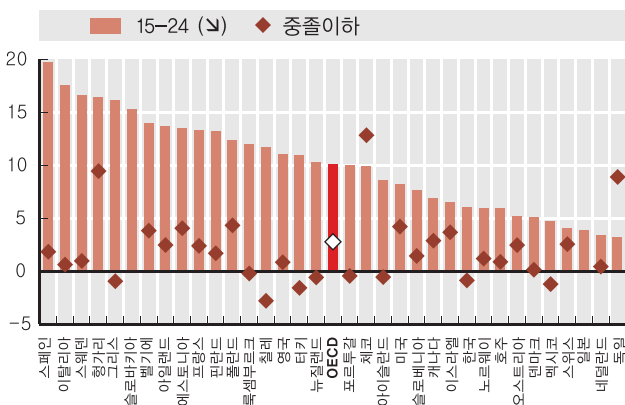


패널 B. 2007-09년 실업률 변화 (퍼센트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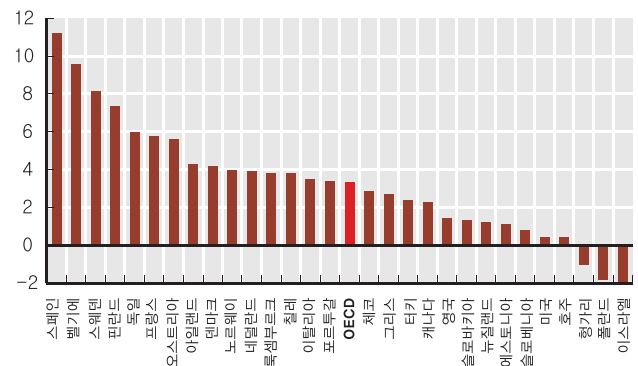
SS2.2. 청년 실업률이 훨씬 높다.

2009년 15-64세 인구의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과 저학력자 실업률 격차(퍼센트 포인트)



SS2.3. 해외출생자들의 실업확률이 더 높다.

2009년 국내 출생자와 해외출생인구의 실업률 차이 (퍼센트 포인트)



출처: OECD (2010),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and OECD (2010),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www.oecd.org/els/migration/imo), OECD-EU Database on Emerging Economie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emergingeconomies), Indonesia: ILO.

정의 및 측정

학업성취도는 OECD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통해 평가된다. PISA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국제적 수단이다. 가장 최근의 평가는 2009년에 있었는데, OECD 지역의 15세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 과학 테스트를 치렀다.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 하에 비교 가능한 테스트가 시행된다. PISA 테스트는 특정 국가의 커리큘럼에 매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여정을 계획한다든지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해석하거나 차트의 정보를 이해하는 등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에 지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각 주제별 OECD 평균 점수는 이들 주제가 PISA의 주요 영역으로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500점이 되었다. 그 다음에 제시된 OECD 평균은 해당 국가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읽기 영역의 2009년 PISA결과는 2000년 결과와 비교 가능한데 이 기간이 세계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다

각국 학생들의 평균 테스트 점수 외에 국내의 테스트 점수의 불균등 척도인 상위 십분위와 하위 십분위 점수 비율 (또는 90/10 비율) 역시 사용된다.

15세 학생들의 교육성과는 청년들의 자활에 대해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PISA 테스트에서의 성과는 15세까지 가족, 학교, 친구,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교육적인 자극의 누적 효과를 보여준다. 테스트 점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의 지표를 넘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2009년 15세 학생들의 읽기 점수는 한국과 핀란드가 가장 높았고 칠레와 멕시코가 가장 낮았다. (패널 A, SS3.1) 2000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읽기 점수는

칠레와 이스라엘, 폴란드는 2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패널 B, SS3.1)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 아일랜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호주이다.

일반적으로 2000-09 기간 중 읽기 점수의 상승은 2000년 테스트 결과가 낮은 국가에서 두드러졌다. (패널 B, SS3.1) 2000년의 읽기 점수와 2009년까지의 점수 변화 간의 상관관계는 OECD 국가에서 0.7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OECD 국가들은 읽기 성취도에 있어서 서로 비슷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 이미 읽기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5점이 더 상승한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

2009년 평균 읽기 점수가 높았던 국가들은 상위 점수와 하위 점수간 격차가 작은 경향을 보였다. (SS3.2) 읽기 점수의 차이가 작은 것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졌는데 상위 십분위의 점수가 하위 십분위의 1.5배 미만인 반면 격차가 큰 이스라엘의 경우 그 비율이 1.9가 넘었다. 평균 점수를 감안하면 OECD 읽기 점수의 불균등성은 특히 뉴질랜드에서 높았고 멕시코에서 낮았다.

점수의 불균등성과 평균 점수 간 관계는 2000-09 기간 중 변화의 경우에도 훨씬 더 강력하게 존재한다. (SS3.3) 평균점수가 크게 상승했던 국가들은 읽기 점수의 불균등성 역시 크게 하락했다. 칠레는 읽기 점수의 불균등성이 가장 크게 하락했고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프랑스였다.

참고자료

OECD (2010), PISA 2009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95298-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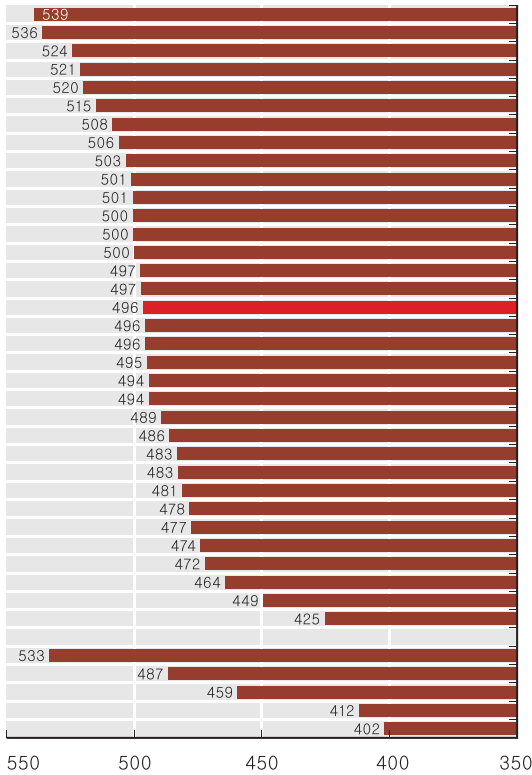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오스트리아는 2009년 자료 부재.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영국, 마카오, 중국은 2000년 자료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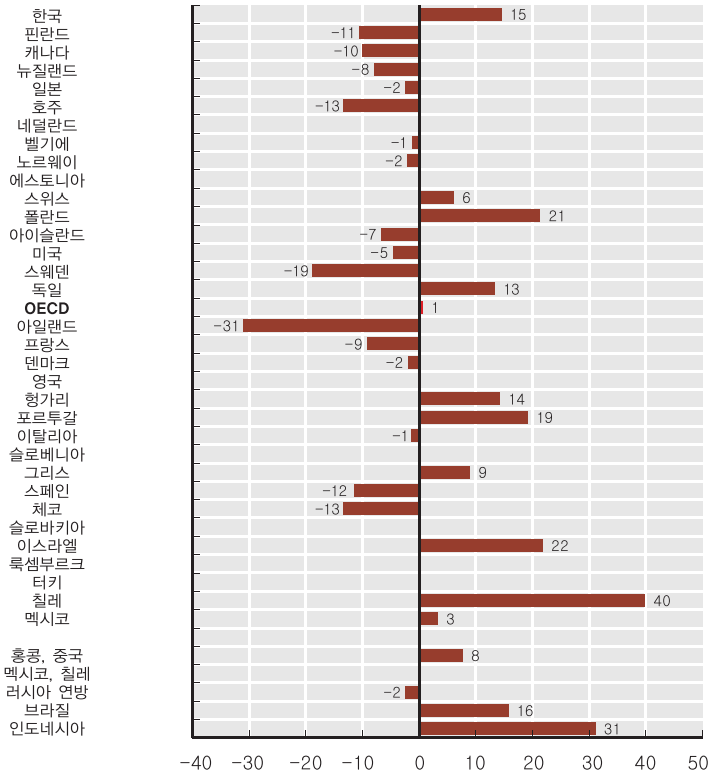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SS3.1. 2000년과 2009년 기간 중에 읽기 점수의 가장 큰 상승은 2000년 점수가 낮았던 국가에서 나타났다.

패널 A. 2009년 읽기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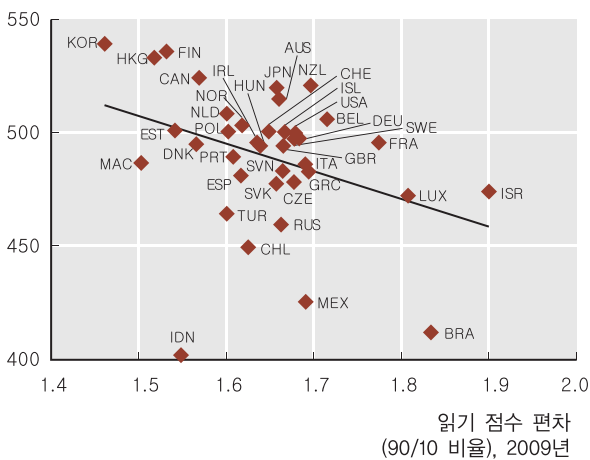


패널 B.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평균 읽기 점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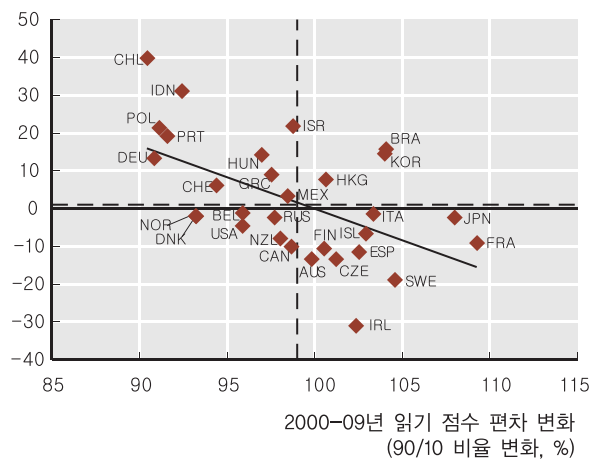
SS3.2. 읽기 점수가 높은 국가는 점수 편차도 작았다.

2009년 읽기영역 평균 점수



SS3.3. 평균 읽기 점수의 상승은 점수 편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2000-09년 읽기 평균 점수 변화



출처: OECD PISA 2000 and 2009 (www.pisa.oecd.org), OECD (2009), PISA 2009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Vol. I), OECD Publishing, Paris.

정의 및 측정

연금수급가능 기간은 남성과 여성이 2010년 보험수리적으로 중립적인 연금수급가능연령(여기에서는 공식 연금 수급 연령으로 설명)에 도달한 후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년수이며 정책 선택의 변수가 된다. 연금수급가능연령의 추정에 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은 OECD (2011)을 참조한다.

실제 퇴직 연령의 국제적 비교는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자료에서 나온 간접적 측정치에 따라 달라진다. 간접적 측정자료에서는 특정 연령 이상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노동 중단 평균 연령) 퇴직한 것으로 취급한다. 퇴직으로의 순 이동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가로 대신 추정한다. 이 간접적 지표는 평균 실질 퇴직연령이다. 공식적인 퇴직연령 역시 정확히 측정하기가 복잡한데 특히 퇴직이 고정된 연금 기여 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더욱 그렇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OECD (2011)을 참조한다.

평균 실질 퇴직연령은 40세 이상의 연속된(5세 단위로) 코호트 근로자 집단의 5년간 참여율 변화를 관찰하여 도출된다. 퇴직 후 년수는 유엔 세계인구추정 보고서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08 Revision) 자료에서 뽑아낸 퇴직 연령의 기대여명 추정치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OECD 국가의 가장 일반적인 공식 연금 수급 연령은 65세이다. (SS4.1) 60세 역시 매우 일반적인 연금수급가능연령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식 연령이 이보다 높거나 낮았는데 남성과 여성간에도 연령의 차이가 있었다. 남녀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여성의 연금연령이 낮았다.

연금수급가능기간을 보면 인구 고령화 시대에 연금 체제에 대한 재정적 압박 정도를 알 수 있다. 이탈리아(최고), 슬로베니아, 그리스, 프랑스의 경우 여성의 연금수급가능기간은 27년을 초과했다. 그리스(최고),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한국은 남성의 경우 20년을 초과했다. 아이슬란드, 멕시코,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의 연금 기간은 약 19년으로 특히 낮았고 남성은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에스토니아에서 대략 14-15년으로 낮았다.

남성은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연금 의존 기간이 몇 년 짧았다. (SS4.1) 11 개 국가에서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연금 연령이 낮았고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었다.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영국에서는 이 격차가 약 8년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이 연금 수급자 빈곤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급여구조와 전통적인 남녀간 급여 격차에 의해 더 악화될 수 있다.

사람들이 실제로 퇴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과 연금 수급이 가능해지는 연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SS4.2) 실제 퇴직 연령간 차이는 룩셈부르크가 가장 낮았고 멕시코가 가장 높았는데 이 두 국가간 차이는 남성의 경우 14년을 초과했다.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보다 늦게 퇴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터키와 스페인은 예외였다. 연금 수급권 대비 실제 퇴직 결정은 공식적인 연금수급가능 은퇴연령만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관련 요인들은 건강, 노동시장의 상황, 퇴직연금의 세금 처리, 개인 연금, 가족에 대한 의무, 배우자의 노동력 공급, 직장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인식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OECD (2011), Pensions at a Glance, OECD, Paris (www.oecd.org/els/social/pensions/PAG).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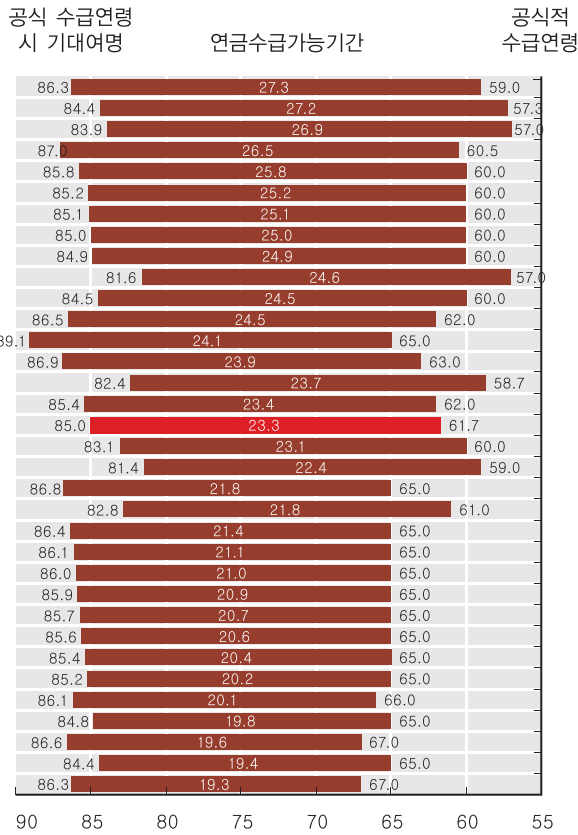
그림 SS4.1: 터키의 경우는 퇴직연령이 여성 41세, 남성 44.9세로 너무 동떨어져 있어 터키 자료는 그림에서 제외했다.

그림 SS4.2의 자료는 실제 근로 중단 연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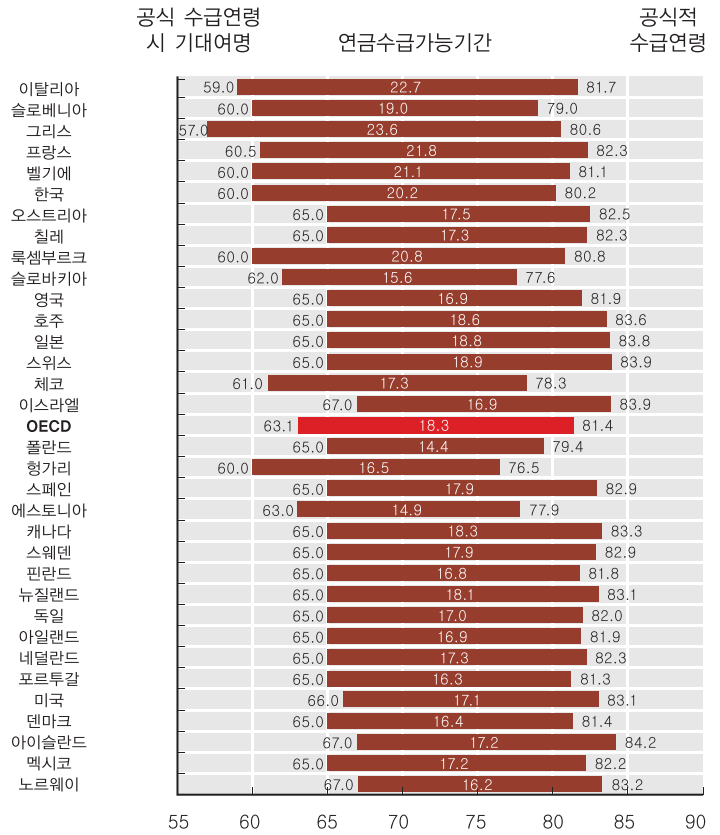
Information on data for Israel: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SS4.1. 평균적으로 여성의 연금수급가능기간이 남성보다 5년 더 길다.

패널 A. 퇴직 후 예상 기간 (년),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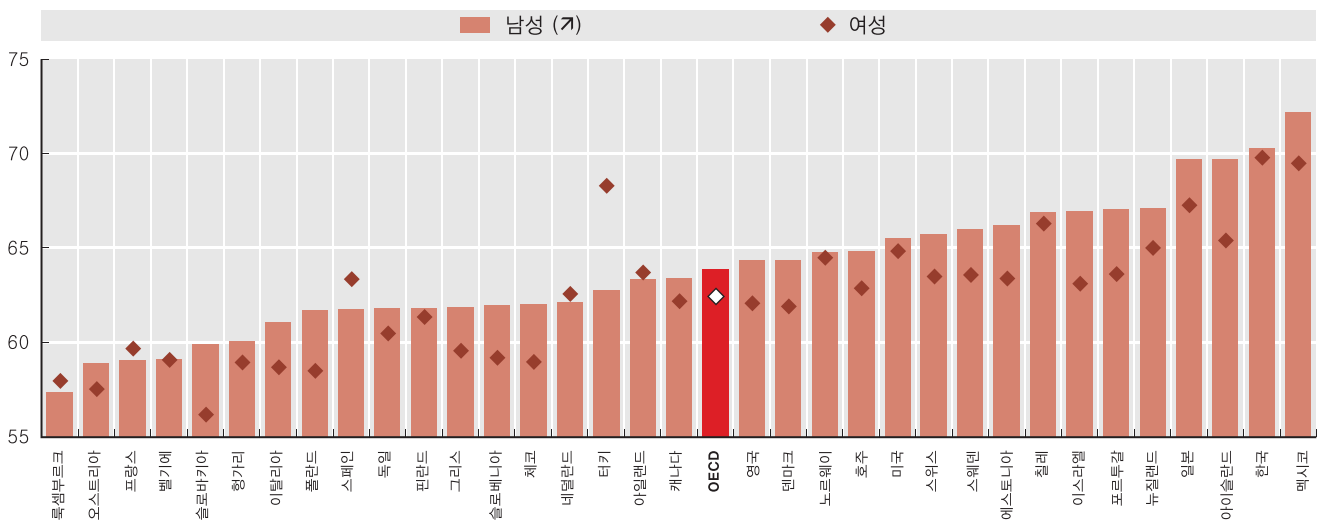


패널 B. 남성의 퇴직 후 기간, 2010



SS4.2. 남성이 여성보다 늦게 퇴직한다.

근로 중단 평균 연령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www.oecd.org/els/social/pensions/pag), life expectancy estimates are from th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08 Revision.

정의 및 측정

1인당 교육비 지출 자료는 초, 중등 교육의 총 연간 지출액과 동일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수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7년 자료이다. 그림은 공적, 사적 지출액을 종합한 것이며 각 연도의 구매력지수 환율을 기준으로 미 달러로 표시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출액 비교는 2000년 액수를 기준으로 했다. 누적 지출액은 6세부터 16세 사이의 연령별 누적 지출액이 이 기간 중 총 공적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했다.

PISA 읽기 점수 자료 출처는 SS3에 기술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는 2007년 의무교육에 연간 학생 한 명당 8천 달러를 지출했다. (패널 A, SS5.1) 룩셈부르크는 학생 한 명당 만5천 달러를 훨씬 넘게 지출했다. 지출액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룩셈부르크에 비해 거의 3분의 1을 덜 지출했다. 터키의 지출액은 천 달러를 넘는 수준이었다. 칠레와 멕시코도 지출액이 비교적 낮았다.

1인당 공적, 사적 교육비 지출은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증가했다. (패널 B, SS5.1) 영국과 아일랜드는 1인당 지출액을 각각 100%와 60%만큼 크게 증가시켰다. 대조적으로 2007년 덴마크, 이스라엘, 뉴질랜드의 지출 수준은 2000년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 지출액이 비교적 적은 두 개 국가 -체코와 폴란드- 역시 1인당 지출액이 상당히 증가했다.

OECD 지역 전체에 걸쳐 조기 의무교육은 의무교육 후반부와 동일한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SS5.2) 평균적으로 6세부터 11세까지 의무교육의 첫 절반의 기간 중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의 약 50%

가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50%는 11세부터 16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의 후반부에 사용되고 있었다. 가장 큰 대조를 보인 곳은 칠레와 핀란드였다. 칠레의 경우 지출액의 60% 이상이 의무교육 기간의 전반부에 사용되고 후반부에는 40% 미만만이 사용되었다. 핀란드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 40%가 전반부에 60%가 후반부에 사용되었다.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15세 학생들의 평균 읽기 점수 상승과 같은 기간 6세부터 16세 사이 교육 지출액의 증가 간에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SS5.3)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커리큘럼, 교사 교육과 인센티브, 학교 외적인 영향 등 다른 요인들이 최소한 의무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읽기 점수의 상승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OECD (2010), PISA 2009 at a Glance,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095298-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SS5.1: 양쪽 비교 모두 헝가리가 빠져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에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터키가 빠져 있다. 최근 1인당 지출액은 2007년 자료인데 그리스 (2005), 터키 (2006)는 예외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출액 변화 비교는 2000년과 2007년 자료 비교인데 -2000년 액수 기준 - 그리스(2000-05), 룩셈부르크 (2001-07), 뉴질랜드(1999-2007), 영국(1999-2007)는 예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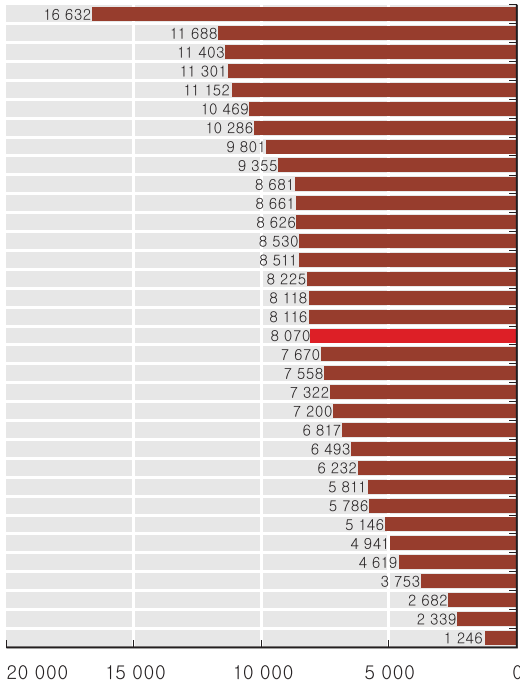
그림 SS5.2: OECD 평균에는 캐나다와 터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핀란드는 후반부에 가장 많은 투자를, 칠레는 전반부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들이다.

그림 SS5.3: 지출액 그림에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가 빠져 있다. 지출액 데이터 주석은 그림 SS5.1을 참조한다. PISA 2000에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터키는 빠져 있다. OECD (2011)은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2000 읽기 점수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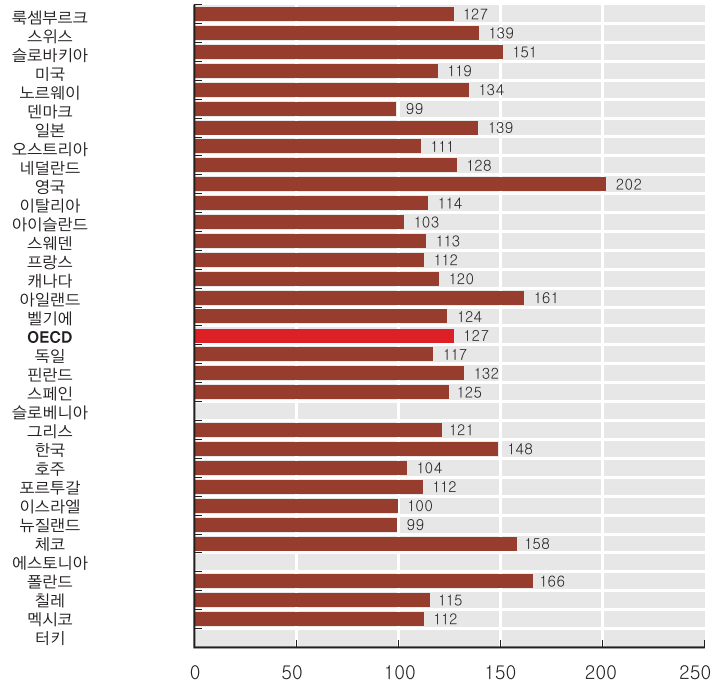
이스라엘 관련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SS5.1.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인당 교육비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패널 A. 1인당 의무교육비 지출(공적 & 사적), 2007, USD 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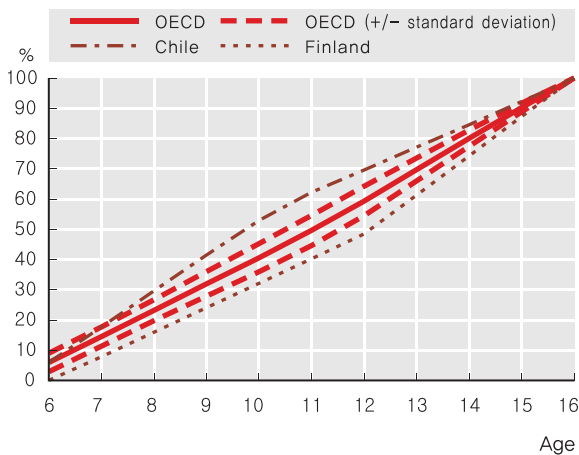


패널 B. 2000년과 2007년 의무교육비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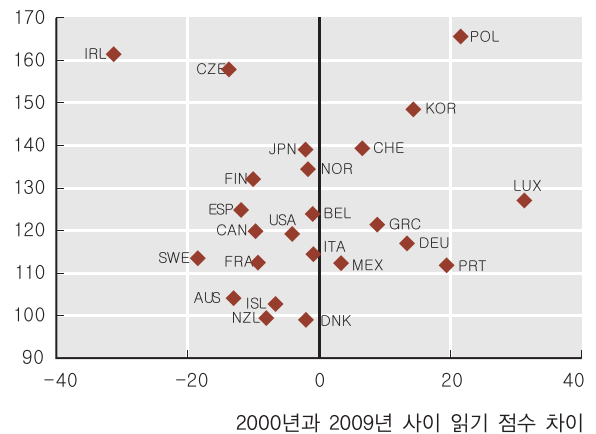
SS5.2. 칠레는 의무교육 전반부, 핀란드는 후반부에 좀더 지출하고 있다.

6-16세 연령별 공적 누적 교육비 지출



SS5.3. 교육비지출 변화와 평균 PISA 읽기 점수 변화 간에는 연관성이 없다

2000년 대비 2007년 의무교육비 지출 비율 (2000년 = 100)



출처: OECD Education Database, 2010 (www.oecd.org/education/database), OECD PISA 2000 and 2009 (www.pisa.oecd.org).





6. 형평성 지표

1. 소득불평등
2. 빈곤
3. 생계곤란
4. 저소득탈피에 필요한 소득
5. 공공사회지출

정의 및 측정

소득 불평등 데이터는 사람들의 가구 가처분소득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GE1의 “정의 및 측정” 참조) 사용된 주요 소득불평등 지표는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의 값은 “완전한 평등” 상태(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인 경우의 0부터 “완전한 불평등” 상태(모든 소득이 인구 중 최고소득층에게 집중)인 경우의 1사이에 분포한다. 기대수명 데이터는 HE1 지표의 “정의 및 측정” 에서 다루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물질적 자원이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어떤 사람들은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득불평등이 갈등을 유발하여 협동을 제한하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측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Wilkinson and Pickett, 2009) 정책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불평등 수준보다는 불평등의 변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다.

2000년대 후반 OECD 지역에서 소득불평등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EQ1.1, 패널A) 칠레, 멕시코, 터키는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았다. 영어권 국가들은 OECD 평균수준 또는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남부 유럽과 지중해 국가들 역시 평균보다 높은 소득불평등을 보였다. 북유럽국가들과 유럽대륙 국가들의 경우 불평등이 평균보다 낮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은 OECD 전역에 걸쳐 다소 증가했다. (EQ1.1, 패널B) 그러나 국가별, 기간별로 양상은 다양했다. 소득 불평등은 체코와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 패턴은 동일하지 않았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칠레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실제로 상당히 감소했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비교적 높았다. (EQ1.2) OECD에서 가장 불균형이 심한 국가에는 칠레, 멕시코, 터키 등 가장 빈곤한 국가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모두 비교적 부유하고 평등한 편이었지만 소득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는 불평등의 강도가 심했다. (EQ1.2에서 기준선 위) 미국도 소득을 감안하면 상당히 불평등한 반면(EQ1.2에서 기준선 위)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는 비교적 저소득 국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평등한 편이었다. (EQ1.2에서 기준선 아래)

소득이 빨리 증가하는 국가라고 해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EQ1.3) 때로는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 불평등의 증가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반면 빠른 소득 증가가 좀더 평등한 사회라는 더 큰 편익을 가져다 준다는 의견도 있다. OECD 소득 불평등 자료는 이 두 가지 주장 중 어떤 것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1), *Causes of Growing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Wilkinson, R. and K. Pickett (2009), *The Spirit Level: Why Equality is Better for Everyone*, Penguin Books, London.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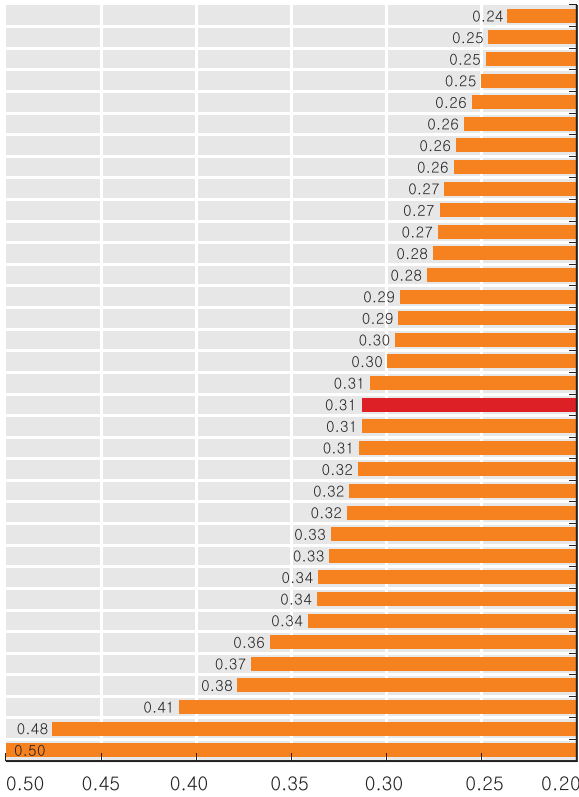
그림 EQ1.1, 패널 A: 그리스와 스위스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지니계수.

그림 EQ1.1, 패널 B와 EQ1.3: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의 경우 변화 자료가 나와있지 않다. 호주, 칠레, 이스라엘, 포르투갈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변화 데이터가 나와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2000년까지의 변화 데이터가 나와있다. EU-SILC로부터의 현 자료는 이들 국가의 경우 이전 연도 자료와 비교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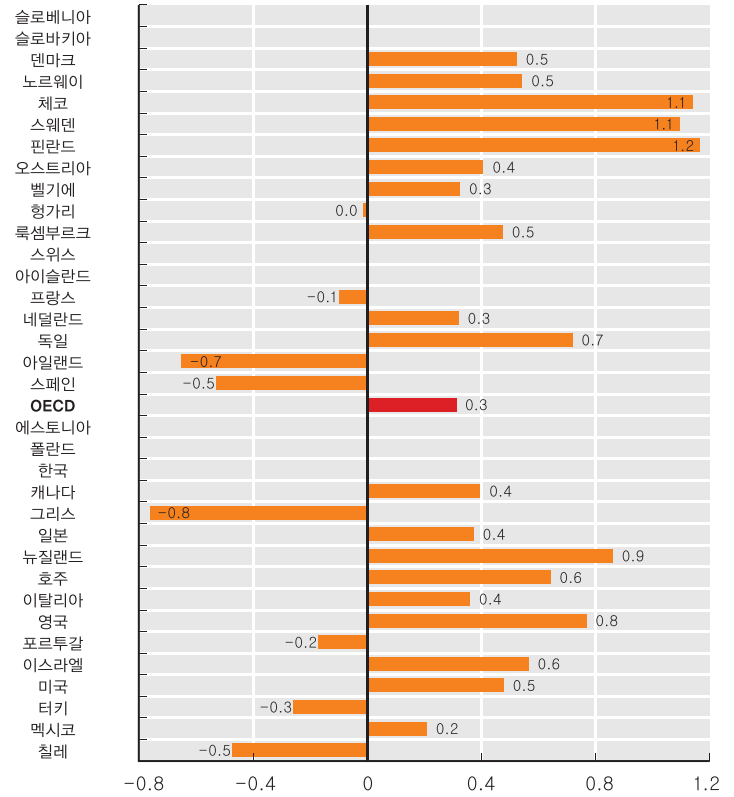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EQ1.1. 소득불평등은 증가해왔다.

패널 A. 지니계수, 200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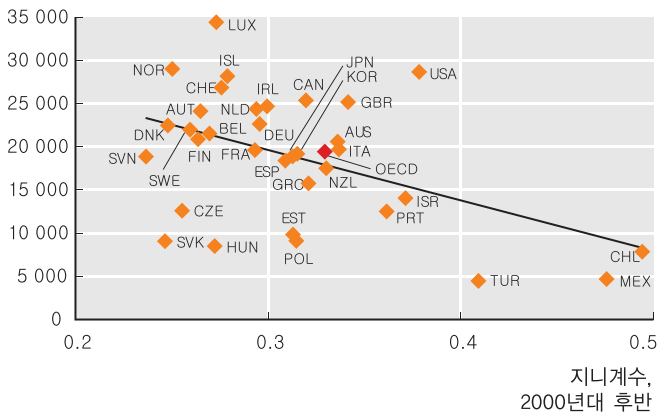


패널 B.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후반 사이 지니 계수의 연평균 변화,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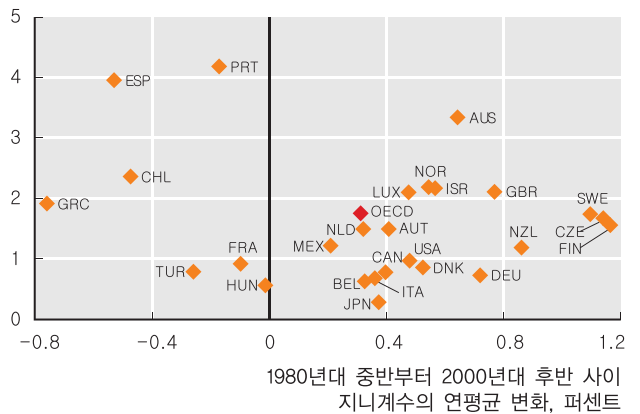
EQ1.2. 부유한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2007년 중위 균등화 소득, 현재 가격 및 PPP 환율 기준



EQ1.3. 소득증가가 빨리 이루어졌다고 해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 중위 가구소득의 연평균 변화, 퍼센트



출처: Provisional data from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81874>

정의 및 측정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은 국가별로 시기별로 다르다. 그러므로 OECD 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빈곤 측정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빈곤 측정의 출발점도 국가별 컨설턴트들이 제공하는 균등화 가구 가치분 소득이다. (EQ1. 소득 불평등의 “정의 및 측정” 참조) 균등화 가구소득이 각국의 중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면 빈곤한 것으로 분류된다. 상대적 소득 기준선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유한 국가가 빈곤기준선이 높다는 의미이다. 부유한 국가의 빈곤 기준선이 더 높은 것은 빈곤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통상적이고 표준으로 인식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율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빈곤의 정도는 소득분포의 가장 낮은 분위에 속한 사람들의 상대적 수를 측정하여 평가된다. 한 사회의 평등문제는 비교적 소외된 사람들의 경우에 더 심각한 편이다. 그러므로 빈곤 측정값은 소득불평등 측정값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다. 빈곤문제는 노인과 아동 등 특정 집단의 경우 더 심각한 경향이 있다. 이들 집단은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평균 빈곤율은 11%이다. (패널 A, EQ2.1) 빈곤율은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체코와 덴마크의 빈곤율은 20명 중 한 명 꼴이었다. 다른 북유럽 및 유럽 국가들 역시 빈곤율이 낮았다. 영어권 국가, 지중해 연안 국가, 그리고 두 개 OECD-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빈곤율이 높았다.

OECD 지역에서 빈곤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다소 증가했다. (패널 B,

EQ2.1)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벨기에와 그리스, 칠레, 포르투갈은 빈곤율 감소에 가장 성공한 국가들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았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 빈곤율이 큰 문제였다. (EQ2.2)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고 아동 빈곤율이 낮은 반면 터키는 연금수급자의 빈곤보다는 아동빈곤이 큰 문제였다. 미국과 칠레, 멕시코는 전반적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노인과 아동의 빈곤율이 둘 다 높은 편이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인과 아동 빈곤율이 둘 다 낮았다.

빠른 경제성장을 빈곤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EQ2.3) 그러나 지난 세대 OECD 지역에서 경제 성장과 빈곤은 강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가구소득 증가 사이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매우 빠른 소득증가세를 보였으나 빈곤도 빠르게 증가한 반면 벨기에에는 소득증가가 정체상태였으나 빈곤은 크게 줄어들었다.

참고자료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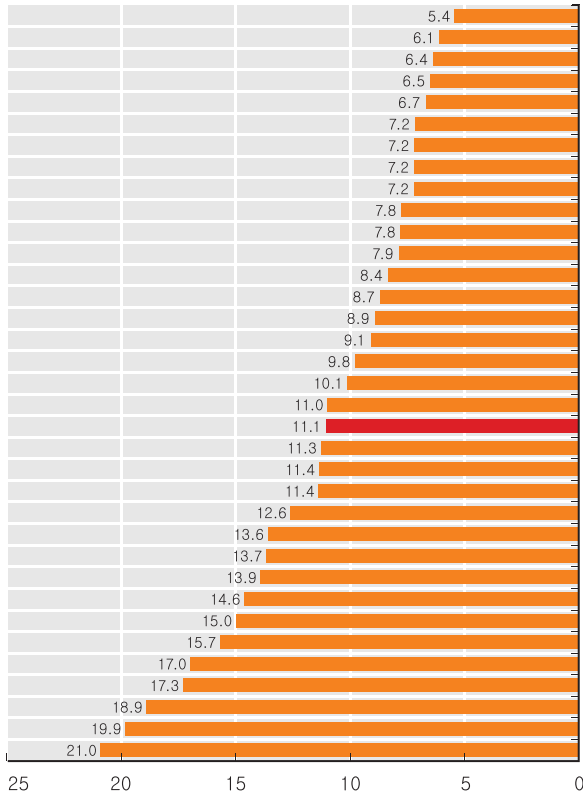
그림 EQ2.1, 패널 A: 그리스와 스위스의 경우 2000년대 중반의 빈곤율 계수.

그림 EQ2.1, 패널 B와 EQ2.3: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 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의 경우 변화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다. 호주와 칠레, 이스라엘, 포르투갈은 1990년대 중반부터의 변화 데이터가 나와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변화 데이터가 2000년까지 나와있어 EU-SILC에서 나온 현 데이터는 이들 국가의 경우 이전 연도 자료와 비교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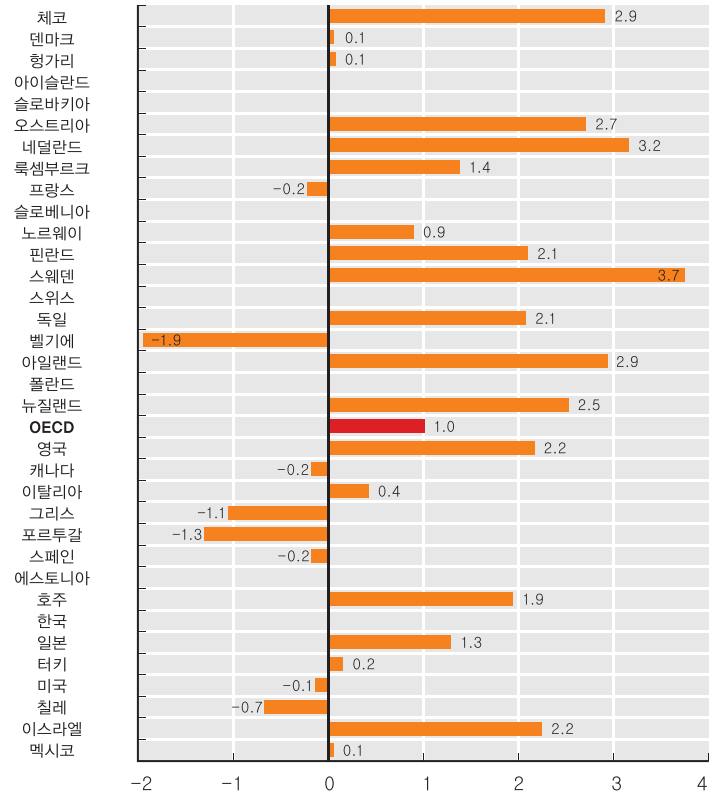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EQ2.1. 빈곤은 증가해왔다.

패널 A. 2000년대 후반 중위 균등화 가구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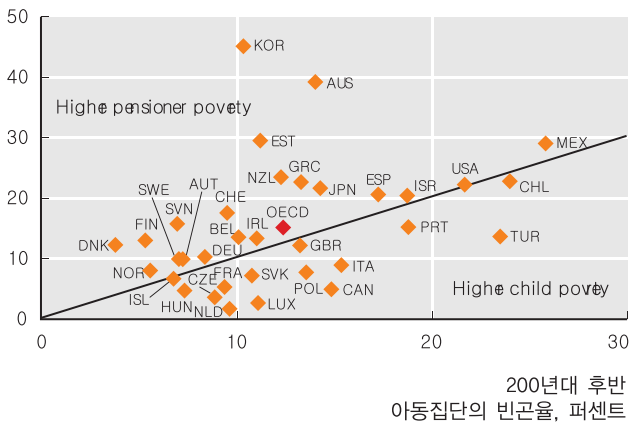


패널 B.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후반 사이 빈곤율의 연평균 변화,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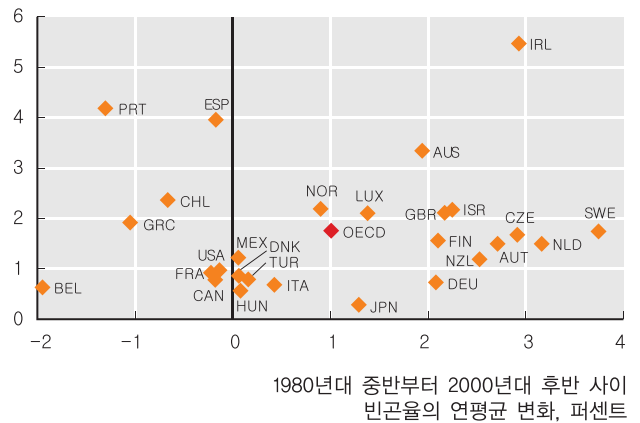
EQ2.2. 노인 빈곤인가 아동빈곤인가?

2000년대 후반 퇴직연령 집단의 빈곤율



EQ2.3. 소득증가는 빈곤의 해결책이 아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 사이 중위 가구 소득의 실질 연평균 변화, 퍼센트



출처: Provisional data from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정의 및 측정

생계곤란에 관한 자료는 갤럽 세계조사(Gallup WorldPoll)를 출처로 하고 있다. 갤럽 조사는 동일한 설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140여개국에서 실시된다. 모든 샘플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샘플추출 및 비 샘플추출 상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샘플 크기는 국가에 따라 1,000에서 4,000까지 다양하다. 이 질문에 대한 갤럽 자료는 스위스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사용된 데이터는 “요즘 당신의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보기로는 다음 네 가지 응답이 등장한다. 현 소득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 현 소득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 현 소득으로는 생계가 곤란하다. 현 소득으로는 생계가 아주 곤란하다. 제시된 통계자료는 마지막 두 개 응답률을 합해서 제시하고 있다. 계산된 비율에 모르겠다 와 응답 거부는 빠져 있다. 이러한 무응답은 이탈리아는 11%였고 러시아 연방과 벨기에에서도 비율이 높았다(7%). 가구소득데이터의 출처는 CO1에, 소득 분포는 EQ1과 EQ2에 설명되어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의 척도이며, 0 -완전한 평등-부터 1 -모든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는지 여부는 대안적인 평등 측정값이다. 이 값은 주관적인 요소-스스로 평가한 어려움, 아마도 해당 지역의 기준과 비교한 어려움-와 지출 측면을 둘 다 반영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여기에서 평등

성 지표로 사용된 기타 소득 및 소득 불평등 값으로는 대변될 수 없는 것들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헝가리와 터키, 그리스, 멕시코 국민의 절반가량이 생계곤란을 겪고 있었다. (패널 A, EQ3.1) OECD 평균은 네 명중 한 명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아이슬란드만 제외하고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은 열명 중 한 명 이하였다.

경제 위기는 많은 국가에서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들의 수에 영향을 미쳤다. (패널 B, EQ3.1) 그러나 차이는 국가별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다.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 포르투갈은 생계곤란자들의 수가 줄어들어 비교적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리스와 헝가리,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터키에서는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다.

생계곤란은, 최소한 OECD 내에서는 상대적이기보다는 절대적 평등성 지표에 가까워 보인다. (EQ3.2와 EQ3.3) 소득불평등과 생계곤란 질문 간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연관성은 절대적인 가구소득과 불평등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빈곤 대비도표는 소득불평등과 유사한 관계를 보여준다.) 두 상관관계 모두 그 지표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생계곤란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수를 감안하면 지니계수가 특히 높다. 이것은 아마도 멕시코의 많은 빈곤층 주민들이 생계를 위한 작물을 생산하여 낮은 시장 소득을 보충하는 소작농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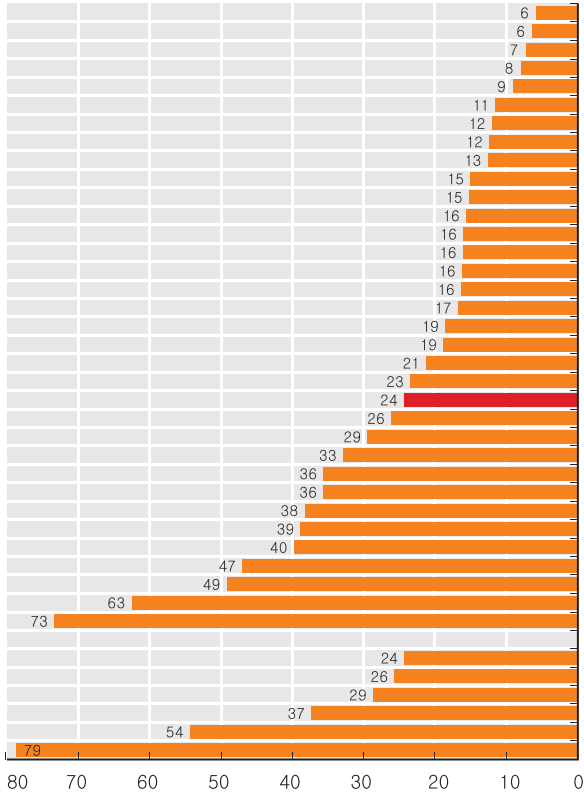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EQ3.1: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차이에 관한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다. 프랑스는 2006/10, 에스토니아와 이스라엘, 남아공은 2007/09,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20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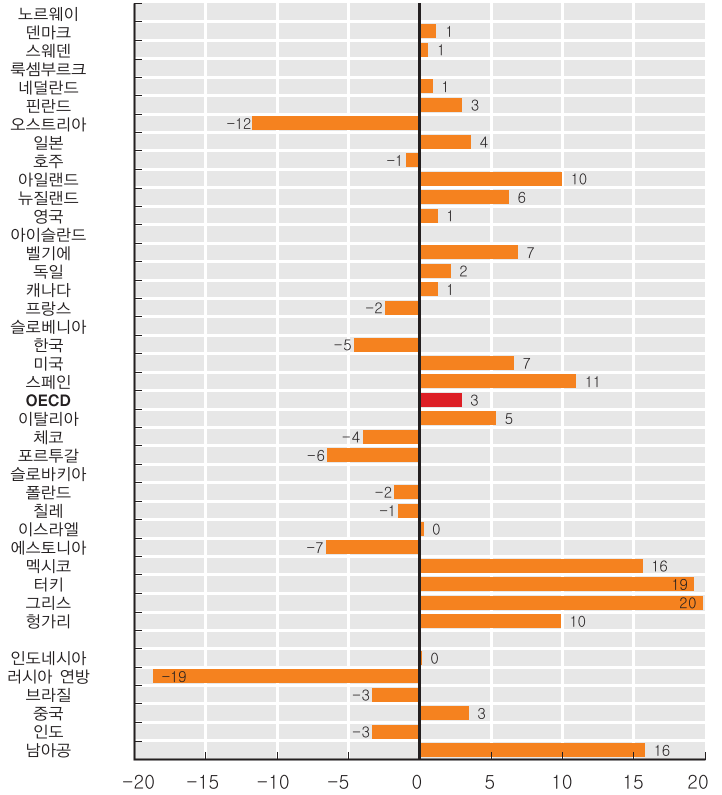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EQ3.1. 주민의 25%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며 그 비율은 경제위기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패널 A, 현 소득으로 살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 2010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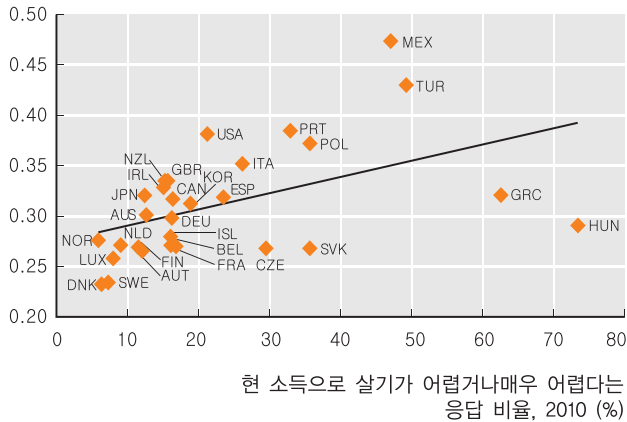


패널 B, 2007년과 2010년에 현 소득으로 살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차이, 퍼센트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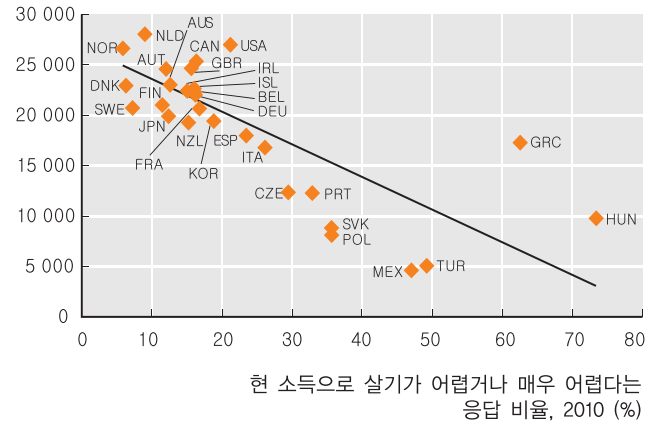
EQ3.2. 생계곤란은 소득불평등과 정비례한다

소득불균형의 지니계수, 2000년대 중반



EQ3.3. 소득불균형은 가구소득과 훨씬 더 강한 반비례 관계가 있다.

1중위 균등화 가구소득, 2000년대 중반, USD PPP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정의 및 측정

이 지표는 총 소득 수준이 평균 풀타임 소득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한 가족이 최종적 수단인 보조금을 통해 60% 중위 소득 기준선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보조금은 모든 다른 소득 출처가 고갈되었을 때 지급된다.

60%로 표시한 것은 많은 국가들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보조금 소득은 핵심보조금(core benefits) 외에 가족 관련 보조금과 주택보조금(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을 포함한다. 보조금은 평균 풀타임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하는데 세금관련 보조뿐 아니라 소득세와 사회보장혜택도 포함된다. 지표는 2009년 4세와 6세의 두 아이를 가진 편부모 및 부부를 기준으로 했다. 부부의 경우에는 외벌이로 가정했다. 이런 상황의 가족 소득을 OECD 세금감면 모형(방법은 Benefits and Wages 2007)와 온라인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참조)을 사용해 시뮬레이션했다. 중위소득은 Growing Unequal? (2008)을 출처로 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2000년대 중반 대상 데이터이며 2009 가격 환율로 환산했다. 소득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합이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표시하지 않았다. 호주와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 한국의 경우는 2008년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계층으로부터 얼마나 쉽게 탈피할 수 있는지가 상향 이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용이성은 세금감면 제도의 두 가지 정책적 특징 즉,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보조금이 저소득 기준선에 근접하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도와 세금 인상과 세금감면이 유급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감소시키는 정도에 달려 있다

2009년, 주택보조금을 고려했을 때 취업을 통한 저

소득 탈피의 용이성은 아일랜드와 일본, 영국에서 높게 나타났다. (EQ4.1) 사실 이들 국가에서 최저 보조금 전체를 수령하게 되면 해당 가족들은 저소득 기준선 위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 주택 보조금은 해당 국가의 주택 비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 보조금은 여기 나타난 것보다 낮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에서도 주택 비용은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국가에서는 큰 차이로 이어진다.

양쪽 유형의 가정 모두 저소득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국가로는 에스토니아, 스위스, 미국 등이 있다. (EQ4.1) 미국의 경우에는 평균 총소득의 80-90%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며 스위스와 에스토니아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높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일자리를 통해 저소득상태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경우 평균 총소득의 90% 소득을 주는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저소득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다.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보조금이 높다는 것은 저소득 상태에서 탈피하는데 비교적 낮은 소득만 있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EQ4.2) 그러나 보조금의 관대한 성격을 감안하면 저소득 탈출의 용이성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세금 및 보조금 감면 처리의 차이 때문이다. (EQ4.2) 예를 들어 뉴질랜드, 스웨덴, 벨기에에서는 편부모에 대한 보조금이 모두 저소득기준선의 80% 수준이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저소득 탈피에 평균 급여의 20% 미만 정도가 필요하고 스웨덴은 40% 미만, 벨기에는 50%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이 소득활동을 시작하면서 세금, 보조금 제도를 통한 감면혜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OECD (2007), Benefits and Wages: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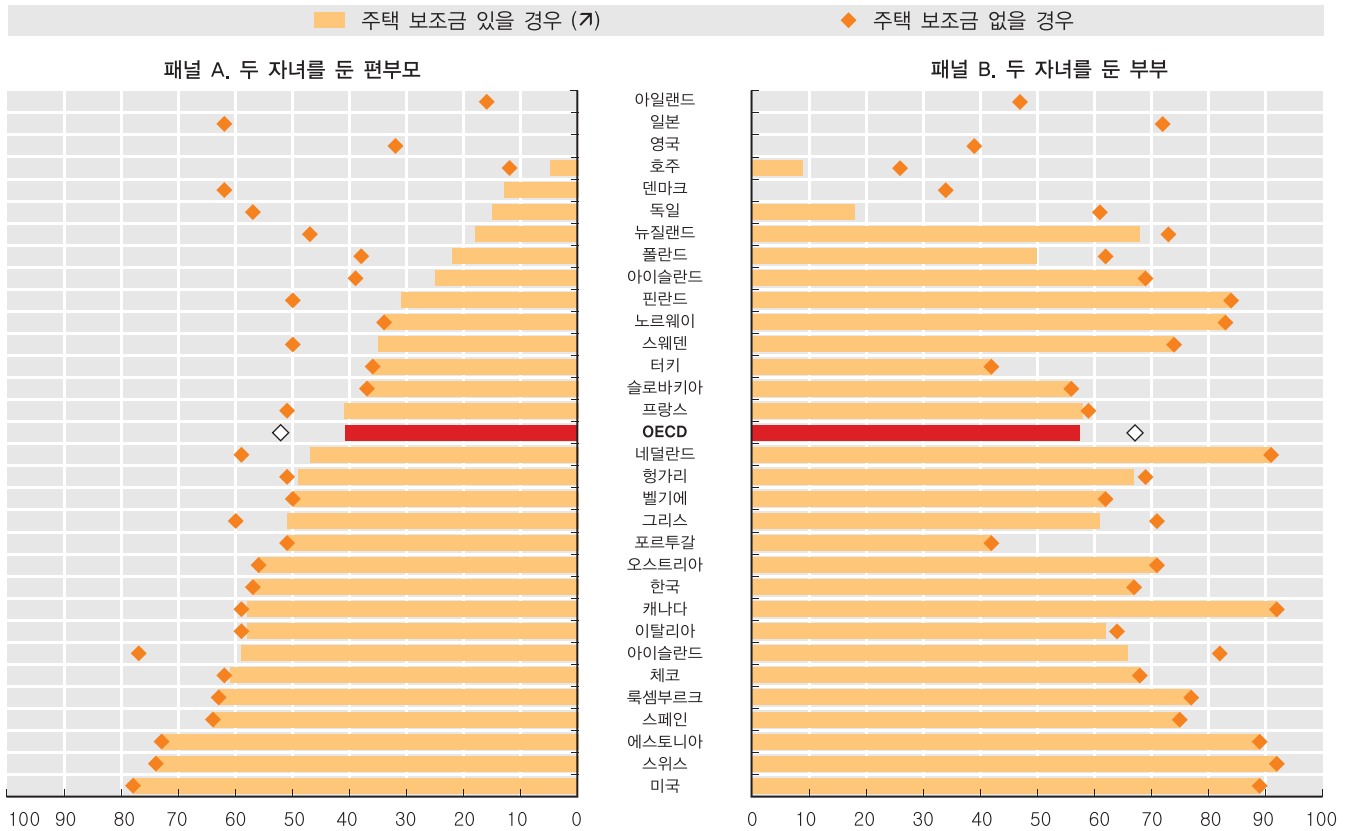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EQ4.1과 EQ4.2: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 자료는 2008년 기준.

이스라엘 관련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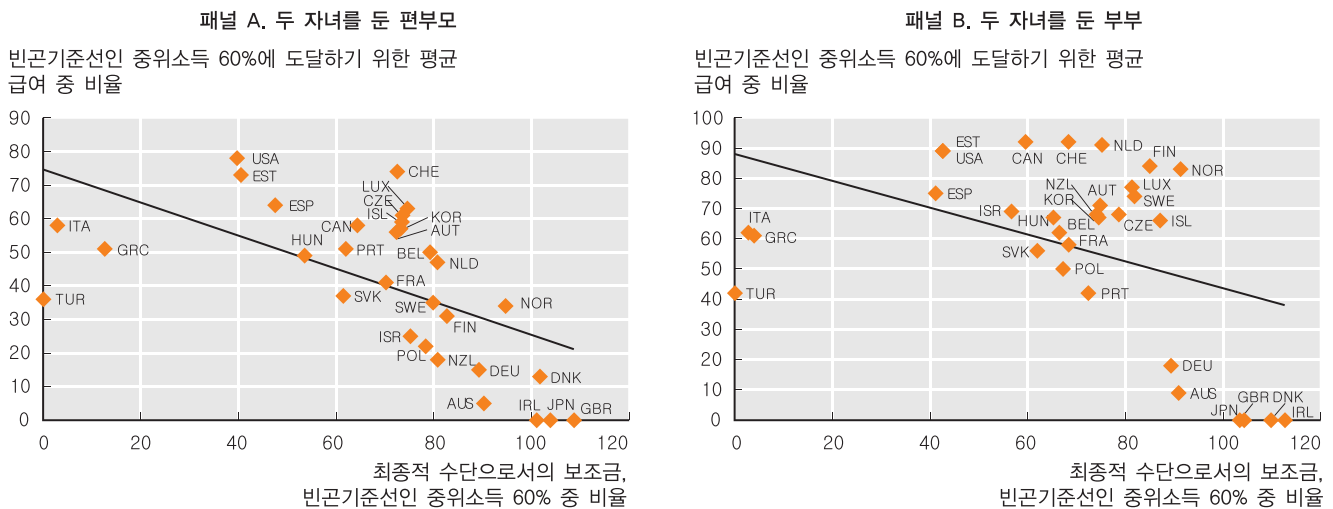
EQ4.1. 저소득 탈피에 필요한 소득

중위소득의 60%인 빈곤기준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총 급여 중 비율, 2009



EQ4.2. 저소득 탈출을 위한 보조금 수준 및 순 급여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하의 가구 순소득,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 60% 중 비율, 2009



출처: OECD Tax-Benefit Models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중위소득 자료는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에서 발췌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2009년에 맞춰 조정

정의 및 측정

사회적 지출은 정부(즉, 중앙 행정부, 지방정부와 사회보장 기관)가 재정을 관리하는 경우 공공 지출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의무적 기여금에서 나오는 질병 보조금은 “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질병 보조금은 “사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 여기서 사용하는 사회적 지출 지표는 GDP 중 차지하는 비율로서의 공적 지출을 의미한다. 여기에 나타난 지출 흐름은 이러한 보조금에 부과되는 직, 간접세 차감 전 금액이며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세금 비용을 더하기 전 금액이다(“총 지출”). 일부 연방국가에서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등의 지출이 과소평가되었을 수도 있다. 한국과 캐나다를 비롯, 많은 국가에서 규모가 상당한 사적 사회적 지출은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에 오류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의 척도이며 값은 0-완전한 평등-부터 1-모든 소득이 한 명에게 집중-사이에 분포한다.

공공사회지출은 정부가 연금, 보조금(사회적 지원), 보건 분야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양을 측정한다. 많은 사회적 지출을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것이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여 평등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2007년 공공사회지출은 OECD 34개 국에서 평균적으로 GDP의 19%였다. (패널 A, EQ5.1) 지출수준은 국가간에 차이가 컸다. 멕시코와 한국은 GDP의 6%에서 10% 사이였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20퍼센트 더 지출했다. 공공지출은 유럽대륙 국가들의 경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신규 회원국인 4개국 중 3개국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에서는 지출 비율이 평균

보다 낮았다. 영국을 제외한 영어권국가들은 OECD 지출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나 순 사회적 지출(순 세금 감안)을 고려하면 국가 순위는 크게 바뀌는데 조세제도를 통해 재분배를 실시하는 미국의 경우 크게 상승한다.

사회적 지출은 1982년부터 2007년 사이 OECD 전역에 걸쳐 GDP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상승했는데 (패널 B, EQ5.1) 전반적으로 평균 약 2.5퍼센트 상승했다. 포르투갈, 일본, 터키는 특히 상승폭이 컸다. 네덜란드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했는데 기준 연도의 낮은 GDP, 비교적 빠른 GDP 증가, 연금 처리와 보건 개혁 및 보조금 연동 접근방식의 변화 등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 분포가 좀더 평등한 국가들은 사회적 지출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EQ5.2) 사회적 지출이 가장 많은 북유럽 및 서부유럽 국가들은 소득 불평등성이 낮았다. 반면 멕시코와 터키는 사회적 지출이 거의 없었고 높은 소득 불평등성을 기록했다. 일부 국가(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회적 지출도 높고 소득 불평등성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서 실행된 사회적 지출의 유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지난 세대에 사회적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득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EQ5.2) 이것은 증가한 사회적 지출의 유형이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이었거나 시장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의 불평등성 증가를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사회적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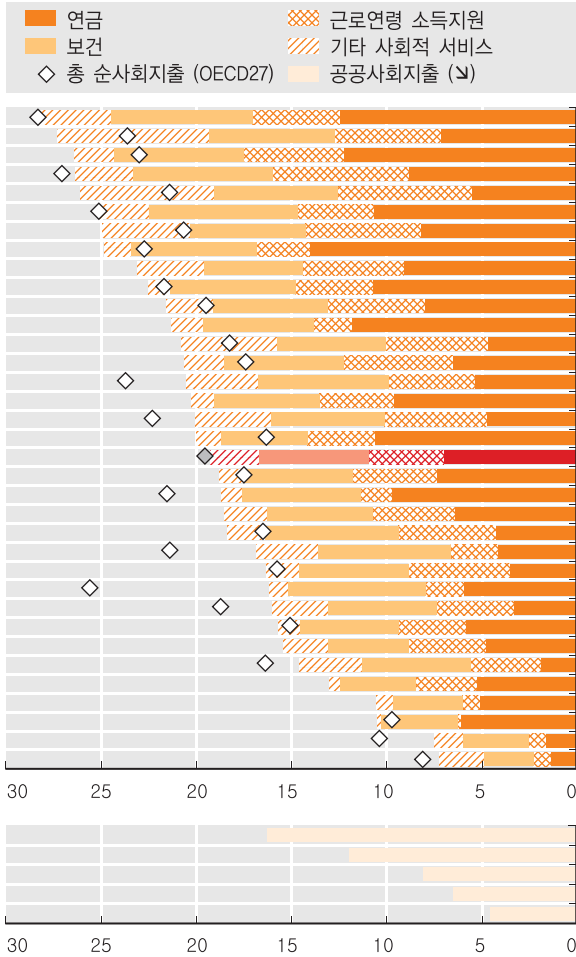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EQ5.1, 패널 A: 국가별 순위는 2007년 총 공공사회지출의 내림차순으로 결정. 그 외 사회적 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ALMPs) 포함. 브라질은 2005년, 인도는 2006-07, 중국은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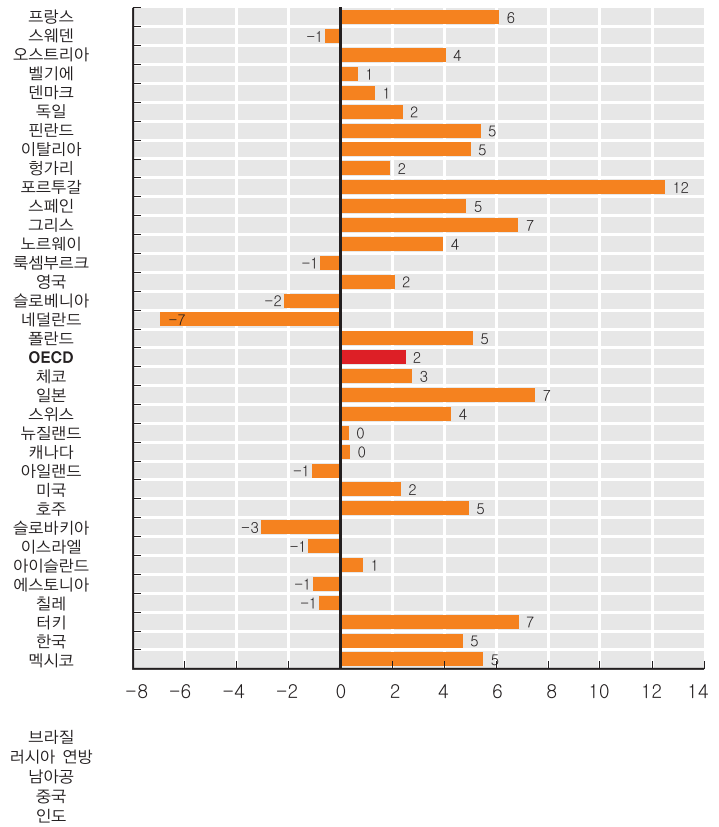
이스라엘 관련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EQ5.1.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했다.

패널 A. 정책 영역별 공공사회지출 및 총 순 사회적 지출, 2007년, GDP 중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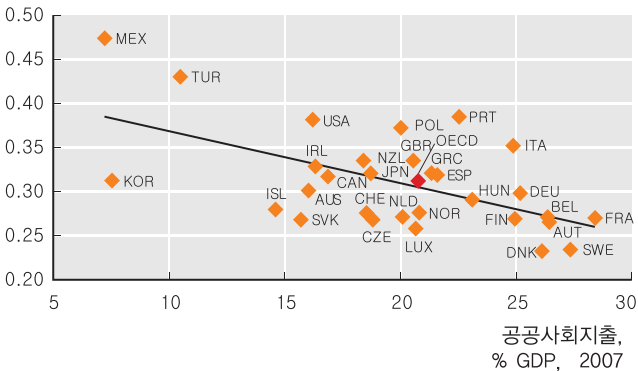


패널 B. 2007년과 1982년 또는 가능한 가장 빠른 연도 사이의 공공사회지출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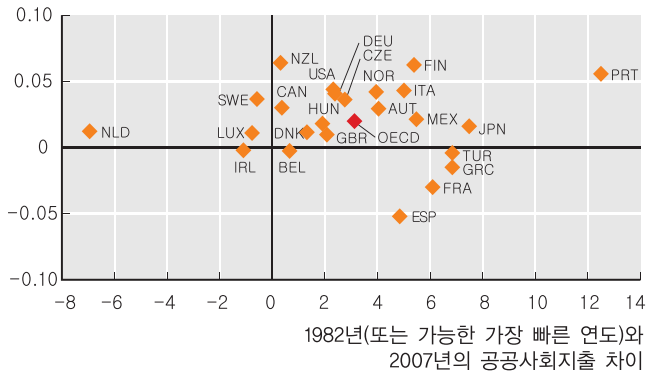
EQ5.2. 사회적지출이 큰 국가는 소득불평등성이 낮다.

소득불균형의 지니계수, 2000년대 중반



EQ5.3. 사회적 지출증가와 소득불평등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19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의 지니계수 차이



출처: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연방, 남아공은 OECD (201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and OECD (2010), Employment Outlook (www.oecd.org/employment/outlook),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81950>





7. 보건 지표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긍정적/부정적 경험
4. 수질/공기질
5. 보건지출

정의 및 측정

기대수명은 한 사람이 특정 연도에 해당 국가에서 일반적인 연령별 사망률을 경험한다고 가정할 때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연수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미래의 연령별 사망률 감소 효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각국은 다양한 방법에 따라 나름대로의 기대수명을 계산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차이는 보고된 추정치의 정확한 비교성에 영향을 주는데 방법이 다르면 국가별 기대수명 측정값이 약간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수명 자료는 2008년 자료인데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경우는 2007년 자료이고 칠레와 프랑스, 멕시코, 네덜란드, 스웨덴은 2009년 자료이다. 기대수명의 변화는 1983년부터 2008년까지 계산되었는데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07년 자료인 국가들의 경우는 2007년 데이터를 사용했다.

가구소득과 소득불평등 데이터는 GE1과 EQ1에서 다루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의 척도이다. 값은 0-완전한 평등-부터 1-모든 소득이 한 명에게 집중-사이에 분포한다

출생 시 기대수명은 현재 OECD 평균적으로 79세를 초과하고 있다. (패널 A, HE1.1) 그러나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과 가장 짧은 터키의 격차는 9년이나 된다. 스위스와 호주도 기대수명이 길다. 사회지표를 보면 북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고르게 분포해있는 편이다. 기대수명이 짧은 국가들은 멕시코 외에 동유럽 국가들도 있다.

1983년부터 2008년까지 25년간 기대수명이 평균

약 6년 정도 길어졌다. (패널 B, HE1.1) 지난 25년간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국가간 차이도 크게 감소했다. 터키와 한국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미국이 가장 적게 상승했다. 주요 원인은 국가간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비슷해졌기 때문이지만 (HE2참조) 노인들의 수명이 연장된 것도 기여를 하였다. 노령의 기대수명은 심장병 치료 등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에 크게 증가했다.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간 격차는 지난 25년간 꾸준히 줄어들었다.

그 기간 중 중위가구소득증가가 기대수명의 증가를 이끌었다고 볼 수는 없다(HE1.2). 지난 25년간 중위소득자의 가구 가처분소득 증가가 컸던 국가의 경우 소득증가가 작았던 국가에 비해 기대수명이 더 많이 길어진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불평등성의 증가가 국가 차원에서 지난 세대 동안 있었던 기대수명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HE1.3). 전반적으로, 중위가구소득증가나 소득불평등성 증가의 영향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HE1.2와 HE1.3을 보면 가처분 가구소득 또는 불평등성과 기대수명 사이에 단순한 경제적 연관성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참고자료

OECD (2009), Health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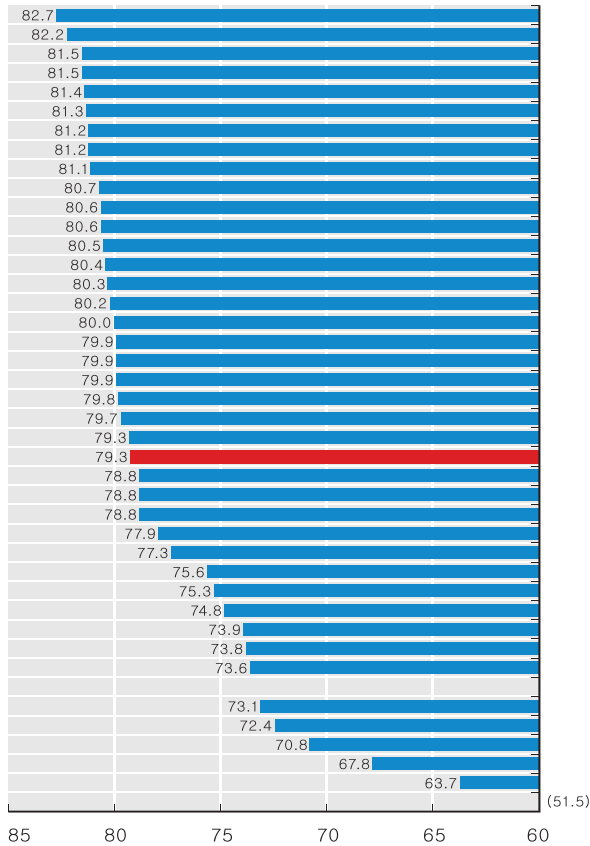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HE1.1: 칠레, 프랑스, 멕시코, 네덜란드, 스웨덴은 2009. 벨기에와 캐나다는 2007, 칠레는 1990, 에스토니아는 1989, 슬로베니아는 1983이 아니라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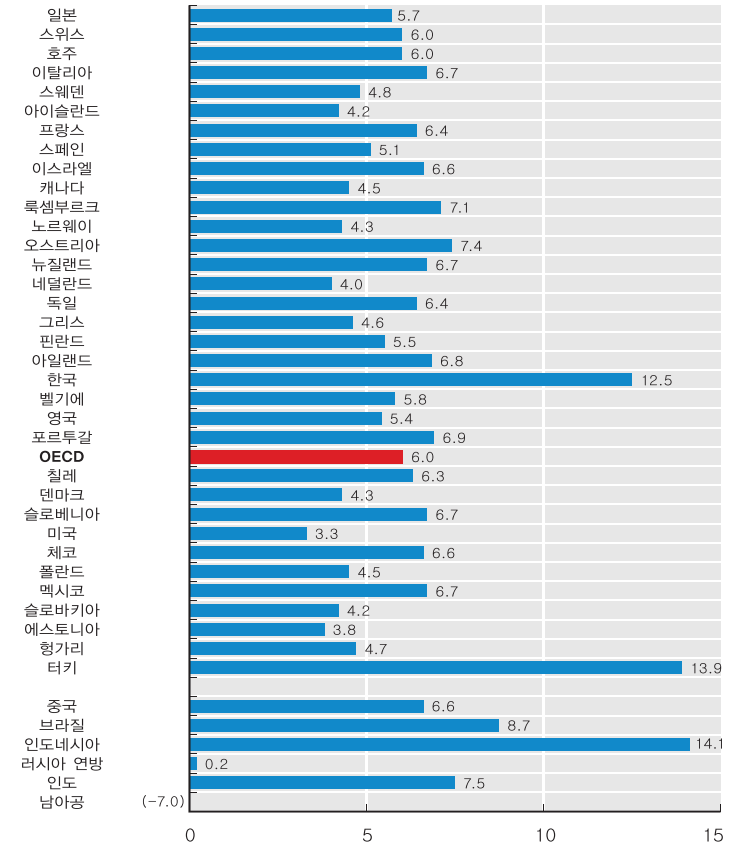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HE1.1. OECD 국가에서 기대수명은 크게 증가했다.

패널 A. 2008년 또는 이후의 출생 시 기대수명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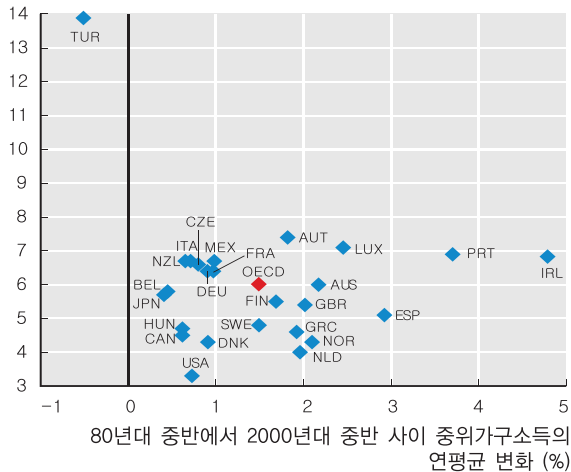


패널 B. 198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대수명 증가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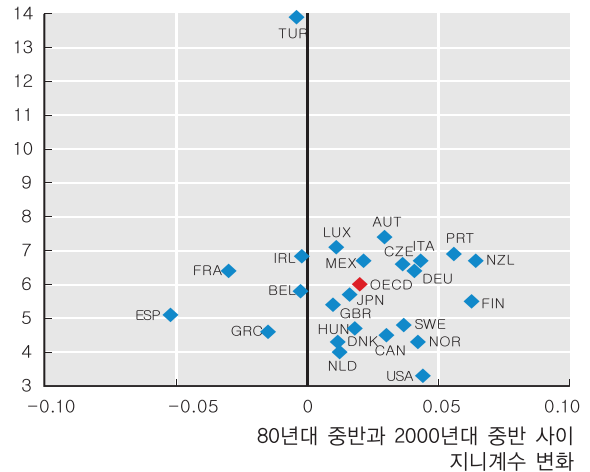
HE1.2. 기대수명 증가와 소득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1983년과 2008년 사이 기대수명 증가분 (년)



HE1.3. 기대수명 증가와 소득 불평등 변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1983년과 2008년 사이 기대수명 증가분 (년)



출처: OECD (2010), OECD Health Data 2010,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health/healthdata), and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비 OECD 회원국의 경우: United Nations Population Database,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http://esa.un.org/UNPP).

정의 및 측정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연간 한 살 미만 영아 사망자 수이다. 영아사망률에 국제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출생 후 생존하는 아동을 정의할 때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망 등록 시 태내 생존 기간이나 무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노르웨이의 경우 최소한의 제한이 존재하며(출생 후 사망에 해당하려면 잉태 기간이 12주를 초과해야 함) 체코와 프랑스, 네덜란드와 폴란드에서는 22주 및/또는 체중 500g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 (EURO-PERISTAT Project 2008, 표 3.1, p.40)

가구소득과 소득불평등 자료는 GE1과 EQ1에서 다루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의 척도이다. 값은 0-완전한 평등-부터 1-모든 소득이 한 명에게 집중-사이에 분포한다.

2008년 OECD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신생아 200명당 한 명꼴로 사망했다(패널 A, HE2.1). 2008년 OECD 국가의 영아사망률은 룩셈부르크와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스웨덴의 천명당 2.5명 이하에서 멕시코의 15명, 터키의 17명 사이였다. 그 외에 칠레와 미국, 슬로바키아에서도 영아사망률이 비교적 높았다.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지난 25년간 유아사망률 감소에 있어서 큰 성과를 보였다(패널 B, HE2.1).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터키였고 멕시코가 그 뒤를 이었

다. 영아사망률이 높은 국가들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영아사망률이 낮은 국가들보다 더 많이 개선되었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OECD 지역에서는 국가간 영아사망률이 크게 수렴해왔다. 영아사망률이 매우 낮은 국가들은 더 이상 낮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반적인 기대수명에 있어서 가구소득증가와 영아사망률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으며(HE2.2) 장기간의 소득 불평등 변화와 영아사망률간에도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HE2.3). 전체적으로 각국은 영아사망률을 줄이는데 있어서 중위 가구소득 증가나 소득 불평등 증가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국가는 영아사망률 하락률이 특히 크고 가구소득 증가세는 낮은 국가들이다. HE1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분석 역시 오랜 기간 동안의 영아사망률 변화에 평균의 측면이건 불평등성의 측면이건 단순한 소득에 기반한 설명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참고자료

EURO-PERISTAT Project (2008), European Perinatal Health Report, www.europeristat.com/publications/european-perinatal-health-report.shtml.

OECD (2009), Health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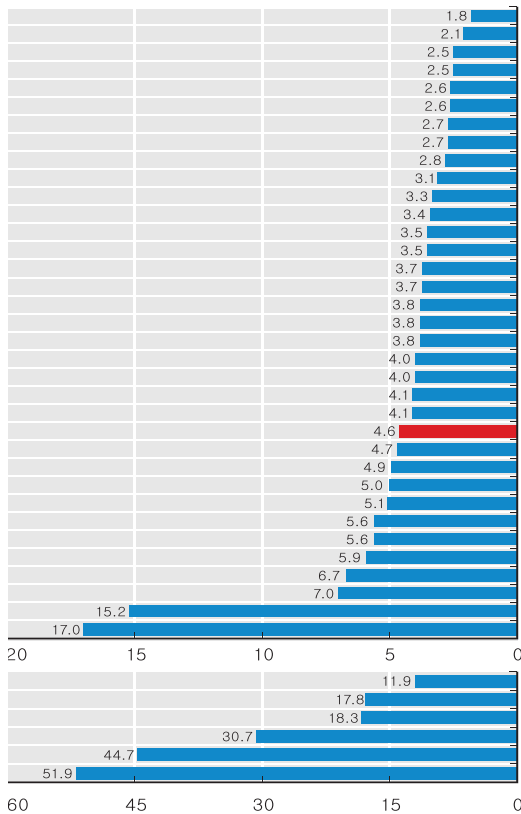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HE2.1: 칠레와 아일랜드는 2007, 한국과 미국은 2006, 칠레는 1980, 한국은 1983이 아니라 1984, 여섯 개 비 OECD 회원국의 경우 1983이 아니라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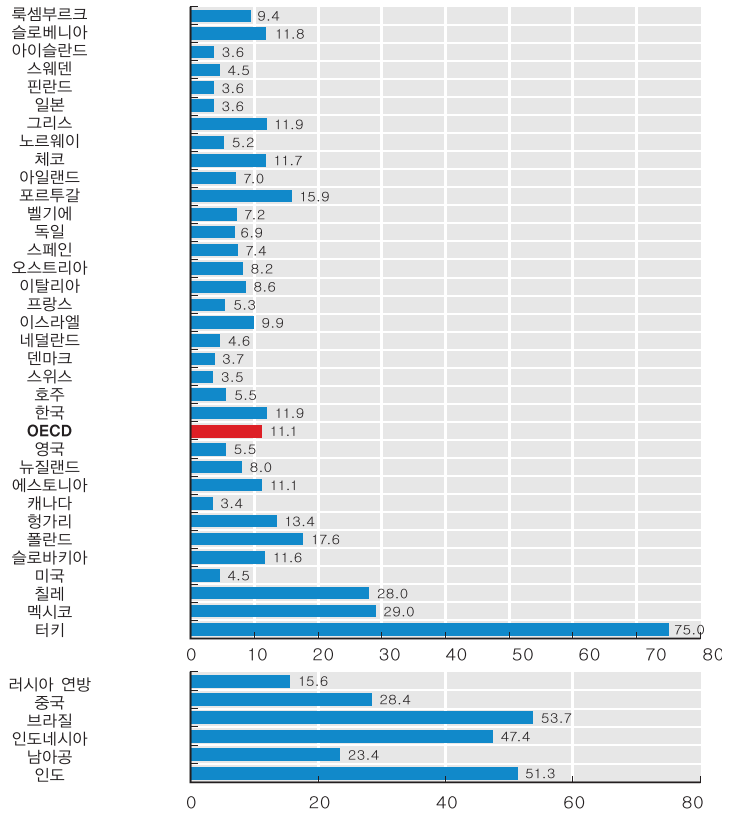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HE2.1. OECD 지역에서 영아사망률은 감소해왔다.

패널 A. 출생아 천 명당 영아사망률, 2008년 또는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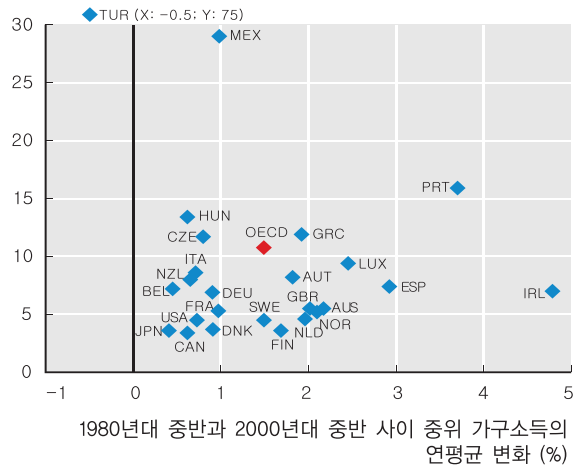


패널 B. 1983년과 2008년 사이 영아사망률 감소 (출생아 천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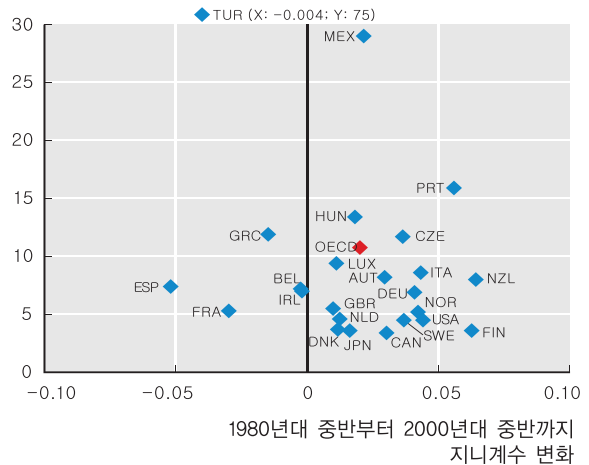
HE2.2. 영아사망률감소와 소득증가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1983년과 2008년 사이 영아사망률 감소정도 (출생아 천 명 당)



HE2.3. 영아사망률감소와 소득불평등 변화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1983년과 2008년 사이 영아사망률 감소 정도 (출생아 천 명 당)



출처: OECD (2010), OECD Health Data 2010,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health/healthdata), and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비OECD 회원국: UNICEF, Childinfo,

정의 및 측정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에 관한 자료는 갤럽세계 조사를 출처로 하고 있다. 갤럽 조사는 동일한 설문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140여개국에서 실시된다. 모든 샘플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샘플추출 및 비 샘플추출 상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샘플 크기는 국가에 따라 1,000에서 4,000까지 다양하다. “긍정적 경험 지수”는 응답자가 조사 전날 웰빙을 경험했는지 보여주는 척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지, 하루 종일 존중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많이 웃거나 미소지었는지, 뭔가 흥미로운 일을 배우거나 실행했는지, 즐거움을 느꼈는지 등이다. “부정적 경험지수”는 응답자가 조사 전날 육체적 고통, 걱정, 슬픔, 스트레스, 우울함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긍정적, 부정적 경험은 각국의 문화적 요인보다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EQLS 데이터는 Anderson et al. (2009)을 출처로 하고 있다.

미소와 스트레스 등의 경험 측정값은 OECD 지역의 정신적 웰빙을 광범위한 인구차원에서 나타내는 지표이다. 웃음 등의 긍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며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경험은 그 반대의 상태를 나타낸다. (지수에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 나머지 질문들은 정신적인 상태에 관한 질문들이다.)

2006-09 기간 중 OECD에서 긍정적인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였다. (패널A, HE3.1) 경제적 발전 대비 자기 평가적인 주관적 척도에서 종종 상위권국가에 포함되는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긍정적 경험에서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영어권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 역시 긍정적 경험의 측면에서 평균을 웃돌았다. 중하위권에는 서부유럽과 중부유럽 국가들이 포진해 있었다. 일본과 한국 역시 하위권이였다.

덴마크는 부정적 경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였고 다

른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패널 B, HE3.1) 영어권 국가들은 평균수준 또는 평균치를 웃돌았다. 부정적 경험의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였다. 긍정적 경험 점수가 높은 국가들은 부정적 경험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었지만 상관관계가 크진 않았다. 캐나다와 칠레, 미국은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 점수가 둘 다 비교적 높은 국가들이었다.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더 많이 응답한 것일 수도 있고 이들 국가에서 부정적 또는 긍정적 경험에 대해 응답한 이들이 이런 경험에 대해 응답하는 경향이 좀더 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면 데이터가 의미를 갖게 된다. 설문에서 사람들에게 조사 전날의 경험을 물었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 데이터에서는 단순히 조사 전날 응답자가 경험한 빠르게 변하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샘플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경험과 2007 유럽 삶의 질 조사(2007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의 긍정적 정신건강지수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HE3.2) 이들 조사가 사용한 샘플이 다르고 조사일도 다르며 설문도 다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강력한 상관관계는 데이터의 타당성을 재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 해에 긍정적 경험 점수가 높았던 국가들은 다음 조사 때에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다. (HE3.3) 이번에도 이러한 강한 상관관계는 데이터가 단순히 샘플상의 오류나 일관되지 않은 응답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Anderson, R., B. Mikulić, G. Vermeylen, M. Lyly-Yrjanainen and V. Zigante (2009), Second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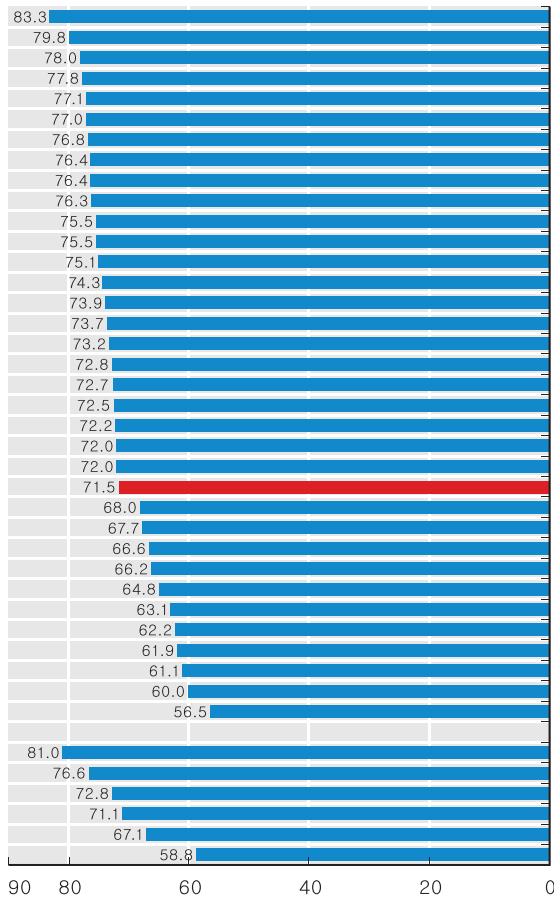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HE3.1 의 모든 자료는 2009년 데이터이다. 단, 슬로바키아는 2009, 스위스는 2006, 체코는 2007, 호주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는 2008. Gallup data for HE3.2의 갤럽 데이터는 2007년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해의 자료를 사용했다. 2007년 자료는 없고 2006년과 2008년 자료가 있는 경우 좀더 최근(2008) 자료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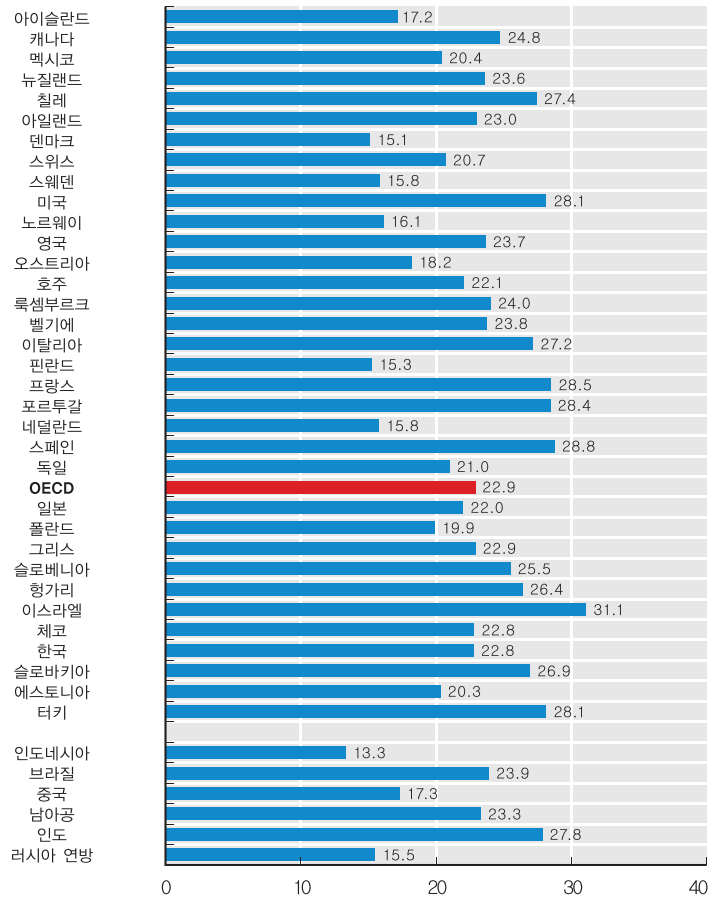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HE3.1. 아이슬란드, 캐나다, 멕시코는 긍정적 경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스라엘, 스페인, 프랑스는 부정적 점수가 가장 높았다.**

패널 A. 긍정적 경험지수, 긍정적 경험 응답자 비율,
2009 혹은 가장 최근 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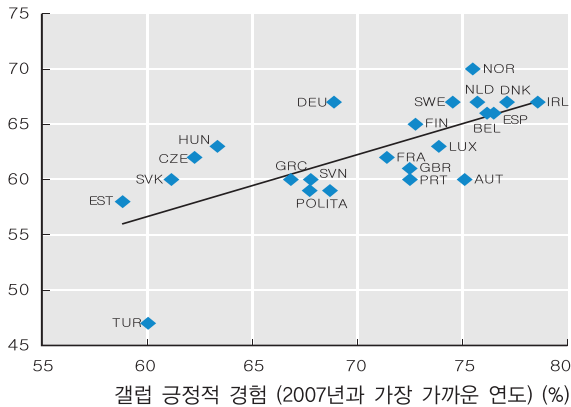


패널 B. 부정적 경험 지표, 부정적 경험 응답자 비율,
2009 혹은 가장 최근 연도



**HE3.2. 21개 OECD-유럽 국가에서는 긍정적 경험이
긍정적 정신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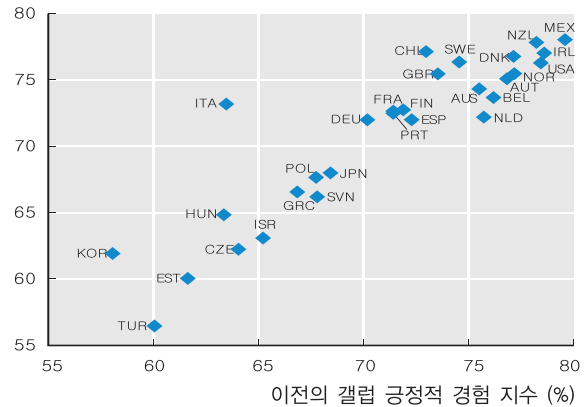
유럽 삶의 질 조사, 정신건강지수 2007 (%)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HE3.3. 긍정적 경험점수가 높은 국가는 다음
조사 때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가장 최근의 갤럽 긍정적 경험 지수 (%)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82007>

정의 및 측정

자료는 갤럽세계조사를 출처로 하고 있다. 갤럽 조사는 동일한 설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140여개국에서 실시된다. 모든 샘플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하지만 결과는 샘플추출 및 비 샘플추출 상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샘플 크기는 국가에 따라 1,000에서 4,000까지 다양하다. 보고된 자료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공기 질에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긍정적 경험 자료는 HE3에서, 영아사망률 자료는 HE2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수질과 공기질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된 질 좋은 지역환경은 건강한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열악한 공기질과 수질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객관적인 수질 및 위생 관련 자료가 나와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OECD 국가들은 질적 측정치에 있어서 거의 예외없이 100%를 기록했다. 여기에서는 단순한 인식 자료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OECD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기질(패널A, HE4.1)과 수질(패널 B, HE4.1)에 둘 다 만족했다. 가장 만족한 국가는 북유럽 국가들(스웨덴은 예외)이었다.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곳은 지중해 연안과 동부유럽 국가들이었다. 지역 환경에 대한 이 두 지표 간 상관관계는 강력한 양의 관계였다. 즉, 사람들이 지역의 수질에 만족하면 공기질에도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21개 OECD 유럽 국가에서 공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 환경의 다른 측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인구 비율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은 공기와 수질 문제뿐 아니라 소음, 녹지 부족, 쓰레기, 범죄와 공공기물 파손 등에 대해 나타나고 있다. (Anderson et al., 2009) 이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기질이 전반적인 OECD 국가의 일반적인 지역 환경을 보여주는 합리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질의 경우 공기질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수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국가의 국민들은 긍정적 경험 점수도 높았다. (HE4.2) 공기질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인 정신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상관관계를 강화하는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객관적인 주요 보건 지표인 영아사망률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HE4.3) 수질이 열악한 것으로 응답한 국가에서는 영아사망률도 매우 높았는데 설사병과의 연관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기질과의 관계도 비슷했지만 강도는 덜했다. 영아사망률과 수질과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지만 신규 회원국들(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과 영아사망률이 높은 OECD 국가들(터키와 멕시코)은 예외였다.

참고자료

Anderson, R., B. Mikuli, G. Vermeylen, M. Lyly-Yrjanainen and V. Zigante (2009), Second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Overview, Eurofound,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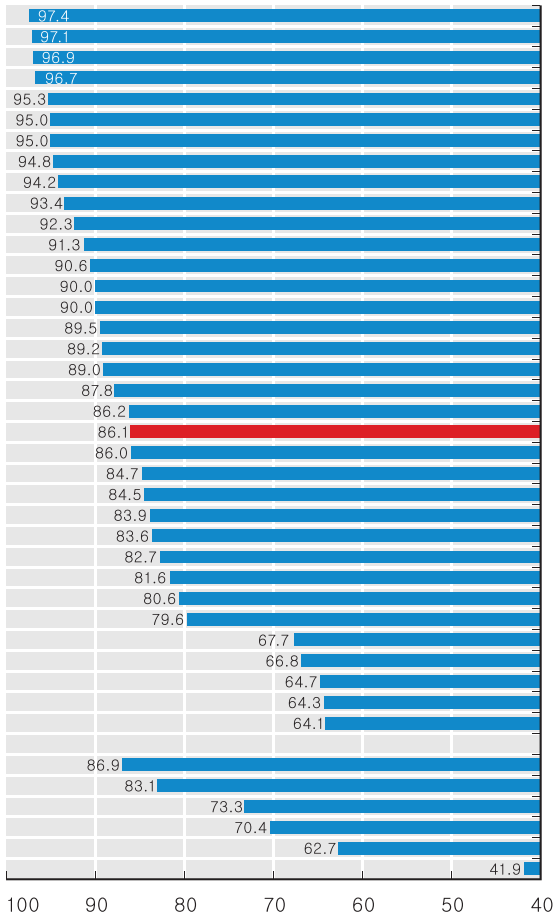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HE4.1의 모든 자료는 2010년 데이터이다. 단,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2008, 한국과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남아공은 2009년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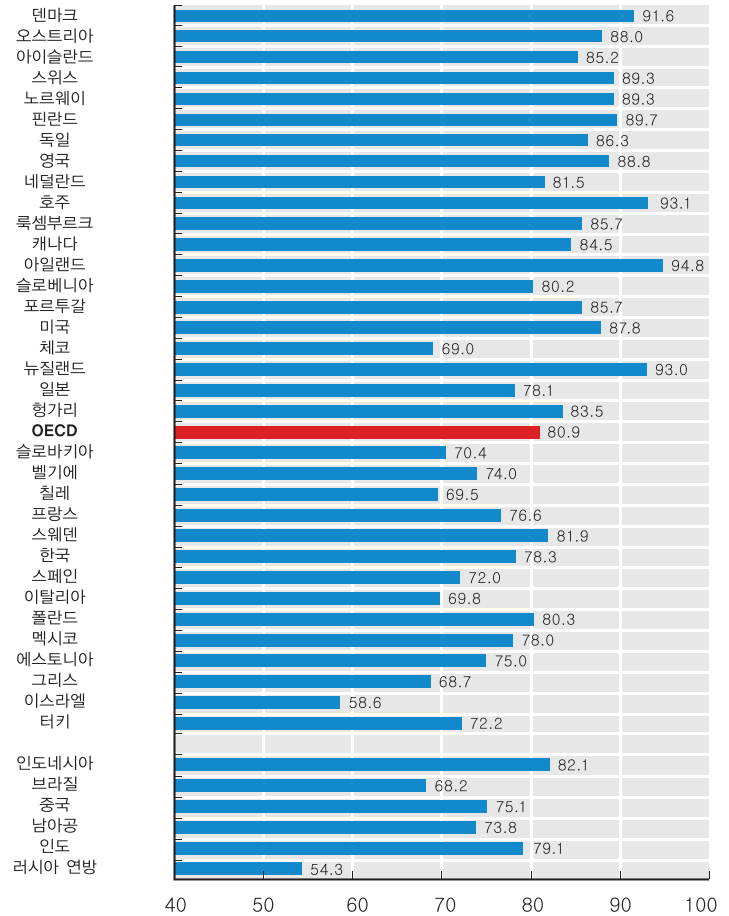
이스라엘 관련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HE4.1. 북유럽 국가들이 수질과 공기질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A. 수질에 만족, 퍼센트, 2010 혹은 가장 최근 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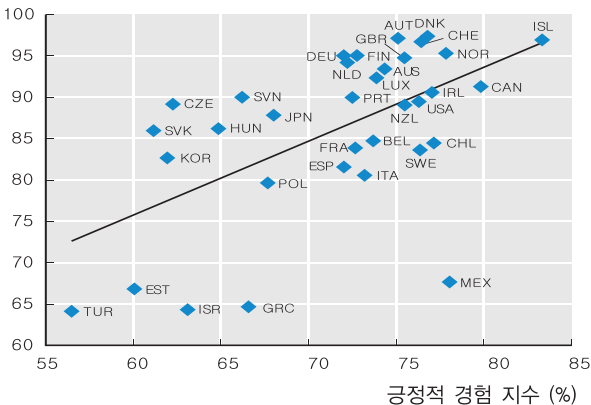


패널 B. 공기질에 만족, 퍼센트, 2010 혹은 가장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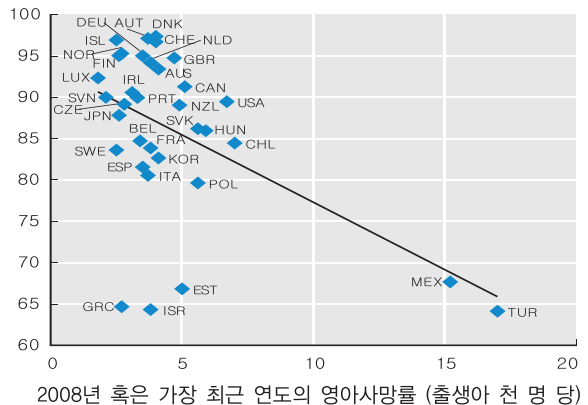
HE4.2. 수질만족도가 높으면 긍정적 경험점수도 높다.

수질 만족도, 퍼센트, 2010 혹은 가장 최근 연도



HE4.3. 수질 만족도가 낮은 국가는 영아사망률이 높다.

수질 만족도, 퍼센트, 2010 혹은 가장 최근 연도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82026>

정의 및 측정

보건에 대한 총 지출은 건강 상품 및 서비스의 총 소비와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자본 투자 정도를 측정한다. 여기에는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공적, 사적 지출과 집단적 보건 서비스(공중보건 및 예방 프로그램 및 행정)가 포함되며 교육, 연구, 환경 보건 등의 보건 관련 지출은 제외된다. 자료는 GDP 중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된다. 시계열적인 보건지출액을 비교하려면 국민 물가지수(national price index)를 적용한 후 구매력지수(PPP)환율을 사용해 미 달러로 환산한다

보건지출은 OECD 회원국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패널 A, HE5.1). 2008년, 보건 지출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었는데 GDP의 16%, 즉 일인당 7,285달러를 지출했다. 그 다음은 프랑스와 스위스였는데 절대적으로나 비례적으로나 지출규모는 훨씬 작았다. 대조적인 국가로는 한국(일인당 1,801달러)과 멕시코(852달러)가 소득의 10%에 훨씬 못 미치는 보건의출을 기록했다.

보건 지출은 지난 10년간 OECD 전역에서 빠르게 증가했다(패널B, HE5.1).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1인당 평균 OECD 보건 지출은 매년 4% 상승했다. 상승률이 높은 국가로는 한국, 슬로바키아, 아일랜드가 있는데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비교적 낮은 금액에서 출발했다. 반면 노르웨이와 이스라엘, 독일은 지난 십

년간 일인당 보건 지출에 있어서 상당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2008년, 보건지출 규모가 큰 국가들은 기대수명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HE5.2). 1인당 보건지출이 크면 출생 시 기대수명이 긴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상관관계는 1인당 보건지출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덜 두드러졌다. 보건지출 수준을 감안하면 특히 일본은 비교적 기대수명이 길고 미국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보건지출이 빠르게 증가했던 국가들의 경우 기대수명이 더 빨리 증가했다(HE5.3). 한국과 아일랜드, 슬로베니아의 기대수명 증가는 보건지출의 증가를 감안하면 특히 두드러졌다. 반면 1인당 보건지출 성장세를 감안하면 미국과 그리스,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기대수명 증가가 그리 크지 않았다.

참고자료

OECD (2009), Health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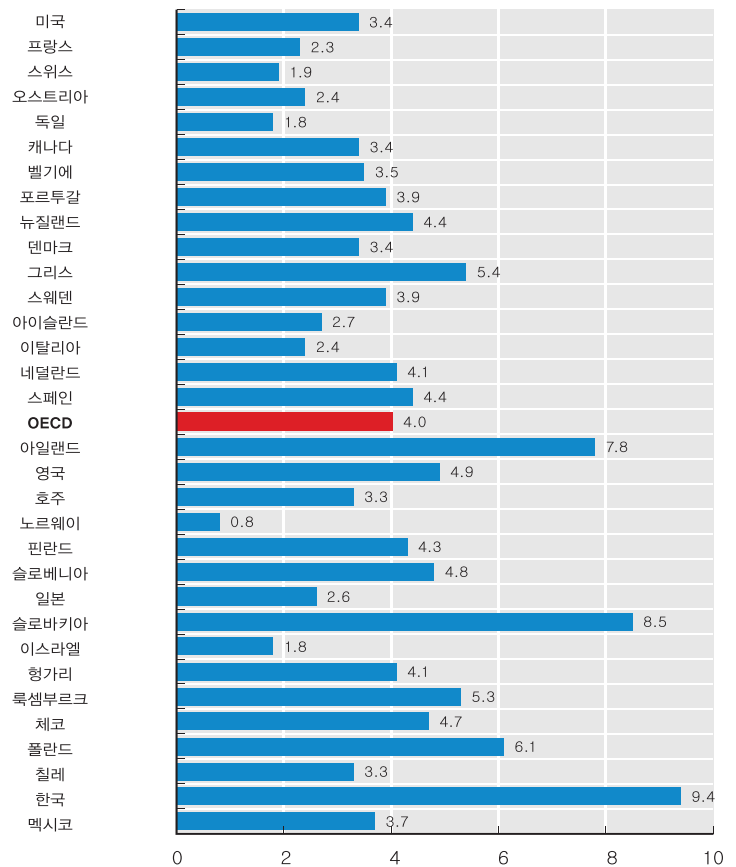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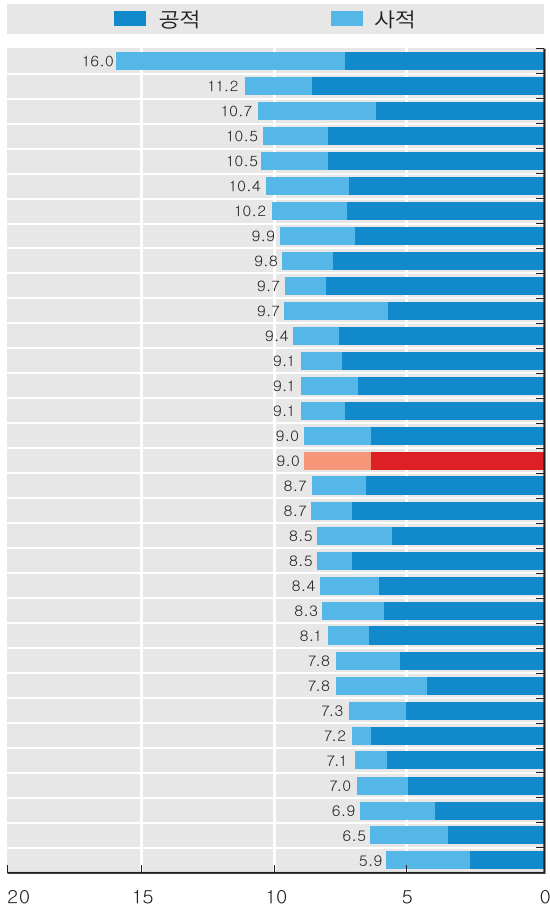
그림 HE5.1의 자료는 호주의 경우 2007/08, 덴마크, 그리스 일본은 2007,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은 2006년 자료이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경우 총 지출액이 아니라 현 지출액(투자 제외) 데이터이다.

이스라엘 관련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HE5.1. 지난 십 년간 보건 총 지출은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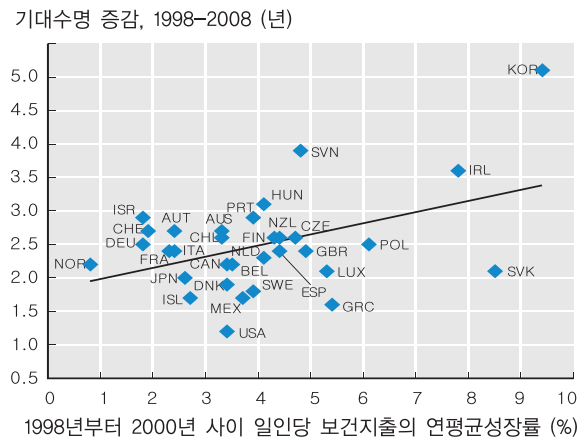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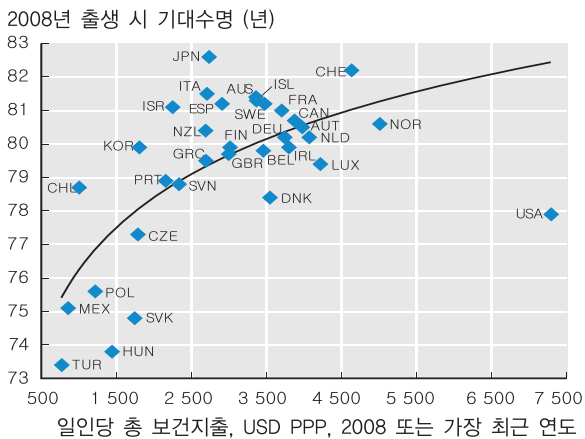
패널 A. 보건 지출, GDP 중 비율, 2008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 합계)

패널 B. 1998년과 2008년 사이 일인당 보건 지출 연평균증가율 (%)



HE5.2. 기대수명이 긴 국가는 일인당 보건 지출 규모가 크다.

HE5.3. 보건지출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기대수명 증가율도 높다.



출처: OECD (2010), OECD Health Data 2010,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health/health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82045>





8. 사회통합지표

1. 타인에 대한 신뢰
2.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3. 친/반사회적 행동
4. 투표율
5. 수용성

정의 및 측정

타인에 대한 신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는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2008년 4차)와 OECD비회원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사회 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d, ISSP)(2007)이다. ESS의 경우 질문에 10점이 부과되며 가장 낮은 점수 카테고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였고 가장 높은 카테고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였다. ISSP는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거의 항상 믿을만하다” “사람들은 대체로 믿을만하다”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대체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거의 항상 매우 조심해야 한다” 가 그것이었다. 신뢰지표는 ESS의 상위 다섯 개 카테고리나 ISSP의 상위 두 개 카테고리를 합해 높은 신뢰도를 표현한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했다. 한 국가가 두 개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 ISSP 데이터보다는 ESS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이유는 ESS의 샘플 크기가 크고 좀더 직설적인 질문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의 가중치도 적용되었다. 국가간 자료 비교성은 샘플의 크기와 응답률 차이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조사의 형식과 설문문의 차이 때문에 추가적인 비교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신뢰에 대한 추세를 평가하기 위해 2002 ESS(1차)와 1998 ISSP를 시작점으로 사용해 연평균 변화를 산정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의 척도이다. 값은 0-완전한 평등-부터 1-모든 소득이 한 명에게 집중-사이에 분포한다.

신뢰는 사람들이 타인의 신뢰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반영한다. 타인에 대한 신뢰는 시장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공공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며 집단 행동을 위한 역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orrone et al., 2009).

고도의 신뢰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패널A, CO1.1). OECD 지역에서는 응답자의 거의 60%가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다. 칠레의 경우 15% 미만, 멕시코와 터키는 30% 미만인 반면 북유럽 국가에서는 80%를 넘었다.

최근의 신뢰도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했다(패널B, CO1.1). 일본에서는 신뢰도가 9년간 연평균 3퍼센트씩 증가했다. 슬로바키아와 뉴질랜드, 이스라엘의 경우도 매년 꾸준한 상승을 보였다. 신뢰 하락을 보인 여섯 개 국가 중 대부분은 약간의 하락을 보였으나 포르투갈은 예외였다.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국가는 가구소득수준도 높았으며(CO1.2) 이 둘간의 상관관계는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은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낮았고 동부유럽국가들은 가구소득수준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뢰는 유익한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유한 국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치일 수도 있다.

신뢰도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은 낮았다(CO1.3). 불평등이 큰 국가의 경우 좀더 평등한 북유럽 국가에 비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이 상관관계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소득불균형이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서로 신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Morrone et al., 2009). 아니면 낮은 신뢰도가 긍정적인 사회적 연대감 생성을 막고 이것이 높은 불평등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참고자료

Morrone, A., N. Tontoranelli and G. Ranuzzi (2009), “How Good is Trust? Measuring Trust and its Role for the Progress of Societi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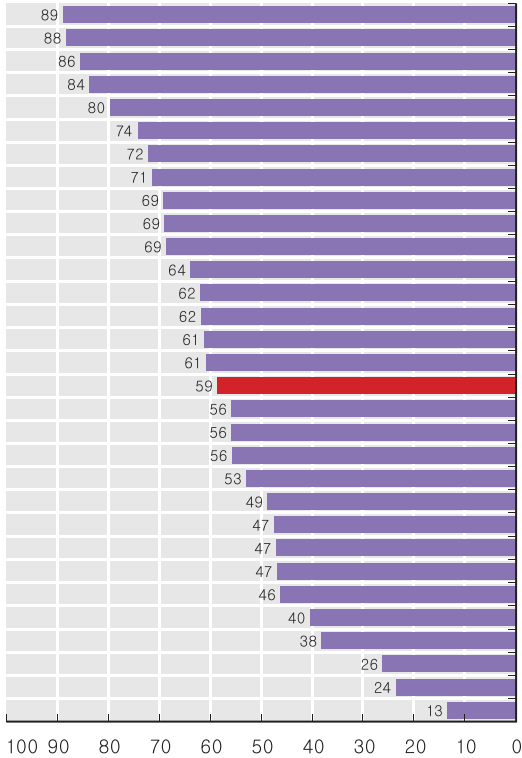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CO1.1, 패널 A: 뉴질랜드, 멕시코,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아일랜드, 미국, 칠레는 2007. 그림CO1.1, 패널 B: 슬로바키아,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아일랜드, 미국, 칠레는 1998/2007, 다른 국가들은 200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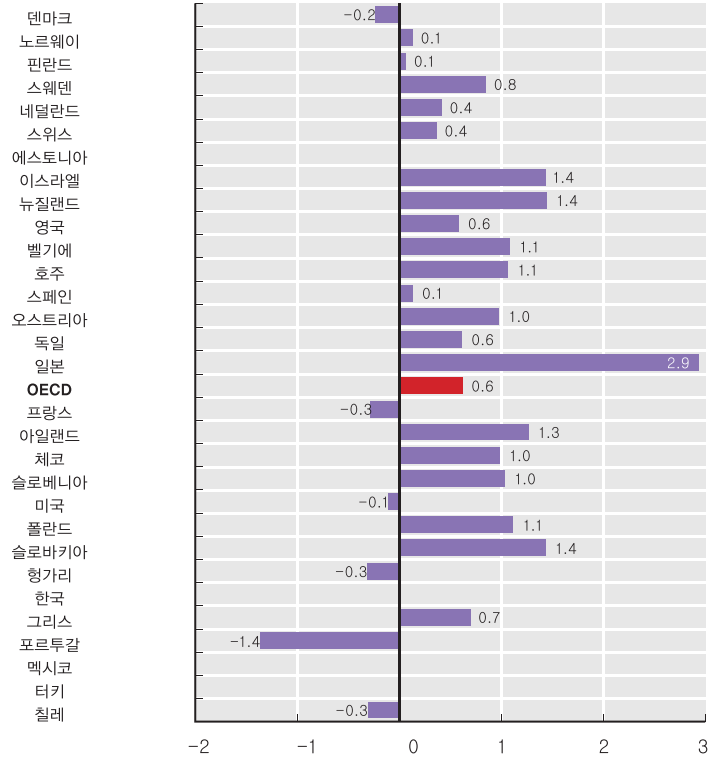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CO1.1.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높은 신뢰도를, 멕시코와 터키, 칠레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패널 A. 타인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인 사람들의 비율, 2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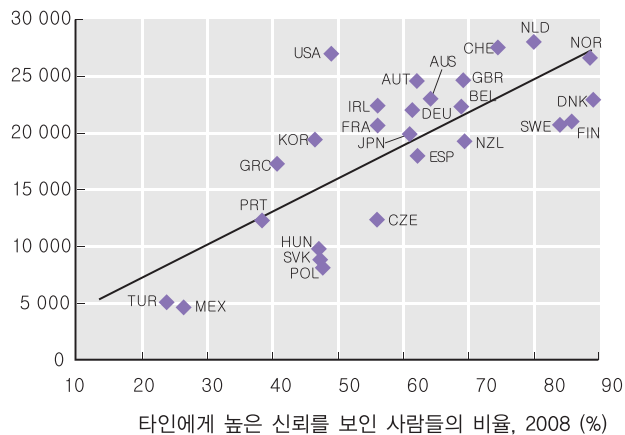


패널 B. 연평균 비율 변화 (1998-2007 또는 200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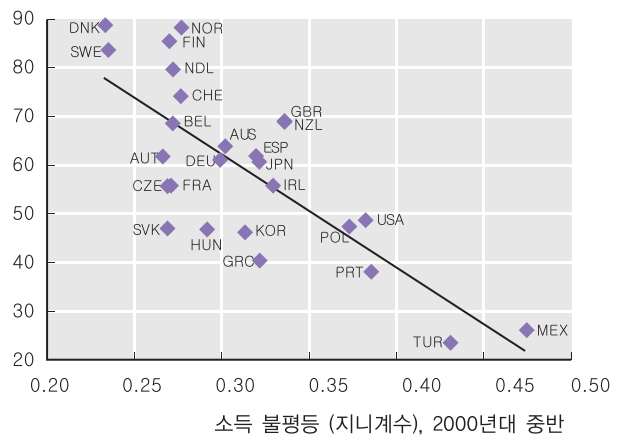
CO1.2. 부유한 국가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중위 균등화 가구소득, 2000년대 중반, USD PPP



CO1.3.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신뢰도가 높다.

타인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인 사람들의 비율, 2008 (%)



출처: ESS (European Social Survey);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정의 및 측정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데이터는 갤럽세계조사를 출처로 하고 있다. 갤럽 조사는 동일한 설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140여개국에서 실시된다. 모든 샘플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샘플 추출 및 비 샘플추출 상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샘플 크기는 국가에 따라 1,000에서 4,000까지 다양하다.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데이터는 갤럽에서 만든 것으로 국가 제도에 대한 종합적 지표이며 부패에 대한 종합적 지표이다. 부패지수는 재계와 정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는가라는 질문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국가제도 지수에 대한 신뢰는 군, 사법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갤럽 부패지수는 OECD 회원국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순위를 바탕으로 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강한 반비례 관계를 보여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결속력있는 사회는 시민들이 국가적 차원의 제도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 제도가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회이다. 신뢰와 부패 문제는 사회적 신뢰와 강하게 연관된 측면이다.

2010년,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은 낮은 부패 인식을 보였다(패널A, CO2.1). 아이슬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특이하게 부패에 있어서 평균을 약간 상회했다. 영어권 국가들은 평균수준이거나 평균보다 낮았는데 미국은 예외였다. 부패인식률이 평균보다 높

은 국가들은 지중해와 남부 유럽 국가들인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등이었다.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 많은 동부유럽 국가들은 모두 평균을 넘는 부패인식을 보였다.

국가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도 역시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이었다(패널B, CO2.1). 멕시코, 헝가리, 한국은 반대였는데 국가제도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예상대로 부패인식과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반비례관계를 보였다. 상관도는 약 0.83으로 높았다. 벨기에와 에스토니아, 한국, 멕시코에서는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감안하면 부패 인식이 비교적 낮았다. 반면 이스라엘은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수준인데 비해 부패인식이 높았다.

낮은 부패인식은 고소득 국가에서 많이 발견되었다(CO2.2). 소득과 부패간 연관성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예외는 그리스와 미국이었는데 소득을 감안하면 부패인식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았고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는 소득에 비해 예상보다 훨씬 낮은 부패인식을 보였다.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 역시 고소득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CO2.3). 부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상관관계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핀란드와 덴마크, 터키는 소득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신뢰도를 보인 반면 한국과 벨기에는 소득에 비해 훨씬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양쪽 경우 모두 원인은 두 방향 모두인 것으로 보인다. 즉, 소득이 높은 것은 신뢰도가 높고 부패인식이 낮은 원인이면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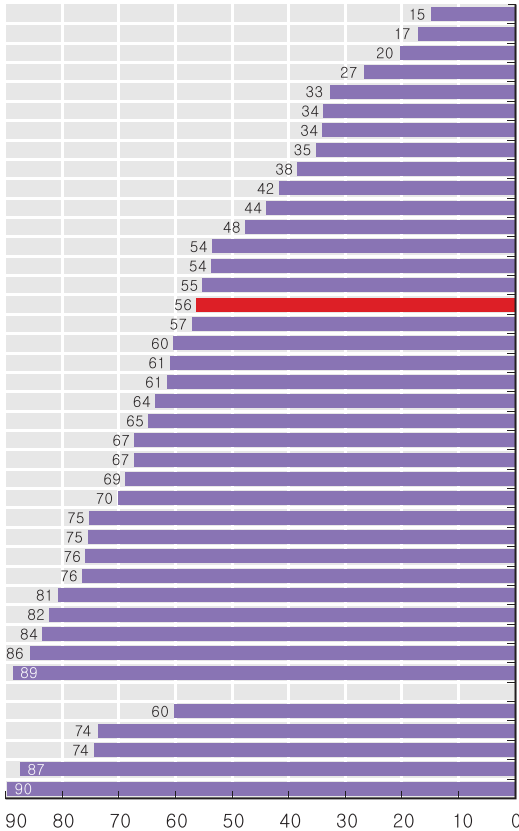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CO2.1: 스위스는 2006,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2008,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남아공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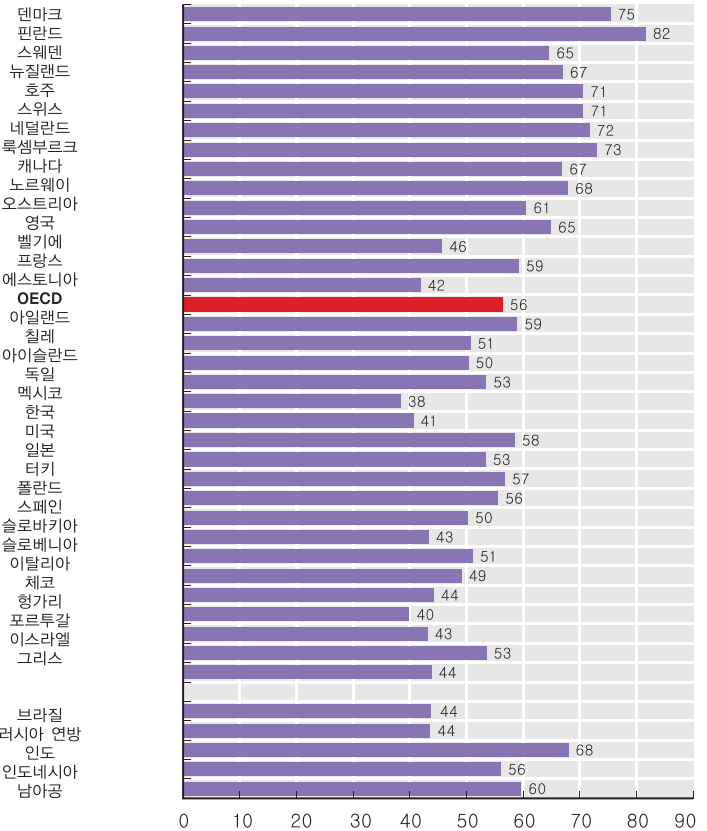
이스라엘 관련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CO2.1. 북유럽 국가들은 부패에 대한 인식이 낮고 사회제도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패널 A. 부패지수, 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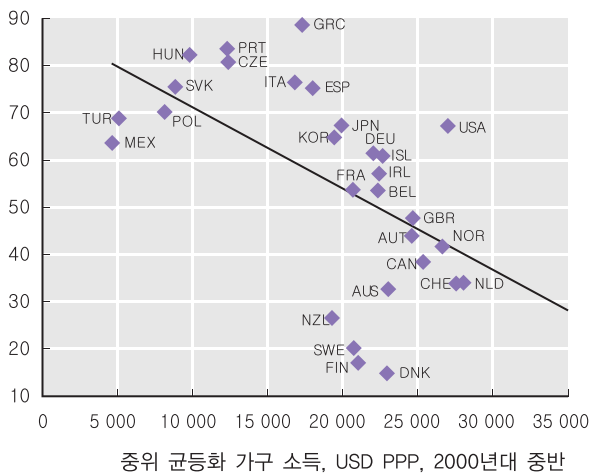


패널 B.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 지수,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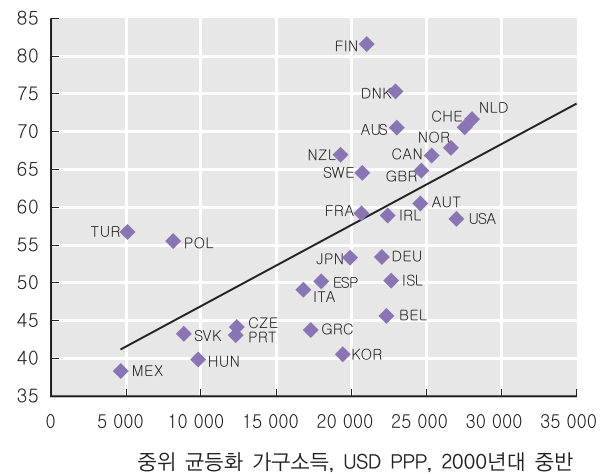
CO2.2. 부패는 고소득 국가일수록 낮게 나타난다.

부패지수, 2010



CO2.3.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는 고소득 국가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 지수, 2010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정의 및 측정

친/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자료는 갤럽세계조사를 출처로 하고 있다. 갤럽 조사는 동일한 설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140여개국에서 실시된다. 모든 샘플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샘플추출 및 비 샘플추출 상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샘플 크기는 국가에 따라 1,000에서 4,000까지 다양하다. 친사회적 행동은 응답자가 지난 달에 자선활동에 시간과 돈을 기부하고 타인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세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산출해 데이터를 구했다. 반사회적 행동은 응답자가 지난해에 돈이나 물건을 도난당하고 폭행당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산출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의 척도이다. 값은 0-완전한 평등-부터 1-모든 소득이 한 명에게 집중-사이에 분포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의 긍정적 기능에 기여하는 행동이고 반사회적 행동은 그 반대의 행동을 말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다섯 개 영어권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모두 OECD 6위 안에 들었다(패널A, CO3.1). 이 보고서의 여러 사회적 지표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북유럽 국가들이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평범한 성적을 보였다. 지중해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친사회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칠레와 멕시코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반사회적 행동의 정도가 높았다(패널B, CO3.1). 반사회적 행동의 정도가 낮은 국가들은 이스라엘, 일본, 한국, 폴란드로 다양한 국가들의 조합이었다. 이번에도 북유럽 국가들은 평범한 성적을 보였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OECD 평균 또는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친사회적 행동 정도가 높은 국가들이 반사회적 행동의 정도는 낮다거나 그 반대의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은 낮게 나타났지만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도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세 번째였다. 뉴질랜드는 친사회적 행동은 성적이 좋았으나 반사회적 행동 역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았다. (CO3.2) 이러한 소득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권국가들은 멕시코의 경우처럼 소득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높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그리스와 일본은 소득을 감안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낮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한편 소득 불평등과 반사회적 행동간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만 존재했다(CO3.3). 약한 상관관계는 전적으로 멕시코 때문에 나타났는데 멕시코는 OECD 국가 중 반사회적 행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소득불균형도 가장 심했다. 스웨덴과 체코는 적어도 소득 측면에서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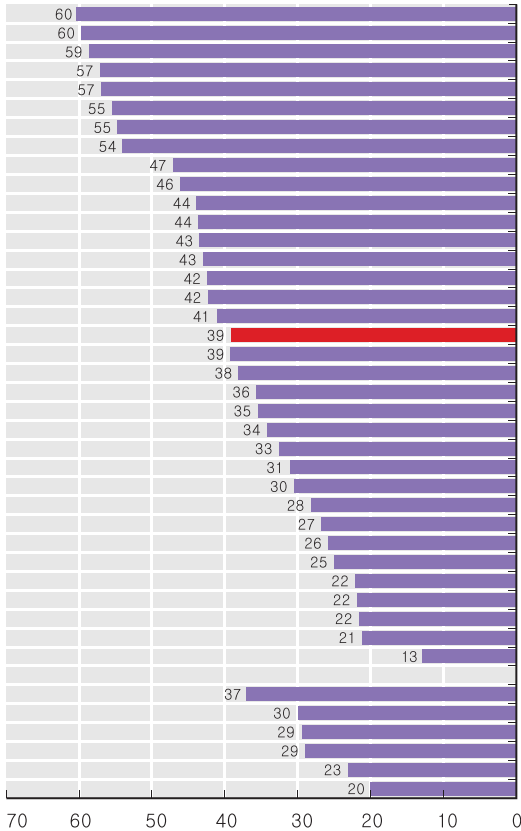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CO3.1: 스위스는 2006,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2008,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남아공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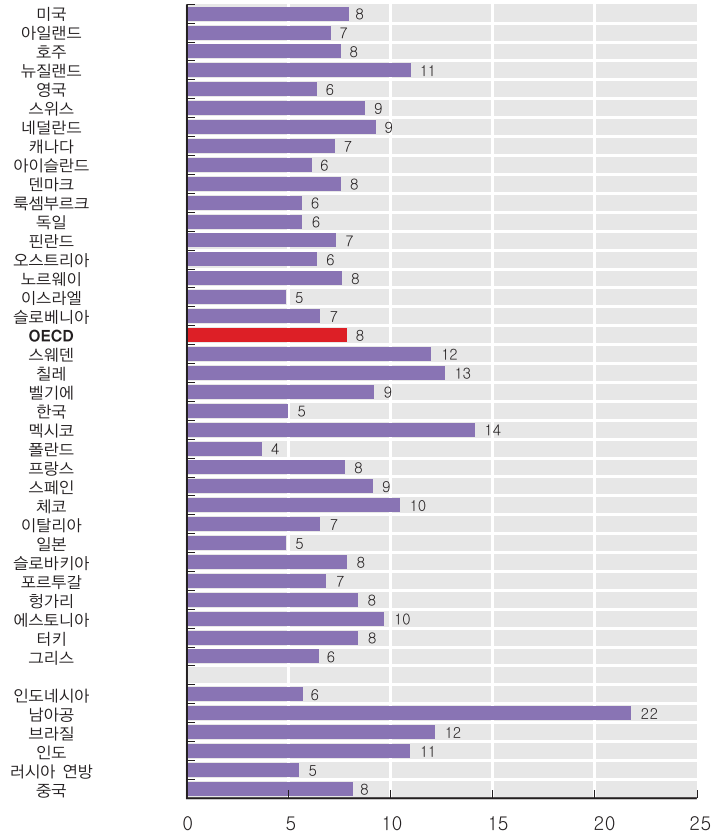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CO3.1. 영어권국가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패널 A. 친사회적 행동 지수, 2010, 퍼센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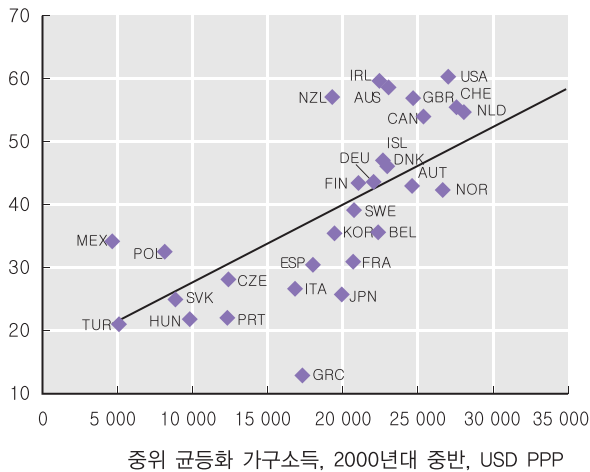


패널 B. 반사회적 행동 지수, 2010,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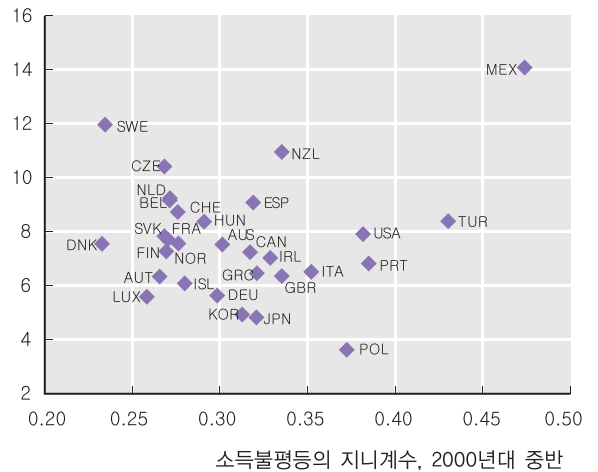
CO3.2.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많다.

친사회적 행동 지수, 2010, 퍼센트



CO3.3. 소득 불평등과 반사회적 행동 간에는 약한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

반사회적 지수, 2010, 퍼센트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382102>

정의 및 측정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율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여기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는 “투표율”인데 이것은 선거 기간 중 투표를 한 개인의 수를 투표가능 연령 -대개 18세 이상-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회원국의 행정기록을 출처로 한다. 국가마다 실시되는 선거의 유형이 다르고 대상이 되는 지리적 관할구역도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이들이 헌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운영에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교적 선거가 잦은 경우에도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 투표율에 관한 데이터는 민주주의 선거지원 연구소(IDEA)에서 만든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또한 선정된 사회-민주적 특징 별 투표율 데이터도 제시한다. 주요 선거 후 실시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들 데이터는 선거에 관해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제적 연구 프로그램인 선거제도비교연구(CSE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 조사에서 나온 총 투표율 추정치는 CO4.1에 나오는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다를 수도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학 재학 이상으로 정의하며 낮은 사람은 중등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들로 정의한다.

높은 투표율은 한 국가의 정치 제도에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낮은 투표율은 해당 국가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치제도가 한정된 시민들의 의지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최근의 대부분의 의회 선거에서 투표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패널 A, CO4.1). 호주는 열명 중 아홉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한국은 두 명 중 한 명 미만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투표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이것이 국가별 투표율의 큰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호주와 벨기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터키와 스위스의 일부 지역에서 의회 선거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들 국가 중 상당 수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하락했다(패널B, CO4.2). 투표율이 매우 크게 하락한 국가들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한국, 미국이었다. OECD 회원국 중 4개국만이 투표율 하락 추세를 거슬렀는데 호주와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페인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은 낮은 응답자에 비해 투표율이 높았다(CO4.2). 그러나 OECD 평균값의 이면에는 상당한 편차가 숨어있다. 고학력 인구와 저학력 인구 간 투표율 격차는 미국과 헝가리, 폴란드에서 상당히 컸다. 그러나 한국과 아일랜드, 칠레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저학력 인구가 고학력 인구에 비해 약간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노인들은 청년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CO4.3). 특히 큰 차이를 보인 곳은 한국과 일본, 영국이었다. 대체로 이탈리아, 벨기에, 호주에서는 청년들이 노인들보다 투표율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노인들의 총선 투표율이 더 높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쳐, 노인들에게 혜택이 치우친 사회 프로그램 삭감을 도입하려는 정부 부처에 선거로 제재를 가할 위험도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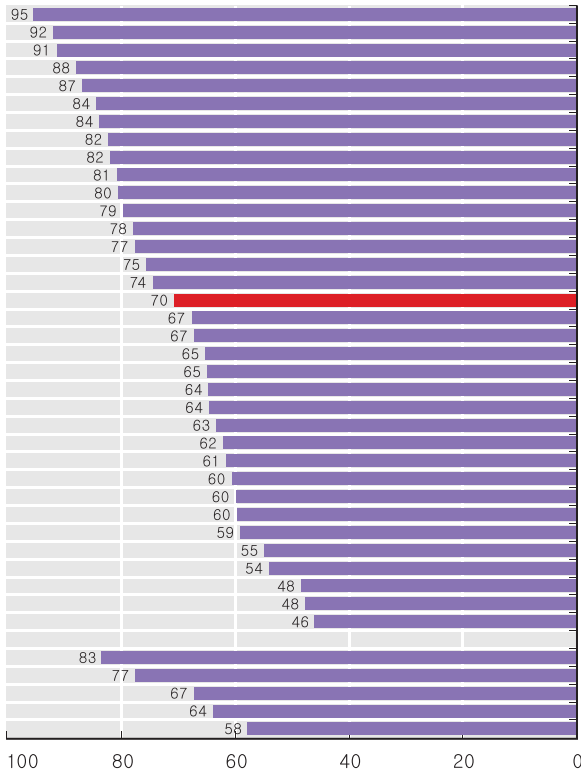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CO4.2: 저학력은 CSES의 카테고리 1-4, 전무(全無)부터 중등교육 미수료까지이며 고학력은 카테고리 7-8, 대학수준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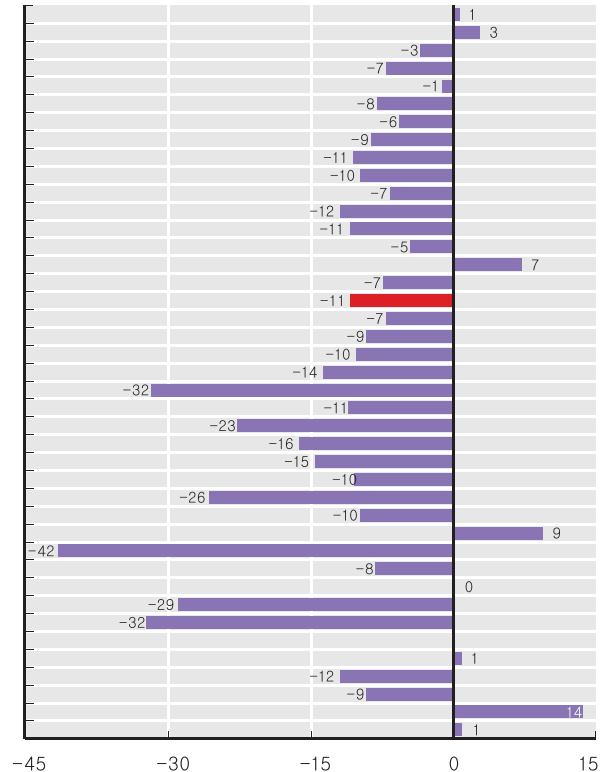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CO4.1.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패널 A. 가장 최근 선거의 투표율, 퍼센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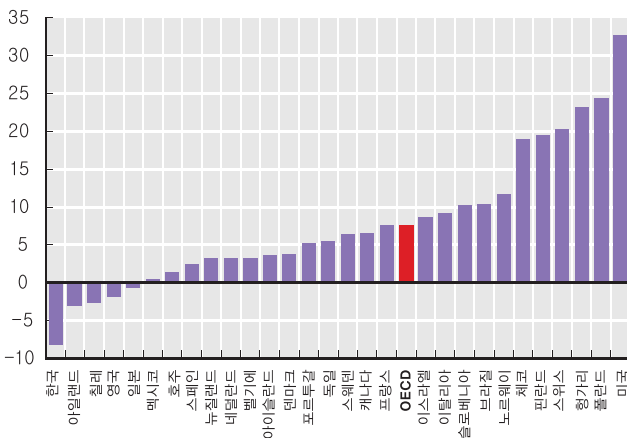


패널 B. 투표율 변화, 퍼센트 포인트 (1980년부터 가장 최근 선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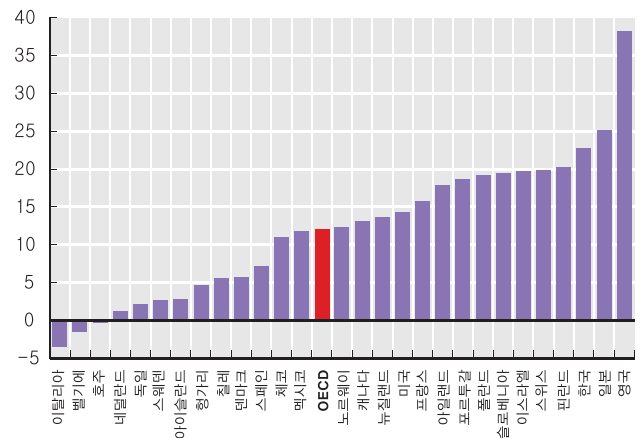
CO4.2. 고학력자의 투표율이 더 높다.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간 투표율 차이



CO4.3. 노인의 투표율이 더 높다.

55세 이상 인구나 16-35세 인구의 투표율 차이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nternational IDEA) (www.idea.int), Module 2 and 3 of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CSES) (www.cses.org).

정의 및 측정

관용성 자료는 갤럽세계조사를 출처로 하고 있다. 갤럽 조사는 동일한 설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140여개국에서 실시된다. 모든 샘플은,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샘플추출 및 비 샘플추출 상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샘플 크기는 국가에 따라 1,000에서 4,000까지 다양하다. 관용성지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혹은 지역이 소수민족, 이민자, 또는 동성애자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소수자 집단을 지역사회에서 수용하는 정도는 사회통합의 측정 가능한 측면이다. 여기에서는 소수민족, 이민자, 동성애자라는 세 집단에 대한 수용여부를 고려했다.

소수자 집단의 평균 지역사회 수용 정도에 있어서는 캐나다가 가장 관용적인 국가로 나타났다(패널A, CO5.1).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역시 비교적 관용적인 경향을 보였다. 북유럽 국가들은 OECD 국가들 중 상위권부터 평균수준까지 분포해 있었다. 관용성이 부족한 국가들은 남부, 동부유럽 국가들과 OECD 아시아 회원국들이 주로 해당되었다.

2008년 말 경제위기가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용성을 감소시켰다는 증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패널B, CO5.1).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 관용

성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탈리아, 터키, 멕시코에서 크게 감소하면서 평균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각 집단간 비교측면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관용성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높았고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성이 가장 낮았으며 이민자들에 대한 관용성은 그 중간이었다(CO5.2). 이러한 패턴은 국가별로 거의 예외가 없었다. 예외라면 네덜란드와 스페인, 벨기에에서 사회가 소수민족과 이민자들보다 동성애자들에게 좀더 관용적인 것으로 본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다. 여러 집단이 어울려 사는 국가들은 세 집단 모두에게 관용적인 경향이 있었다. 세 관용성 지표의 국가별 상관관계는 모두 0.83을 초과했다.

국민 소득은 지역사회 관용성 인식과 강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CO5.3). 그러나 관용성과 소득 불평등성 간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주목할만한 특징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른 갤럽 문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무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관용성이 낮은 사회의 특징이기도 했는데 관용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민감한 질문임을 보여준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CO5.1: 스위스는 2006,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2008,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남아공은 2009, 변화의 경우 캐나다는 2005/10, 노르웨이는 2006/08, 에스토니아와 남아공은 2006/09,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핀란드, 포르투갈, 칠레,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한국, 러시아 연방, 인도네시아는 299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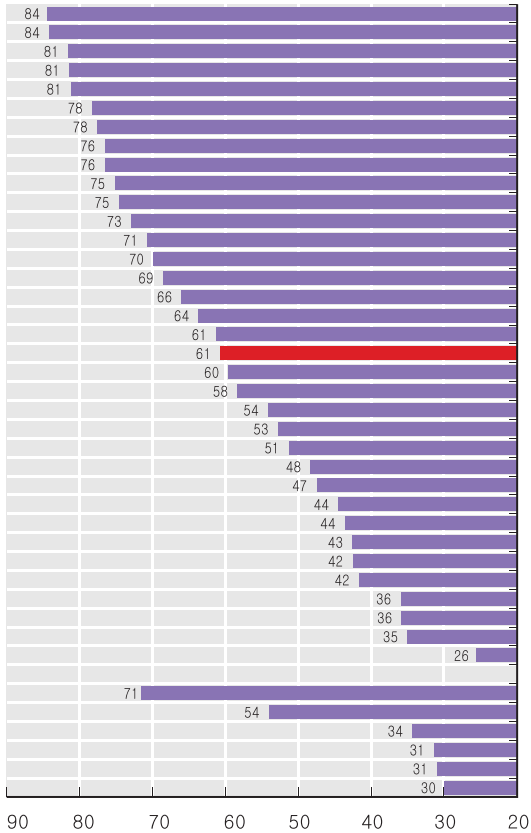
그림 CO5.2: 스위스는 2006,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2008,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남아공은 2009.

그림 CO5.3: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용성: 스위스는 2006,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2008.

이스라엘 관련 자료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CO5.1.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용성은 영어권국가와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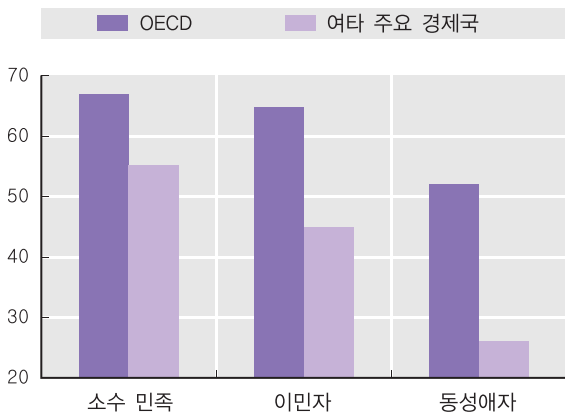
패널 A.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지역사회 관용성 지수, 퍼센트, 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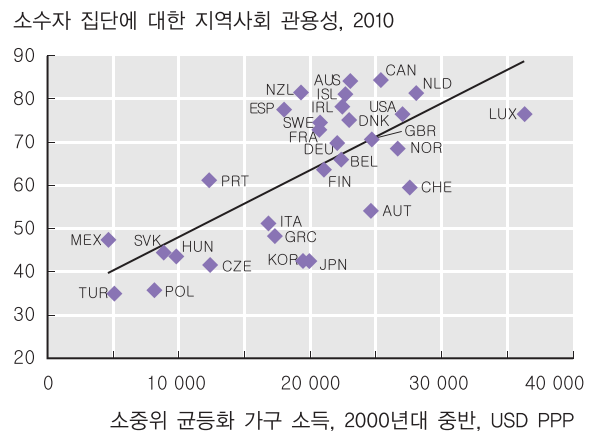
패널 B. 2007년과 2010년 사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용성 변화 (% 포인트)



CO5.2. OECD 지역에서 관용성은 소수민족에게 가장 높았고 동성애자에게 가장 낮았다.



CO5.3. 부유한 국가일수록 관용적이었다.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모여 노력하는 포럼이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 경제,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 위원회도 OECD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사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한 눈에 보는 사회 2011

OECD 사회 지표

이번에 발간된 한 눈에 보는 사회 제 6판은 몇 가지 지표는 업데이트했으며, 새로운 지표 몇 가지는 추가되었고, 무급노동에 대한 특별 챕터를 따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규 OECD 회원국인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연방, 남아공 자료도 가능한 경우 포함되었다.

제1장. 요리와 돌봄, 만들기과 수리하기: 세계 무급노동의 현황

제2장. OECD 사회적 지표 해석

제3장. 한 눈에 보는 사회: 개요

제4장. 일반 지표

- 가구소득
- 출산율
- 이민자
- 가족구성
- 노인 부양비율

제5장. 자활 지표

- 고용
- 실업
- 교육성과
- 연금수급가능기간
- 교육비 지출

제6장. 형평성 지표

- 소득불평등
- 빈곤
- 생계곤란
- 저소득탈피에 필요한 소득
- 공공사회지출

제7장. 보건 지표

- 기대수명
- 영아사망률
- 긍정적/부정적 경험
- 수질/공기질
- 보건지출

제8장. 사회통합지표

- 타인에 대한 신뢰
-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 친/반사회적 행동
- 투표율
- 수용성

www.oecd.org/els/social/indicators

본 출판물의 영문 원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 dx.doi.org/10.1787/soc_glance-2011-en](http://dx.doi.org/10.1787/soc_glance-2011-en)

본 간행물은 모든 OECD 단행본, 연속간행물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OECD 전자도서관에 게재됩니다.

Visit www.oecd-ilibrary.org